

제429회 국회  
(정기회)

# 정무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5일(금)

장 소 정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자(주병기) 인사청문요청안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자(주병기)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자(주병기) 인사청문요청안 ..... 1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자(주병기) 인사청문회 ..... 1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윤한홍 의사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잠깐만. 상정하고 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자(주병기) 인사청문요청안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자(주병기) 인사청문회

(10시05분)

○위원장 윤한홍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법 제65조의2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주병기 후보자에 대한 공직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공정거래 관련 정책 현안들에 대한 입장과 문제의 해결 의지 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내실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와 후보자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는 후보자의 마무리발언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노트북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로부터……

○**강민국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먼저 하고 하겠습니까?

○**강민국 위원** 예, 다른 내용이라서요.

○**위원장 윤한홍** 강민국 간사님 의사진행 3분 드리세요.

○**강민국 위원** 강민국 간사입니다.

지난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본 간사는 당시 논란이 된 금융위원회 해체와 관련해서 이억원 후보자가 철거반장으로, 10일짜리 장관직을 위한 인사청문회는 우리 국민들에게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며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금융위원회 기능 조정의 수준이라 말씀을 하셨고 향후 야당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의견을 조율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당은 금융위원회 존치를 전제로 인사청문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와 반대되는 내용이 발표된다면 그러한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다음 날 정부 여당은 금융위원회 해체를 공식화했습니다. 현재 이 상황은 국회와 국민을 너무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사안으로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체계는 지난 17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그동안 금융은 더욱 전문화됐고 고도화되면서 금융과 산업의 융합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한 신중한 고민도 없이 기재부의 예산권을 분리하면서 대신 국내 금융 기능을 기재부에 넘겨준다는 이런 식의 논의가 과연 금융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매우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시중에는 금융위는 해체하고 금융감독원을 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게 소보원장을 하고 싶어 하는 특정인의 강력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소문이 사실이라면 위인설관을 위해 금융의 미래를 아랑곳하지 않는 정부조직개편이야말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정부조직 개편안 관련해서 신속처리안건까지 검토한다는 것은 이것은 역대 무능정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행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행안위와 관련된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합의 처리됐고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물관리 일원화 관련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국회에서 수차례 협의되어서 합의 처리된 겁니다. 그런데 정부조직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패스트트랙을 띄운다는 것은 스스로 무능하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은 이억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겉으로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뒤로는 금융위원회 해체를, 이런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표할 수밖에 없고 국민을 무시하고 또 밀실·졸속 금융위원회 해체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상혁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는데요.

○위원장 윤한홍 아니, 인사청문회 관련된 것은 선서하고 하시고……

○민병덕 위원 인사청문회 관련된 게 아니고……

○박상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있어서……

○위원장 윤한홍 하세요. 그러면 누가 하시려고요? 두 분 중에 한 분만 하세요.

○민병덕 위원 저는 다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아니, 인사청문회 관련된 것은 선서하고 하시고……

○민병덕 위원 청문회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박상혁 위원님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3분 드리세요.

○박상혁 위원 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강민국 간사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언론을 위해서라도, 기록을 위해서라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아직 정부조직법에 대한 최종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인 내용은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바로 보더라도 금융감독위원회는 존치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체한다라는 말씀은 사실과 다르고. 또한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는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해체되고 아예 없어진다 이런 것은 분명하게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또한 이 정부조직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검토한다, 이건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정부조직법이 발의가 되면 행안위에서 토론하고 그리고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저희 당이나 정부에서 검토되지 않았던 신속처리안건 검토는 어떤, 아직 발의도 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 검토한다 운운하는 것은 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요.

오히려 저희들이 신속처리안건을 검토하는 것은 우리 정부위가 그동안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 처리가 미온적이라든지 민주유공자법과 같이 국민적인 합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신속처리안건으로 검토해서 이런 부분을, 신속처리안건은 말 그대로 일정한 기간 내에 토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해태한 부분에 대해서 다 책임이 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인사청문회가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로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3분 드리세요.

○민병덕 위원 정무위 운영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MBK 청문회 도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보위에서 134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8월 30일에 이번에는 롯데카드에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다. 그런데 롯데카드는 2019년에 롯데그룹이 MBK에 매각한 회사입니다. 결국은 롯데카드의 기업경영 전반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회사도 MBK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홈플러스를 인수해서 먹튀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의심하고 있는 곳이 바로 MBK입니다. 더 이상 MBK의 이런 부도덕한 경영에 대해서 저희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국감이 지나면 11월이고 홈플러스 쪽에서는 11월에 매장을 추가 폐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11월이면 MBK에서 먹튀가 종결될 겁니다. 9월 달에 청문회를 하지 않으면 MBK에 대해서 저희 정무위는 입으로는 청문회 한다 한다 해 놓고 결국은 1년 넘게 안 한 그런 정무위가 될 겁니다.

저는 오늘 반드시 위원장님과 두 분 간사님께서 청문회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밝혀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 위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

○**위원장 윤한홍** 잠깐만요.

오늘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제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가 진행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논쟁할 사항은 아니에요.

○**민병덕 위원** 합의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한홍**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민국 간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강민국 위원**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하십시오.

1분만 딱 드리세요.

○**강민국 위원** 먼저 박상혁 위원님이 신속처리안건을, 정무위 소관 금융위원회 해체안에 대해서 안 하신다는 말씀에 절대적인 믿음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금 민병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MBK 청문회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MBK뿐만 아니고 사실 민생 관련해서 지금 SK텔레콤도 마찬가지입니다.

SK텔레콤도 2300만 명 정도의 정보가 유출되고 사실은 여러 가지 CDR, 즉 통화 상세 기록까지 유출됐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엄청난 사항이지요. 그래서 MBK와 SK에 관한 청문회에 관해서 오늘 강준현 간사님과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요 인사청문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병기 후보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9월 5일

공직후보자 주병기

○**위원장 윤한홍** 가서 앉으세요.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로 지명받은 주병기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인사청문회 준비로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님들과 국민들께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도록 청문회 전 과정에 걸쳐 한 분한 분의 소중한 질문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며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 시스템과 개별 기업의 소유 및 의사결정 구조의 선진화는 아직도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소수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시장 시스템의 혁신역량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역사를 돌아보면 시장 시스템은 혁신을 거듭하며 선진화되었습니다. 노동기본권과 반독점법의 도입,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 지적재산권 보호 등 시스템 개혁이 지속되어 유럽과 북미의 선진국들의 오늘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선발 선진국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양질의 노동력과 인적자원, 사람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시장 시스템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 편취를 위해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단하여 창의적인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먼저 혁신적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생태계를 만들도록 힘쓰겠습니다. 기술 탈취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해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적 약자가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기업집단의 공정한 규율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주력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 내 사익 편취, 부당 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습니다.

셋째,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플랫폼 입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서민과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특히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소비자의 피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보장하여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경제적 강자와 약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가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자연적 자유’입니다. 이런 자연적 자유의 체계 안에서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등, 완전한 정의가 실현될 때 국가와 경제는 번영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공정위의 사명은 이러한 자연적 자유의 체계를 현실에 구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선진국이 한 세기에 걸쳐 이룩했던 자연적 자유의 체계와 선진적 시장 시스템을 짧은 기간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하기에 대한민국 공정위가 부여받은 역사적 사명의 부피와 무게는 거대합니다. 공정위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발전을 앞당기는 힘을 키우는 것이고 공정위의 힘이 바로 국민 개개인의 힘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인력과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나라 공정거래 정책을 책임지는 공정거래위원장후보로 지명되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간 경제학자로서 국가성장과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해 오랜 기간 고민하고 연구했던 경험을 토대로 국민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과 함께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소통과 협업에 노력하는 공정거래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5분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있는데요.

○위원장 윤한홍 자료 요구하실 분 계세요?

이현승 위원님, 자료 요구 1분.

○李憲昇 위원 우리 의원실에서 후보자의 주식계좌 매매거래내역을 요구했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요청서상에 기재된 증권계좌번호에 대해서 거래내역을 요구했는데 거래소에서는 후보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 가지고 제출할 수 없다는 회신이 왔는데 후보자께서 왜 증권거래내역을 공개하지 않으시는지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데, 후보자께서 제가 보니까 상당한 양의 주식거래를 했고 아마 후보자로 지명 내지는 지정이 되고 나서 거래를 좀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봐야 질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후보에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후보자 배우자 명의의 세종시 주택 거래신고서, 매입대금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입주증 등 언제 매입해서 잔금을 치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주했는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더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알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리고 자녀와 관련된 자료가 하나도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언제 어디에 어떻게 입학하고 졸업했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 관련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한홍** 또 의사진행발언 없으시지요?

그러면 후보자께서 이현승 위원님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자료 같습니다. 오전 중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수석전문위원께서 좀 챙기세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위원** 추경호입니다.

후보자님, 그동안 학계에서 활동을 하시고 지금 후보자 지명되기 직전까지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 거지요?

공정거래위원장이 한마디로 어떤 자리입니까? 시장의 공정성, 준법질서 확립해야 되고 시장에서는 또 속칭 경제 검찰이라고 칭해지는 자리입니다.

아까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후보자께서 많이 거론이 됐지만 우선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세금 체납, 과태료 체납으로 열다섯 차례의 재산압류가 되고 그다음에 차량 등에 대해서 열네 차례 압류가 됐지요. 인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맞습니다.

○**추경호 위원** 그리고 또 재산세 미납으로 아파트 압류도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미납이 참 가관인데 종합소득세, 재산세 등 체납이 계속 있고 7년간 다섯 차례 종합소득세 납부 시한을 넘겨서 연체를 합니다. 그리고 후보자로 지명되기 보름 전 종합소득세 신고를 비롯해 지명 이틀 뒤에 다시 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늦장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 연봉이 1억 안팎이 되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추경호 위원** 25억 재산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세금 문제를 지적하니 소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납부를 부랴부랴 합니다. 입각세 내신 겁니까? 왜 그동안 이렇게, 보통 평균인이 어떻게 하다 보면 실수로 한두 번 체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통법규 위반 어쩌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열네 차례 속도 위반하고 버스전용차선 위반, 스쿨존 위반 등등 교통법규뿐만 아니고 세금 체납을 이렇

게 상습적으로 했다, 이런 분이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대개 청문회에 와서 ‘죄송하다’ 이렇게 하고 하루 지나고 나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 이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장을 맡겨서 되느냐.

언론에서도 세금 체납을 우습게 아는 그런 장관후보자들 국정 맡을 자격이 없다, 청문회 전 결단을 해라, 상습 체납 후보자 그리고 이렇게 세금 체납을 한 사람들은 장관이 아니라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한번 해명을 해 보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제가 해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종합소득세라든지 과태료, 자동차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자연 납부한 것은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저는 법과 국민의 의무를 다한다는 원칙으로 살아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한 번도 납세의무를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어떤 판단을 했던 적은 없고요. 자연 납부는 실수였고 자연된 것이 확인되면 항상 바로 납부했습니다. 공직 임명된 후에 납부한 부분은.....

○**추경호 위원** 후보자님, 그런데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한두 번 있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십여 차례가 넘게 체납을 한다, 상식적으로 이것이 서울대학교 교수님 출신으로 국민들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세금은 이렇게 체납을 하면서 본인이 함께하고자 하는 진보 시민단체에 대한 기부는 또 계속 따박따박 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세수 부족으로 법인세도 올리겠다, 교육세도 올리겠다, 증권거래세도 올리겠다 하는데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는 이렇게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는데 이게 국정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면 정부를 위해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감히 후보자 사퇴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한 줌의 밀알이 되겠다 그런 자세로 사퇴할 용의 없으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앞으로 자연 납부가 없도록 훨씬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범계 위원** 한 바퀴 다 돌고 사퇴 얘기를 해야지 시작하자마자 사퇴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李憲昇 위원** 사퇴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똑같지. 내용이 똑같은데 한 바퀴 돌고 할 게 뭐 있어. 처음부터 바로 하는 것이지.

(웃음소리)

○**위원장 윤한홍** 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웃으시는데 웃으실 일은 아니에요. 웃으실 일 아니고 굉장히 진중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위원장님께서 명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李憲昇 위원 위원장 아니고 후보.

○위원장 윤한홍 후보, 아직까지 후보지요.

이어서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만 위원 후보자님, 먼저 지명 축하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감사합니다.

○김용만 위원 이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지요. 거기의 핵심이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소비자랑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거래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티메프 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e커머스 업계가 혼들렸고 이번에는 또 홈플러스 사태 때문에 대형마트 업계도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유통업계에 충격이 가해지고 있어 가지고 계속 불안정해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매출 규모 국내 2위지요. 홈플러스가 지난 2월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고 이 회생계획안이 제출이 되기도 전에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가지고 참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데 또 최근에는 전국의 15개 점포를 순차적으로 폐업을 하겠다고 방침까지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금융위원장후보자님에 대해서 우리 정무위원님들도 우려를 보여 주시면서 우리가 책임 있게 행동을 빠르게 해야 된다 하는데 공정위도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 많습니다.

후보자님,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서 공정위 긴급점검 조치 내용 충분히 파악하고 오셨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어느 정도 파악을 했고요. 이 사건은 외국계 사모펀드의 좀 무책임한 경험이 얼마나 소비자나 관련 업계의 협력업체들에 피해를 줄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사례였다고 봅니다.

○김용만 위원 그리고 홈플러스가 또 다른 경쟁사들보다 정산 주기가 길지요. 60일이다 보니까 회생 신청하는 과정에서 일부 납품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한 사태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3월에 한기정 전 위원장님이 우리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공정위가 긴급점검에 나섰고 일별 지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미지급 시 즉시 지급명령을 조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한 6개월 동안의 진척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홈플러스가 대금정산 잘해 왔는지. 그런데 그 요구하는 자료가 납품 입점업체 대금지급 현황인데 이것을 공정위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거부한 사유가 더 가관이에요. ‘홈플러스로부터 국회 언론 등 외부기관 비공개를 조건으로 해당 자료를 제출받고 있어서 국회에 제출이 곤란합니다’ 이게 공정위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꾹 참고 ‘도대체 무슨 협약이나 문서적인 합의가 있었냐?’ 하고 물었더니 ‘구두 합의한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공정위가 언제부터 이렇게 유통사업자랑 국회에 자료제출 거부를 전제로 일을 했는지, 혹시 이런 사례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저는 들어 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김용만 위원** 이것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게 얼마나 공정위가 전 정권에서 참 오만하고 방만하게 운영이 됐는지 보여 주는 사례인 것 같은데 국회가 정당한 감시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꼭 제출되어야 돼서 만약에 후보자님께서 취임을 하시면 이것 바로잡아 주셔야 될 것 같고 자료도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최대한 국회와 협의해서 이 사태가 많은 중소 납품업체나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피해로 이어지는 것도 이어지는 거지만 이건 정당한 국회의 감시권한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다시 원복을 시켜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알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리고 점검을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지급한 건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지급명령 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대형마트 하나가 문을 닫으면 반경 2km 상권 매출이 5~8% 감소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15개를 문을 닫게끔 한다니까 지역상권에서 받을 부작용 같은 것들도 필히 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정산 주기 문제가 있어서 이걸 단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학계하고 유통업계 일부 관계자들이 부작용 가능성은 제기하고 있어요. 정산 주기를 일률적으로 단축하면 청약철회 기한, 즉 반품 기한 같은 게 주는 부작용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같이 검토하고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언제나 제도를 바꿀 때는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도를 바꿀 때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무엇이고 그 목표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 우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정산 주기가 너무 긴 것은 분명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줄이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되고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용만 위원** 결국은 홈플러스라는 게 저는 민생회복의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산 주기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지급을 받지 못한 업체나 아니면 폐점을 하게 될 지역상권 같은 것도 좀 잘챙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대금 정산기한 도과한 그런 불공정행위가 최소화되도록 취임하게 되면 면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장식 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주병기 후보님, 지명 축하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면)

21년도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힘 있는 기업이 과도하게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새로운 기업이나 하청기업·노동자는 피해를 입는다. 특히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노동시장이 취약하다’라는 말씀 하셨고요.

이 인터뷰 말미에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플랫폼 기업들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규제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지위를 강화하고 단체협상권을 보장해 주는 입법도 필요하다’. 이게 온플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법적 규제장치가 있으려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온플법 제정하겠습니다라고 경제공약 내거셨어요. 그런데 이게 살짝 기류가 변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출한 국정운영계획……

다음 PPT 보여 주셔야 됩니다.

국정계획 내용을 쭉 보면 온플법 제정과 같은 입법사항이 아니라 행정조치나 기존 법안 개정해서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바뀌어요.

그리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님,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하겠다는 법안 224건 발표했는데 온플법은 없고 갑을관계공정화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온플법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후보자께서도 미국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독자의 온라인플랫폼법 나아가기 어렵다. 현행법 체계하에서 공정위가 가진 행정적 권한 최대한 활용하겠다’ 해서 행정과 의지를 표명하셨거든요.

패권국가 미국 반대 때문에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데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이 지난 7월 24일 날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서신 보내 온 것 보면 국적 차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구글·애플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라고 국적 차별하지 말라는 건데 실제로 국적 차별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적 차별하지 않으려면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한기정 위원장 시절에 온플법과 관련해서 제시한 조건 사전지정제로, 즉 사건처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사전지정제를 통해서 규제 대상으로 삼겠다라고 하는데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만 들어가고 배민, 쿠팡은 빠져요. 그다음에 중국의 알테쉬라고 하는 알리, 테무, 쉬인도 빠집니다.

그러면 국적 차별하지 말고요. 그런 소리 듣지 말고, 저는 국적 차별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제가 제출했던 법안이나 이런 거 보면 배민, 쿠팡, 알테쉬까지 다 사전지정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감시할 수 있고 사전지정제를 통해서 불공정 처리할 수 있어요.

미국이 만약 국적 차별하지 말라고 한다면 사실은 주권국가로서 그런 얘기 듣는 것 자체가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현실을 고려하여 국적 차별하지 말라 그러면 알테쉬까지 다 하겠다, 배민, 쿠팡까지 다 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미국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미국을 평계 삼는 게 아닌가. 하필이면 배민, 쿠팡만 빠진 기준을 공정거래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의심스럽고 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지정제를 통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제가 사전지정제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데요.

PPT 앞쪽을 보여 주세요.

여기 보시면 구글이 유튜브프리미엄 상품 판매하면서 유튜브뮤직 끼워서 판매하고 난 후에 중소업체들 점유율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지니뮤직, 폴로, 바이브, 벡스. 그런데 이거 얘기하는데 심사보고서 작성하기까지 1년 6개월 걸렸습니다. 그사이에 국내 음원시장 1위는 멜론에서 유튜브뮤직으로 바뀌지요. 이걸 보면 사전지정제 없이 도대체 어떻게 독점 플랫폼 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어찌 보면 법안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하나, 사전지정제 반드시 필요하다. 안 그러면 이거 유튜브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사후약방문 되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국적 차별하지 말라. 좋다. 자존심 상하지만 그렇다면 알테쉬, 배민, 쿠팡까지 다 하겠다라는 기준으로 가시면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위원님께서 주신 아주 좋은 자료 그리고 위원님의 주장 모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존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는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례에 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통상 협상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플랫폼법과 관련해서 독과점 규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유럽에도 보이고 있고 일본에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의 FTC 수장이 연설한 내용도 우리나라에 와서 강경하게 사전 규제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정부 하에서 우리가 통상 협상의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사실 플랫폼법도 중요하지만 지금 한국 경제에서는 통상 협상이 너무나 중요한 이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행정부에서 과감하게 독과점 규제에 관한 플랫폼법을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단 갑을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저는 통상 이슈와 독립적으로 우리 한국적인 특성이 많이, 한국 경제의 갑을관계의 문제는 아주 오래된 문제고 그것이 최근에 플랫폼 경제에까지 전염되어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갑을관계 개선의 측면에서는 저희가 법안 개선까지도 고려하는, 그래서 의회와 앞으로 소통하면서 법안 개정과 관련해서도 협조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정 위원** 후보자님 먼저 내정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혹시 프로젝트 허그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김현정 위원** 이게 앱 개발자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이외에 앱 배포 플랫폼을 이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앱 개발자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플레이스토어 이외의 앱 배포 플랫폼을 배제하는 걸 요구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담합행위 사건을 일컫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구글이 엔씨소프트나 넷마블 같은 우리나라 대표 게임사들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구글 외의 다른 앱 마켓에는 출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허리를 부러트리는 거의 1조 원 규모의 검은 뒷거래 의혹입니다.

관련해서 국내 시민단체에서 작년 11월에 에픽게임즈가 구글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공개된 미국 법정 내부문서를 토대로 해서, 거기 나오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공정위에다가 리베이트라든지 광고 입찰가 담합, 수입과 지원 등을 적시해서 공정위에 제소한 바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들어 본 것 같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 사건은 해외 빅테크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거든요. 이거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신속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파악해서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2021년도에 저희가 세계 최초로 소위 구글 독점 방지법이라는 인앱 결제 방지법 제정한 거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김현정 위원** 그런데 제정 이후에도 구글과 애플이 외부 결제를 허용했어요. 허용했으면서 또 자기네의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26에서 27%를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디지털 통행세라는 이름으로 해외 빅테크에서, 소위 말해서 착취를 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도 미국 법원에서는 애플이 제3자 결제로 연결된 외부 링크에 대해서 27%의 별도 수수료를 부과한 것을 금지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대로 지금 부과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를 덧붙이면 더 큰 문제는 여전히 우리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에다가 앱을 설치하려면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라든지 또는 애플의 앱스토어를 거쳐야만 해요. 이 독점적인 게이트 키퍼 역할이 깨지지 않는 이상에는 빅테크는 스스로 명칭을 바꾸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편법적인 방식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이익을 독점할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PT 한번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면)

그런데 다른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세계 주요국들은 이런 앱 마켓 경쟁 촉진을 위해서 제3자 앱 마켓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의 정책과 규제를 지금 정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인앱결제 같은 방식뿐만 아니라 윤용체계, 단말기에서 애플이나 구글 이외의 외부 앱을 설치하고 또 유통할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세계적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혀 이런 거와 관련된 게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 8월에 전기통신사업법을 발의한 바가 있는데 공정위 또한 이런 앱 마켓 시장의 경쟁 제한 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적극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리나라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공정화법이나 반독점 규제법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데 좀 늦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3년 전쯤에 이 논의가 급격하게 되어서 그때 도입되었더라면 통상협상에서 그래도 지금보다는 덜 어려울 수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앱 결제

와 관련된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다른 나라의 규제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그런 규제를 도입하자는 데 저는 동감하고요.

○**김현정 위원** 후보자님 잠깐, 제가 시간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고 같이 답변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좋습니다.

○**김현정 위원** 두 번째 질문인데요. 22년 12월에 화물연대 파업을 사업자 단체 담합으로 규정하고 공정위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어요. 이 사실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래서 담합이라고 고발까지 했습니다, 검찰에. 그런데 작년 5월에 법원은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며 파업은 정당한 단체행동이다라고 무죄를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관련해 가지고 공정위에서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해야 될 공정거래법에 대해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헌법상 권리인 단결권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썼다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맞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반복되는 잘못된 법 집행을 막고 또 해석의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원칙이 서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와 존경하는 신장식 의원님 그리고 한창민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노무제공자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는데요.

위원장님으로 임명되신다면, 아까도 인사말에서 노동기본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셨잖아요? 이 개정안이 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협력을 다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까 못 하신 답변하고 같이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래서 아까 독과점 규제 관련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그런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장의 다른 참여자들을 착취하는 행위는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공통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한 나라가 지금 현재와 같은 통상 협상의 시점에서 밀고 나가기는 부담이 되는 사안이지만 저는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어제도……

○**위원장 윤한홍**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그래서 OECD라든지 국제기구를 통해서, 글로벌 사회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통해서 거버넌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이 확대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협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이어서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 후보님, 티메프 사태 때와 같이 이커머스라든지 또 PG사의 여러 가지 운영상 고객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몇 가지 법안을 내놨어요.

민주당 의원님들 주도로 온라인플랫폼법을 내놨고 또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일부 민주당 의원님들이 전자금융거래법 그다음에 대규모 유통업법을 내놨는데 문제는 티메프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만 1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안을 하나도 통과를 못 시켰어요. 제2의 티메프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만 본다면 국회가 너무 답보 상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현재 온플법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미국 무역대표부가 비관세 장벽이라고 지목을 했어요. 하원 법사위하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 말을 인용한다면 ‘이 법은 혁신 저해, 연구개발 위축 등 미국 기업을 차별화할 위협이 있다. 또 중국 기업은 실질적으로 제외되는 등 한미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공산당에 유리하다’ 이런 발언, 좀 오버하는 발언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온플법을 강행하면 추가적인 관세 부과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온플법 강행은 어렵기도 하고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후보님은 태도가 이중적인 것 같아요. 공정거래위원장 지명 전에는 ‘구글 정밀지도 반출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온플법 제정은 강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니까 온플법은 아마 통상 마찰 등을 우려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입장은 후자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후자입니다.

○김상훈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국회에 있다고 보는데 얼마 전에 우리 정무위에서 여야 위원님들 합의로 전자금융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게 법사위에 넘어가서 이익단체인 펀테크산업협회의 의견서 한 장으로 보류가 됐습니다. 티메프 사태로 다시 일어날지도 모를, 우리 국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이익단체의 의견서 하나로 법사위에서 계류됐다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국회로 봐서는 상당히 지양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제2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의 복안을 갖고 계시는 게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 봐 주시지요.

우선 제 입장은 말씀드린다면, 온플법 강행이 어렵다면 전자금융법과 대규모유통법은 통상마찰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법안으로 합의 처리하고 그 외의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갑을관계 조정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후속적으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 1년이 지나고 나서도 아무런 입법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국민들을 대면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양상을 좀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후보님 나름의 대안이 있다면 한번 밝혀 주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티메프 사태 관련해서 입점 업체라든지 관련 업체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그런 일을 방지할 수 있

도록 여러 가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전금법만 통과시킬 때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입법 공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좋습니다. 오늘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테니까 제가 하나만 또 제 의문을 제기할게요. 의문이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김상훈 위원** 구글, 애플, 알리, 테무 이런 외국 기업들은 판매거래 금액을 노출시키지 않아요. 자료를 입수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만 관련 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차후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렇습니다. 그것 중요한 부분이고요. 위원님 의견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플랫폼법 같은 경우는 독과점 규제에 관한 법이 있고요 그리고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법, 두 가지 체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을관계 개선 관련된 부분은 통상 이슈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과감하게, 티페프 사태 이런 걸 방지하려면 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독과점 규제에 관한 법은 통상 이슈와 관련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은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방금 전금법 관련해서 답변을 하시다가 말았는데 들으실 겁니까?

전금법 관련해서 답변을 하시다가 말았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위원장 윤한홍** 그 부분……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전금법만 통과시켰을 때는 지금 유통업과 관련된 상거래에 대해서 입법 공백이 생겨서 입점 업체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덕 위원** 후보자님, 모두발언 듣고 저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감사합니다.

○**민병덕 위원** 공정거래위원회지만 우리가 가장 주요하게 하는 법의 풀네임이 어떻게 되지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이잖아요. 공정거래를 위한 법이잖아요. 독점 규제를 해야지 공정거래가 되는 것이지 독점 규제 없이 공정거래만은 안 된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민병덕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이라든지 대기업의 사익편취 근절이라든지 계열사 부당지원 근절,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밑의 단에서 갑을관계가 공정하게 될 수는 없다. 가장 슈퍼갑하고 갑이 공정하게 되는 그 속에서 낙수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동의하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민병덕 위원 미국에서 반독점법이 최초로 생겼어요. 무슨 법인지 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셔먼법.

○민병덕 위원 셔먼법입니다. 셔먼법에 의해서 록펠러의 거대 석유기업인 스탠더드 오일이 강제 분할됐고 철강회사 카네기 스틸이 강제 분할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민병덕 위원 그리고 현재도 미국 정부와 의회는 아마존, 구글, 페타, 자국 IT 기업의 독점을 규제하기 위해서 소송도 하고 있고 입법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민병덕 위원 본인 나라에서 중소기업과 공정거래를 위해서 독점을 규제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서에 통상 이슈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통상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얘기를 해야 되고 외교부장관은 외교부장관의 얘기를 해야 되고 산자부장관은 산자부장관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모두 다 외교부장관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공정거래위원장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외교부에다 드리고 산자부에다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자본주의의 선진적 시스템을 만들어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존경하고 따라가려고 한다, 이런 지점들을 가지고 설득 요소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공정위의 입장에서 독과점 규제에 관한 법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정당한 논리를 충분히 마련하겠습니다.

○민병덕 위원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피자 배달하시는 분이 저희 의원실에 보내온 매출전표인데요. 본사가 두려워서 본사가 어디인지는 안 적었습니다. 그런데 7900원짜리 음식을 주문받았을 때 결국 남은 금액이 279원입니다. 하나도 남는 게 없다는 소리입니다.

최근에 신림동에서 사건 난 것 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민병덕 위원 피자먹다라는 가게에서 생긴 내용이에요. 본사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사 지정 업체의 인테리어 하자보수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 인테리어도 본사가 지정한 데에서 했는데 거기서 하자보수를 안 해 준다 이런 갈등이 있었고 또 하나는 배달플랫폼도 너무 비싼데 가맹점 수익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 힘들다.

세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 1인세트 메뉴를 만들라고 하면서 본사에서 몇 번이나 찾아와서 강요했다. 그런데 이 1인세트 메뉴를 만들면 인건비도 못 건지고 오히려 적자가 나는 메뉴라 고통스러워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들이 뭉치고 뭉쳐서 세 명이 돌아가시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피자먹다라는 이 사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지금 그 사건을 보면서 저도 입점 업주의 입장에서 생각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커질 때 그

런 흥악한 사건으로 전개될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민병덕 위원** 우리가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을 이미 통과시켰다면 그래서 을들이 모여서 협상할 수 있었다면 이 일이 발생했겠는가. 인테리어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아니면 우리가 선정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겠다라든지, 1인세트 메뉴 팔아도 팔아도 손해가 나는 것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협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윤한홍 위원장, 강민국 간사와 사회교대)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렇습니다. 가맹점주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균형 있는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장치를 의회와 공정위가 같이 협력해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병덕 위원** 아까 말씀 주신 을들의 협상력을 길러서 그 사업 분야에서 공정한 분배를 하게 하는 그래서 갑도 좋고 을도 좋은 그런 사회, 자연적 자유 이런 상태를 만드는데 법이 빨리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강민국** 민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후보자의 오늘 모두발언에 대해서 많이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연적 자유 이런 부분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혜택, 여러 가지 공정위에서 조치들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얘기들은 오후에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드리고.

먼저 한 가지 요새…… 조금 전의 갑을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앱 결제로 인한 문제점들 이런 부분은 동료 위원들께서 계속 질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고전적인 문제기는 한데 가맹본부 문제 하나 먼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PPT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언론에 얼마 전에 보도가 된 회사입니다. 명륜진사갈비라는, 명륜당이라는 회사인데 굉장히 특수한 형태의 가맹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륜당이라는 게 가맹사업본부인데, 가맹사업자가 있고 여기에 대부업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즉 가맹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창업자금 대출을 10% 정도의 고금리로 하는데 이 대부업체는 여러 가지 특수관계, 가맹사업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금을 대출받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가맹점은 계약을 맺을 때 재료비에다가 패키지당 원리금을 1만~1만 5000원 정도를 추가 납부하고 이것을 대부업체에다가 돈을 갚는 것이 아니라 본사에 갚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구성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에서—대부업체가 송파구에 등록한 대부업체인데—이 업체들에 과잉대부

금지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서울시의 민생사법경찰국에 수사도 의뢰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공정위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보고를 받거나 한 경우가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아직 보고를 못 받았고요.

○**박상혁 위원** 아직 후보자 신분이니까 못 받으셨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 올해 국정감사 때, 이 이후에도 여러 가지 관련된 제보들도 있고 내용이 있어서, 국정감사 때 할 거라서 미리 예고도 하고 조사를 의뢰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건데요. 연혁을 살펴보니까 이 명륜진사갈비가 가맹사업자로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공정위에서 조사도 받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경고나 무혐의 처분에,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후보자께서 되시면 다시 한번 조사를 직권으로 하고 이렇게 가맹본부가 고리대금업까지 하는, 대부업까지 하는 문제는 좀 심각하다, 이렇게 한번 틈새를 열어 두면 여러 차례 변종된 형태로 나아갈 수 있고 진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또 이 업체가 굉장히 사업의 영역을, 프랜차이즈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권으로 조사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감사합니다.

○**박상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이 혹시 후보자님, 스드메라는 말 들어 보셨어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들어 봤습니다.

○**박상혁 위원** 어떤 얘기입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드레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민들이 일상에서 결혼할 때 많이 사용하는 드레스와 관련된……

○**박상혁 위원**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런 결혼준비대행업체 관련해서 우리 젊은 청년층의 불만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공약과 관련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대선 시기에 문제를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공정위에서 불공정 약관을 18개 업체에 대해서 시정했다고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준비대행업체에 대한 소비자 민원 건수가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위에서는 주요 한 업체들에 대해서 약관을 시정했다고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소비자원으로 들어오고 있는 불만 건수, 민원 제기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즉 이런 공정위의 여러 가지 행정과 우리 체감하는 시민들, 특히 청년들, 결혼준비를 하고 있는 결혼적령기의 많은 시민들의

이게 완전히 서로 엇박자가 나고 있어서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조금 더 체계적인 개선들이 지금 필요하고. 이런 전체적으로 유형화하고 중요한 정보들을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위낙 민감도가 높은 문제라서 이 문제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가 또다시 살펴보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살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감사합니다.

명륜당과 관련되어서 프랜차이즈 내부거래 문제는 제가 아까 설명한 것을 들어보면 상당히 심각한 것 같고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위법사항 발견하면 엄정 조치 해야 되고 그 조치의 강도도 실효성 있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불공정 약관 문제는 면밀하게 살펴보고, 약관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살펴보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강민국**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섭 위원** 도봉갑 출신 김재섭입니다.

일단 후보자님, 지명 축하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감사합니다.

○**김재섭 위원** 제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화가 나는 지점이 좀 있었습니다.

과거에 대한민국 청년들한테 좌절감을 줬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모습이 후보자님 모습이랑 많이 오버랩이 되어 가지고 제가 준비하면서 좀 화가 나기도 하고 허탈감도 좀 들고 그랬습니다.

후보자님,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불공정 문제 그리고 정의 문제, 분배 문제, 굉장히 불평등 해소 문제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맞으시지요?

특히 교육격차 해소 문제에 굉장히 강조를 하시면서 심지어 개천용지수라는 것도 만드셨습니다. 맞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그렇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런데 알고 보니까 후보자님 본인은 굉장히 기득권자이셨고 특히 교육 불평등 해소를 외치셨던, 교육격차 해소를 외치셨던 후보자님의 말과는 상반되게 후보자님의 자녀는 국내 최상위권의 국제고를 진학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말을 안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국제고 가는 것 같 수 있지요. 그리고 얼마든지 기득권 되려고 노력하는 것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후보자님께서 그동안 뱉어내셨던 그 말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후보자님은 이렇게 말을 했던 것과 알고 보니 본인의 삶이 너무 많이 괴리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허탈감을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내로남불과 위선이라는 비판을 저는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조국 전 장관에 비할 것은 못 되지만 적어도 보급형 조국 정도는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캥기시는지 사실 그 자료를 제가 요구하는데도 안 주시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비판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PPT 처음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면)

개천용지수라는 걸 만드셨습니다. 개천용지수는 어떤 내용입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이건 계층 상승이 세대 간에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를 나타낸 지수입니다.

○**김재섭 위원** 특히 중요한 것은 교육 문제인 거지요? 교육격차가 결국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교육과 경제적 계층 사다리 복원 시급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고.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집안 형편이 어려우면 좋은 학교에 못 간다’. 다시 그것의 대우명제로 따져 보면 ‘좋은 학교에 자녀가 갔다고 하면 그 집안의 형편은 좋은 거다’라는 명제가 성립 참이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후보자님 집안은 굉장히 좋은 형편의 좋은 집안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나도 교육적 격차가 문제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하는 것이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녀분 고등학교 진학 때에 진학원서를 쓰는 기간이 2023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였고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서류 준비를 하는 시기쯤 됐겠지요. 여기에서 이런 세미나 하나를 개최하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런 불공정,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서류 준비하시면서 이 세미나 준비하시는데 좀 민망하지 않으셨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 서류 준비는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재섭 위원** 적어도 상의는 하시지 않았을까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상의는 훨씬 이전에 하긴 했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러면 이 세미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약간의 민망함 같은 것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국제고등학교 서류 접수하는 기간 동안에도 비슷하게 기회평등의 원칙, 불평등의 원인으로서의 기회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후보자님이 걸어오셨던 길과 이런 말 간의 괴리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을 제 자녀에게 그 방향으로 지도를 충실하게 하지 못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재섭 위원** 다른 직도 아니고 ‘공정’이라고 이름이 들어가 있는 공정위원장후보자로 지명이 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문제를 조금 더 날서서 비판을 좀 드렸던 것이고요.

앞으로 어떤 직을 수행하든지 간에 본인께서 그동안 해 오셨던, 국민들에게 하셨던 이야기들을 충실히 지킬 수 있는 그런 후보자가 저는 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지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겸허하게 사죄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위원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민국** 김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후보님, 아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오전 중에, 점심 오찬 정회 중에 자료 좀 제출하세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위원장대리 강민국** 다음은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근 위원**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모두발언에서 재벌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우리 사회의 혁신에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 해 주셨어요.

재벌기업집단들이 웬만한 사업이나 웬만한 기술 이런 것들은 다 독점을 하다 보니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들로 진출하려는 의욕들을 갖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반적인 어떤 혁신의 의지들이 약해지고, 그래서 이런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아주 감명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신을 가지고, 역대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어렵다 이렇게 하고 스스로 포기해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소신껏 활동을 해 주시기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또 한편으로는 우리 후보자께서 교수 역할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온라인 플랫폼에서 치킨, 피자, 빵, 족발 이런 것 배달해서 먹고사는 서민들의 문제를 잘 알 수 있을까? 기술 탈취당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당하고 이런 중소기업들의 문제를 잘 알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민생적 콘셉트의 공정거래행정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되지 않을까 또는 관심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지는 않으시겠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저는 1차 분배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의 1차 분배를 바르게 하는 데 공정위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근 위원** 그래서 우리 자영업자들 대부분이, 최근에는 독립자영업자는 점점 줄어들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또는 플랫폼이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문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 줘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플랫폼 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이 어느 정도 매출액 대비 플랫폼 수수료, 물론 수수료라고 하는 부분에는 광고비도 있고 중개수수료도 있고 배달비도 있고 결제수수료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걸 다 합치면 어느 정도 부담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제가 알기로는 한 1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남근 위원** 그 뒤에 보시면 그게 한 15% 정도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40%까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플랫폼 수수료가, 중개수수료가 6.8%에서 9.8%로 올라가고 무료배달 한다 그러면서 배달비도 자영업자에게 전가하고 그러니까 그로부터도 훨씬 더 많이 들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서 실태조사를 한 게 없어요. 공정위가 하든가 아니면 공정위가 하는 게 적절치 않으면 중소벤처부나 이렇게 협업을 해 가지고 좀 정부 베이스에서 공식적으로 조사를 해서 평균 매출이 1건당 2만 5000원인데 그중에 중개, 광고, 결제, 배달 이런 것 다 합치면 한 30% 된다 이런 것들을 한번 공식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걸 드러내줘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행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중소벤처부가 협업을 해서 그런 걸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기본적인 행정들은 안 하면서 갑자기 통상 이슈가 생겨 가지고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하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불신이 생기는 측면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죽 한번 넘겨 가지고 공정화법의 내용에 관한 것들을 한번 보여 주세요.

사실 이런 것들은 통상 이슈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수수료가 과다하니까 그 수수료 문제, 특히 배달앱만 해도 돼요, 그러면 문제가 되면 원 포인트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같은 것을 하든가 우대수수료 제도 같은 것들을 하자라든가 이런 정도 해도 되고.

그다음에 또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티페프 사태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김남근 위원** 원래대로 하면 네이버·카카오나 다른 나라 플랫폼들은 상품이 판매되면 즉시 결제를 해 주는데 이것을 45일, 60일 동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것을 갖고 자기 금융들을 하고 있고, 딴 데 쓰고 있고. 그러면서 판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출받아 가지고 하라고 대출 알선해 주고 5, 6%씩 내고, 이것 전형적인 불공정행위 아닙니까? 이런 것을 그냥 자율 규제로 해결하라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다 방치한 것들은 알고 계시지요?

-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김남근 위원** 전임 공정위원장님처럼 그냥 자율 자율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서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김남근 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모든 게 다 일방적이에요. 수수료도 일방적으로 올리고, 최근에 1인분 배달 이게 문제가 됐는데 배달비만 6000원인데 거기에 1인분 배달하게 되면 뭐가 남겠어요? 그냥 그것은 공짜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아무 수익 남기지 말고. 그런 것도 일방적으로 다 결정을 했고 수수료 인상도 일방적으로 다 결정했고, 모든 게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협상을 하자 그게 단체협의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논의인데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필요합니다.

○김남근 위원 그래서 이런 서민에 관련된……

1분만 주시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민국 오늘 오전에는 그냥 하시지요, 또 생방이고 하니까.

○김남근 위원 이런 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이슈니 이런 것도 없고 미국 기업들 중에, 배달앱 시장에 미국 기업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독과점 규제법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을 하자라는 얘기는 있어도 서민과 아주 밀접하고 미국 기업도 없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한번 논의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자위나 이런 통상하시는 분들이 너무 우려가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 좀 소신껏 한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김남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강민국 김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원래 위원님들 시간 잘 드리는데 오늘 국회 생방이고 또 오전 중에 위원님들 한번 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柳榮夏 위원 화면을 먼저 띄워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면)

후보자 신념이 이렇지요, ‘세상의 바른 길을 찾고 역사적 진보를 위해 학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오늘 후보자의 모두발언 들으면서 그냥 자유롭게 진보적 경제학자로 남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 화면 띄워 볼까요.

경향신문 기고입니다. ‘모든 소득에 공평히 과세해야 하고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그렇지요? 납세가 국민의 기본 의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맞습니다. 세금이 있어야 분배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번 청문회에서 아까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습적인 체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요 종합소득세는 2019년, 20년도 보면 1년씩 연체도 했고요. 2010년도 종합소득세는, 그것도 후보 지명된 다음에 찔끔찔끔 냈어요.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이 공직을 맡는다? 저는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지방세를 한번 보실까요.

자동차세 18건, 재산세 6건, 주민세 2건, 지방세 3건, 아주 다양하게 골고루 체납하셨습니다. 작년에 부과된 재산세 45만 원 이것 안 내 가지고 올해 2월에 의왕시에 있는 아파트도 압류됐잖아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예금 보니까 한 11억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재산이 적은 분도 아닌데 이런 세금 안 내시면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배우자께서도 똑같으시네요. 8월 16일 하루에 무려 4건 체납세금 450만 원 납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주사회의 기본은 시민들은 준법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법규 위반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속 12건, 스쿨존 2건, 주정차 2건, 전용차로, 아주 다양하게 이것을 버라이어티하게 했어요.

그리고 후보자께서 일관성이 하나 있습니다. 과태료도 체납을 하셨어요. 이게 일관성이 좀 있어요. 세금 체납이랑 똑같은데 2019년 3월에 세종시의 제한속도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는 무려 3년 8개월이 지난 2022년 11월에 납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동차원부도 알아보니까 2007년부터 25년 3월까지 후보자 명의 차량 2대가 총 14차례 압류되었습니다. 이걸 실수다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 상습범이에요.

서면답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쁜 일정으로 기한을 놓치고 세금 신고에 미숙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의 제일 좋은 서울대학교를 나오셔 가지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으셔 가지고 지금까지 이십몇 년간 대학교수로 재직하셨습니다. 이거 세금 신고하고 과태료를 하는 데 무슨 전문지식이 필요해요? 교통법규 과태료 납부하는 데 무슨 전문지식이 필요해요? 무슨 세금 신고하는 데 미숙해서 안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돈이 없어 안 낸 것도 아니고 사회 초년생도 아니고 명색이 서울대학교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진보적 경제학자로 남으셨으면 저는 의견이 과격해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공직은 후보자한테 적절치 않다, 안 맞다 하는 느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세금 체납 이게 법규 위반이 가볍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교통신호 왜 만들어 놔요? 빨간 신호 때는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기고 그냥 간다? 아이들 스쿨존은 30km 넘지 말라고 사회적으로 약속한 겁니다. 그런 작은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이 입으로 공정과 경쟁과 분배를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을 누가 믿겠어요?

모두발언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불공정한 착취, 사익편취, 약자와 강자, 감시의 고삐, 규율체계 마련, 저는 어디 세미나를 보는지 진군가 듣는 느낌이 있어요. 아까 좋은 말씀하셨네요, 자연적 자유. 저는 후보자께서 애덤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를 논하기 전에 후보자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인 납세에 대해서 체납한 그 사실하고 가장 기본적인 교통법규도 상습적으로 어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직자로서 지극히 저는, 아까 어떤 사설에서도 나왔지만 어떤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민국** 후보자 답변하실 것 있나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위원님의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민국** 유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일 위원** 이강일 위원입니다.

후보자의 모두발언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으로 이끄실지에 대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온플시장 공정한 생태계 구축 얘기하셨고 플랫폼 입점사업자 보호를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나왔던 다른 위원님들하고 얘기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지금 혁신기업이냐? 옛날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들을 혁신기업으로 봐서 굉장히 온화한 자세로 바라보는 시야가 있었습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혁신기업이냐? 이게 지금 사실은 수많은 외식 자영업자들을 갈취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혁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혁신이라고 얘기하면 답변에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제가 결론을 좀 내려 볼게요.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 서비스를 통해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이런 것들이 혁신기업이라고 보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또 동의합니다.

○**이강일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배달앱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라이더의 처우와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을지로위원회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 책임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 국회와 현장에서 공정위의 적극적인 개입 촉구를 계속했지만 사실은 계속 마이동풍입니다. 아무 실효성도 없는 상생협의를 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시간을 낭비했고요. 허울뿐인 자율규제라는 이름을 통해서 사실 면죄부를 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강민국 간사, 윤한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표 좀 보여 드릴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배달앱의 이슈는 당연히 여기에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상당한 수의 구조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1위 기업 2위 기업 다 그렇고요. EU가 딜리버리히어로에게 5000억대의 반독점 과징금을 부과했었는데 사실 그 5000억이 어디서 나갔느냐? 우리 국민들의 지갑에서 나갔다는 것을 이 표에서 알려 주는 겁니다. 쿠팡이츠도 역시 연간 6000억대 이상의 수익을 매년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수익 벼는 사이에 외식업 자영업자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사실 통계가 2023년까지만 나와서 그런데요, 2023년도 보면 외식업체의 폐업률이 20% 넘어갔지요? 솔직히 말해서 24년·2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더 늘었던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됐던 2020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최근 계속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평균 영업이익률도 좀 문제가 있어요. 전년 대비 2.7% 감소한 8.9% 정도니까 이게 10%가 안 되는 겁니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상황이 완전히 극과 극이다, 이것 보시면 아실 겁니다. 통상 이슈 있지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배달 플랫폼을 통상 이슈하고는 좀 비껴가는 문제로 봐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수수료 문제도 좀 볼까요? 지난 상생협의체에서 체계 조정이 있었다지만 실제로 수수료는 찔끔 내리고 배달비는 또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배달요금이 다 오른

거거든요. 총수수료율이라는 게 가격에서 차지하는 배달 퍼센티지인데 그 포션이 27~46%까지 됩니다. 이게 음식 재료비값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이것은 상생 전보다 더 악화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료배달이라는 말 뒤에 불합리한 비용 전가가 숨어 있는데요. 해외 사례를 보고 싶어요. 이것은 좀 비교해 봐야 되는데 우리한테 통상 압력을 가장 강하게 하고 있는 미국조차 미국에 도어대시 있고요 영국에 저스트 잇, 일본 우버이츠, 플랫폼 배달과 가게 배달을 업주가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선택적인 사항이 없어요. 거의 반강제적입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달리 볼 사안이 있는 거고 이것은 통상 압력과 별개로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최소한 입점업체에게는 선택권과 협상권이 보장돼야 됩니다. 그렇게 모두발언에 또 약속을 하셨고요.

후보자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입점업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자체로 협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 주신 자료들 아주 좋은 자료들이었다고 생각하고 아까 혁신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고민을 하신……

**○이강일 위원**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는 데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동의합니다. 적극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강일 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민 위원** 주병기 후보자님, 진보경제학자로서 시장이 공정하려면 경제주체들 간에 힘의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두발언에서 사실 독점규제와 공정한 경제질서를 위해서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플랫폼 경제를 규제하는 법제를 완비하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책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운 질문들이 있다 보니까 답변이 참 모호해 보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미국의 부당한 통상 압력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중론에 대한 이야기도 섞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잘못된 시그널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의 결과 보고도 나오고 실질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력이 있고 그 이후에 이어진 다양한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그런 소신이 무너지게 되면 사실은 위원장님의 지금까지 말씀하신 원칙과 그다음에 정말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다 꺾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식의 현실 논리로 가게 되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지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아까 이야기했을 때 부당한 통상 압력을 산자부나 외교부에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것들이 왜 필요한지, 미국도 당연히 있는 것을 왜 우리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것을 설득하는 논리를 만들어 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3월 무역장벽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정부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 실제로 이번에 한미 통상협상뿐만 아니라 그 이후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차별적인 디지털 관세 법률, 규칙, 규제를 철폐하지 않는 국가에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막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이 정도면 깡패 국가입니다. 미국의 이런 허위 주장과 부당한 압력에 저희가 통상 압력이라는 좋은 말로 포장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제 주권과 우리나라의 경제적 민주화를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내정간섭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정확하게 알려야지 이걸 단순하게 통상 압력이라는 현실주의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 우리 헌법 119조 2항입니다. 이 후단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제민주주의 원칙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우리 경제질서를 제대로 공정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소신 저는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질문 때문에 신중론을 이야기하고 속도 조절론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독점 규제가 없이 공정거래는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 소상공인이나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적 모순을 명확하게 입장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전지정제도가 이것은 미국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기업들한테 동등하게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서 만들어 가는 아주 기본적인 경제원칙이다, 이런 입장에서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해서도 입장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위원님, 그러니까 국민주권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진지한 목소리를 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존경하고요. 제 개인적인 소신도 있지만 공정위의 입장에서 무역협상과 독립적으로 왜 독점규제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면밀한 논리를 제공하고 면밀한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유럽연합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한창민 위원** 매우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유럽연합에서는 ‘영토 내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EU와 회원국들에 대한 주권 침해다. 우리의 민주주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른 나라, OECD 국가 다른 나라들과 함께 공정한 세계 경제 질서가 마련되는 데 같이 목소리를 내 주시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한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수 위원** 주병기 공정위원장후보자님, 지명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우리 국감에서도 화두가 된 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적했지만 배달

수수료 문제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특히 배달 수수료 문제가 지금 사회 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래서 공정위가 나서 가지고 열두 차례 회의를 통해서 상생 협의체를 가동했고 상생 요금제를 도출했지 않습니까? 이미 배달앱 시장은 지금 독과점 시장이라는 걸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유동수 위원** 지금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가 9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정위가 고생한 상생 요금제가 상생 없는 상생 요금제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쿠팡은 나름대로 좀 따르고 있는데요. 배달의민족 보면 여기는 플랫폼 배달 수수료는 9.8에서 7.8로 내렸는데 포장 수수료를 만들어요. 그리고 포장 수수료 6.8%를 만들고 배민1플러스 요금제 보면 상위 35% 이내 점주들에 한해서는 배달비를 500원 인상합니다. 1900원 받는 것을 이렇게 2400원으로, 배달요금을 인상해버린 결과가. 지금 그전보다, 상생요금제 도입하기 전보다, 지금 표를 보시면……

그다음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지금 이게 BBQ 치킨 얘기인데 2만 1000원에 팔아요. 그러면 부가세 제외하고 1만 9000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배민1플러스 할 때는 총수수료 합계가 5344원이었어요. 그런데 상생요금제로 가면 5462원입니다. 오히려 올랐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래서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마이너스예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알고 있었고요.

○**유동수 위원** 그래서 외식업 자영업자 등이 더 휙고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률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이제는 배달업 수수료 문제를 업계 자체에 맡길 수가 없는 상태까지 도달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고요.

○**유동수 위원** 구체적인 개선안을 갖고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뭔가 단체협상력을 키울 수 있는……

○**유동수 위원** 좀 더 키울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제도적·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소비자 후생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소비자 후생적 측면에서 보면……

지금 업계가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매장가격과 배달가격.

○**유동수 위원** 여기 보이시지요? 후라이드치킨 제일 윗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매장가

격이 2만 1000원이고 배달가격은 2만 3000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매장가격은 뭐고 배달가격 이것은 뭡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배달가격은 배달해서 먹을 때 내는 가격……

○**유동수 위원** 이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매장가격은 내가 그냥 걸어가서 매장에서 사 먹을 때 가격이 2만 1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리고 이 배달가격은 배달앱을 이용해서 배달앱에 떠 있는 가격이 2만 3000원이라는 얘기예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유동수 위원** 여기에 배달수수료가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후생적 관점에서 보면 2000원 차이가 나는 게 지금 후생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단지 배달앱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2000원을 더 지급한다는 것은 동일한 상품의 2000원만큼의 소비자 후생적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에,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소비자 후생 관련해서 어떤 법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고민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감사합니다.

대략 보니까 10% 정도 더 붙는데 그게 만약에 배달 수수료라면 그렇게 낮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수료가 상당히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수 위원** 앱 수수료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렇지요.

○**위원장 윤한홍** 다음……

○**유동수 위원** 혹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것 보고 말씀하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그래서……

○**위원장 윤한홍** 답변 못 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답변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중요한 현안이고, 민생경제에서 되게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 부분은 또 다른 위원님들 계속 지적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 때 또 답변하시고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이어서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문 위원** 후보자님, 동의의결제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동의의결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이 자진해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수용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지요.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 제도의 취지 자체는 신속한 피해 구제와 거래질서 회복이라는 궁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간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오고 있습

니다.

먼저 기업 면죄부 논란입니다. 제도 취지와 달리 기업이 제재를 피하는 수단으로 불위험이 크다는 지적인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시장 지배력 남용과 소비자 기만행위로 국민적 공분이 커던 쿠팡의 끼워 팔기 및 배달앱사들의 최혜 대우 또 무료 배달 등의 사건에서 기업들이 동의의결을 신청함으로써 자정 노력보다는 제재 회피용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동의의결제도가 이렇게 기업의 책임 회피나 면죄부로 활용, 작용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충분히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문 위원** 그런 우려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이정문 위원** 특히나 또 그 동의의결 요건 중에 중대한 위법에는 동의의결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는 하지만 무엇이 과연 중대한지에 대한 이런 명확한 선 길기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그렇습니다.

○**이정문 위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쿠팡이 와우 멤버십 가입자에게 쿠팡이츠 무료 배달과 쿠팡플레이어 끼워 팔기 한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 행정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거부를 했지만 현재—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가 오고 간—배달의민족 및 쿠팡이츠가 신청한 동의의결권은 지금 절차 개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배달앱 사들이 그동안 보여 온 최혜 대우 요구라든지 수수료 전가 등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태를 고려할 때 후보자께서는 지금 앞서 말한 기업들이 이렇게 동의의결안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바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마지막 질문을……

○**이정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러니까 중대한,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 만약에 불공정행위가 중대할 경우는 동의의결보다는 가능한 심의 절차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문 위원** 그리고 동의의결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기 때문에 유사 사안에서 참고할 법적 기준, 전례가 축적되지 않고 이후 민사 손해배상에서도 피해자 측 입장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이정문 위원** 공정위가 정상적으로 제재한다면 피해자는 그 기록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비교적 쉽게 이끌 텐데 동의의결로 종결이 되면 그나마 기댈 언덕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의의결제도의 장점으로 강조되던 것이 사실 신속성이었는데요. 그런데 저희

가 한번 보니까 2024년도까지 공정위가 처리한 동의의결 인용 사건 및 처리 기간을 살펴보면 동의의결 최종 의결까지 평균 14개월 정도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평균 기간이 17개월이었던 것에 비하면, 물론 3개월 차이가 있으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신속한 처리도 저는 되고 있지 않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일반 사건은 최종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문 위원** 예.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최종심은 조금 더 길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통계에서.....

○**이정문 위원** 어쨌든 신속성이기는 하지만 그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 살펴보시고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이 자료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정문 위원** 예.

지금 마지막 내용으로 제가 구글의 유튜브 끼워 팔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 건도 현재 잠정 동의의결안을 지금 발표한 상태거든요.

아시겠지만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유튜브 뮤직에다가 광고 제거 동영상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인데 이게 현재 서비스 가격이 1만 49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유튜브 뮤직 단일 상품 가격은 현재 1만 1900원이기 때문에 광고 제거 동영상 서비스를 수학적으로 그냥 쉽게 계산하면 한 2900원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동의의결안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 가격을 산정했느냐 하면 8500원을 책정을 했고요. 이는 2900원보다도 약 세 배 정도 비싼 가격이고 여기에는 백그라운드·오프라인 재생 기능도 삭제되어 있어서 사실 더 가치가 낮다고 합니다.

이러한 동의의결안의 가격 책정 기능으로 인해서 결국 소비자들은 앞서 제일 먼저 말씀드린 프리미엄 서비스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동의의결안의 내용 자체가 유명무실화됐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공정위원장에 취임을 하신다면 특히나 구글 건, 아까 신장식 위원님께서, 그 점유율 죽 상승한 건 보셨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봤습니다.

○**이정문 위원** 이런 것이 다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부분을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알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그렇게 하겠고요.

저도 지명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동의의결제도가 그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굉장히 플랫폼에서 지배적 사업자들의 나쁜 행위에 대한 처벌에 사용되는

것은, 저는 개인 학자로서 상당히 그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동의의결제도는 좀 작은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큰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좀 적절하지 않은…… 제가 만약에 임명되면 면밀하게, 지금까지 동의의결제도가 어떻게 활용되었고 중대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한홍** 이어서 존경하는 이현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憲昇 위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저승사자라고 불리울 정도로 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아서 우리 시장경제가 건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느 공직보다도 공정거래위원장은 준법정신과 공정한 시장감독 의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맨 처음 공정거래위원장을 언제 제의를 받았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제의를 받은 것은…… 그렇게 제의를 받았던 적은 없는데요.

○**李憲昇 위원** 그러면 언제 연락이 왔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지명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李憲昇 위원** 그러면 아무 상의 없이 바로 지명에 들어갔습니까? 누군가가 중간에 연락이 왔을 것 아닙니까? 맨 처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서류를……

○**위원장 윤한홍** 인사검증 서류.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李憲昇 위원** 아니, 서류 검증하기 전에 본인에게 의사가 있는지 맨 먼저 물어볼 것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아니, 저는 의사를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李憲昇 위원** 전혀 그런 것 없이 바로, 그러면 누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제가 연락을 처음 받은 것은 대통령실에서 받았습니다.

○**李憲昇 위원** 대통령실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행정관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정확히 제가 성함은……

○**李憲昇 위원** 언제쯤이에요, 기억에?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게 7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李憲昇 위원** 7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李憲昇 위원** 그러면 거기서 바로 동의를 하고 인사……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李憲昇 위원** 자료제출 필요하다라고 받아서 최종적으로 서류는 언제 제출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것도 7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것 받고 한 일이 주 내에 제출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그렇습니다.

○**李憲昇 위원** 본인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추천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경제 정책의 기본 철학이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신념하고 많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李憲昇 위원** 그러면 본인이 잘하실 수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저는 열심히 할 것입니다.

○**李憲昇 위원** 의지는 충분합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李憲昇 위원** 그러면 후보자가 생각하는 공정의 정의란 무엇입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

○**李憲昇 위원** 공정, 공정거래가 아니고 공정의 정의.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공정.

○**李憲昇 위원** 공정하다, 공정.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공정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李憲昇 위원** 사전적인 정의는 공평하고 올바르다, 공정은 사회적으로 정의와 신뢰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거래위원장은 우리 국민의 경제질서를 바로 세우고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아주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자리인데,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우리 국민의 4대 의무 아시지요, 헌법상?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李憲昇 위원** 교육·근로·납세·국방, 그중의 하나인 납세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상습적인 체납으로 인해 가지고 차량은 물론 주택까지 압류당한 적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그렇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세금 체납해 가지고 차량하고 주택까지 압류당한 경험이 있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몇 % 될까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제 생각에는 한 10%도 안 될 겁니다, 2개를 다 이렇게 압류당한 게. 공직자를 하려면 정말 최소한의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필요한데 과연 저는 후보자가 우리 대한민국의 공정거래위원장 맡을 자격이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좀 반복적일 수도 있지만 종합소득세, 만약에 작년에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면 올해 5월 말까지 납세를 해야 되는데 후보자께서는 최근 7년 동안에 다섯 번이나 늦게 납부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늦게 했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李憲昇 위원** 그런데 이유가 뭐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제가 직장은 서울에 있고 집은, 가족이 세종에 있어서 주중에는 서울에서 집에서 잠만 자고요. 주말에는 세종으로 내려가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우편물 확인을 하기가 좀, 제때 못 한 것들이 많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래도 보통 가장 관심이 있는 게 해마다 5월 되면 소득세 신고해야 되

고 그런 루틴이 있는데 한두 번 이런 실수를 했으면 그다음 해부터는 제대로 각성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앞으로는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제가 보니까 귀속 종합소득세 좀 늦게 납부한 게 있더라고요. 후보 지명되고 나서 이렇게 납부한 것도 있는데 만약에 지명이 안 됐다면 그것도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지명되고 나서 납부한 거는 과거에 납부한 것에 과소 납부가 있어서요. 그걸 정정한 겁니다.

○**李憲昇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 가지고 나머지는 못 하겠는데 나중에 오후에 차근차근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원 위원** 후보자님, 우선 지명 축하드리고요.

공정위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그리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엄청나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김승원 위원** 대통령께서도 공정위에 거는 기대가 크시고 그래서 공정위가 더욱더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하에서 공정위가 특정 기업에 한없이 작아진 듯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우선 그게 효성그룹인데요. 효성그룹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정위에 제출한 계열 회사 자료에 마이스터모터스와 중앙모터스 같은 핵심 자동차 딜러사 두 곳을 아예 제외해서 대기업집단 지정 심사를 피하려고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내부고발자, 당시 효성 임원이 실제 효성 계열사임을 숨겼다라고 스스로 내부고발을 하면서 시작이 된 건데요. 이것이 어떻게 종료가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보고받았습니다. 고발되지는 않았고요.

○**김승원 위원** PPT 자료 한번……

다음 거 한번 봐 주시겠어요?

2024년 2월 15일 날 경고로 끝났는데요. 효성은 그 전에도 2010년, 2013년, 2022년도에도 똑같은 허위자료 제출로 불법을 저질렀고 경고만 세 차례를 받았습니다. 특히나 이 직전에 2022년도는 17개 사의 자료를 숨겼다라고 하는 그런 혐의였고 그다음에 2024년도는 결정적인 2개 사 자료를 숨겼다는 것인데 오히려 이렇게 상습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면 더 가중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당연히 가중처벌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허위 제출이 잦으면 경고가 아닌 훨씬 더 중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승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효성이 부당 지원한 의혹에 대해서 공정위가 심의 종료한 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조사에 착수하고 2년간 조사했으나 제재 없이 심의 절차를 종료했습니다. 즉 심의 종료는 사실관계 자체를 아예 확인하지 못해서 혐의 유무조차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마감하는 결정을 했는데 당시 공정위 심사관, 저는 공시점검과 김주현 사무관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보고서에 효성이 건설 사업 이익을 진흥기업에 몰아줬다라고 고발 의견으로 작성했지만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전원회의에서 법 위반 판단을 포기했고 그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전원회의 첫 심의 절차 종료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2023년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전원회의를 개최해서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왜 그럴까?

처음 PPT 화면 보여 주실까요? 처음이요. 처음, IMS모빌리티 건, 맨 마지막에 있나요?

화면 좀 봐 주십시오.

IMS모빌리티라고 하는 김건희의 집사 김예성 씨 회사, 보시다시피 자본잠식 회사인데 효성이 여기에 35억 원을 출자하고 그것도 후순위로 수익을 받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효성에서 80억 원을 투자하려고 했었습니다. 투자체안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회사에 투자할 회사가 없으니까 이게 결국은 200억으로 줄어서 효성이 35억을 하게 됩니다.

아까 타임라인 한번 보여 주실까요?

타임라인입니다.

빨간색은 공정위가 효성을 부당 지원한 사건으로 조사를 착수한 2021년 4월 그리고 결론이 난 게 2023년 3월 15일 심리절차 종료 결정 그리고 공정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안은 2023년 3월인데 결론은 2024년 2월 달에 경고로, 단순 경고 났는데요. 2023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아까 말한 효성이 김건희 집사라고 하는 김예성 씨의 IMS 모빌리티에 35억 원, 원래는 8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그때입니다. 저희는 이것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특검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이런 국민들의 의혹을 받는, 주목을 받는 큰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해 주셔야 국민들이 공정위를 믿고 신뢰할 수 있고 또 공정위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서민들도 따르지 않겠습니까? 공정위야말로 이런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 후보자님께서 특히 신경을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감사합니다.

○**김승원 위원** 그리고 내부적으로 왜 이렇게 됐는지 자체 조사라든가 감사를 하셔서 그 결과를 의원실에다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지금 특검 수사를 지켜보겠고요. 공정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李憲昇 위원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위원장 윤한홍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현승 위원님 자료 요구는 정회 중에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양수 위원 잠시만요. 이현승 위원님 게 아니고 다들 지금 궁금해하는데 이현승 위원이 대표로 한 거고……

○위원장 윤한홍 아니, 그러니까…… 잠깐, 잠깐.

○李憲昇 위원 본인이 동의만 하면 받는 건데.

○이양수 위원 주식거래 내역을 계속 안 줘요, 달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물어봐 줘요.

○위원장 윤한홍 후보자의 주식거래 내역을 여기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출해 주세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안 하면 더 의심을 받아요. 안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한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의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허영입니다.

후보자님,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지금 보시는 것은 지난 8월 30일 서울 성수동의 모습입니다. 새벽부터 2개의 골목을 꽉 채워서 이렇게 긴 줄을 서 있습니다. 팬 사인회가 아니라 990원짜리 소금빵 하나를 사기 위해서 선 줄입니다. 360만 구독자를 보유한 경제 유튜버가 한국 빵값이 너무 비싸다면 소금빵을 990원에 파는 팝업스토어를 열어서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싸기 때문에 몰린 해프닝이 아닙니다. 990원짜리 빵 하나를 사기 위해서 3시간을 기다릴 정도로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빵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소금빵을 들어 보이며)

이게 소금 빵입니다. 드셔보셨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허영 위원 이 현장에서는 990원에 팔았지만 이거를 2990원에 샀습니다, 하나를. 2000 원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잠시 화면을 봐 주십시오.

지난 1년간 빵값 상승률 추이입니다. 지난 8월 빵 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6.5% 나 상승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 1.7%의 3.8배에 달합니다. 엄청 난 수치지요.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고공행진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원재료 가격이 내리면 제품 가격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지요.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보시는 바와 같이 빵 주원료인 국제 밀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급등했다가 올 2월 고점 대비 12%나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국내 빵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2020년 대비 빵 물가지수는 무려 38.6%나 올랐지요. 밀값이 떨어지면 그러면 이건 거의 2배 더 이상 오른 거나,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허영 위원 다시 한번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그래서 국가별 식빵 가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한국이 미국 영국 호주 일본 프랑스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원재료 가격은 내리는데 제품 가격은 오르고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빵값을 부담해야 하는 이 기이한 현실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저는 소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독과점 구조와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불공정 거래 관행에 있다고 봅니다.

한번 보십시오.

SPC 삼립, 롯데웰푸드, 대광푸드의 양산빵 소매시장 점유율입니다. 무려 79.8%입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이거 2020년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파리바게뜨·뚜레쥬르, 이 2개 회사 프랜차이즈 점유율이 77.7%입니다. 지금 더 높아졌을 겁니다. 2020년 자료니까요.

원가 구성을 보면 판매관리비가 전체의 42.4%예요. 이 판매관리비 안에는 할인 행사, 광고, 가맹점 지원, 제빵기사 인건비 지원. 빵 원가의 42.4% 이게 본사가 부담하겠습니까, 가맹점들이 부담하겠습니까? 그러니 빵값이 또 올라가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그렇습니다.

○허영 위원 국민들은 계속 오르는 빵값을 감당해야 하는데 기업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이커리 전문점 매출이 2020년에 6조 240억 원에서 2022년에 7조 5700억 원, 영업이익은 2700억 원에서 4700억 원으로 무려 75.3%나 급증했습니다. 다 소비자한테 전가해서 얻은 이익들이지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불공정행위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최근에 관악구에서 발생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살인사건, 뉴스에 대서특필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논란이 있는 사건이지만.

저는 공정위의 제재가 본사 입장에서는 ‘벌금 내고 말지’ 이런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 불공정거래 관행, 독과점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

다.

990원 소금빵 앞에 길게 늘어선 줄, 이게 국민들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시장 질서, 이 시장 실패를 극복하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에 대해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지금 저 자료에서 보여주신 문제는 많이 최근에 보고를 받았고요. 빵이라는 게 굉장히 필수재에 속하기 때문에 물가 문제가 왜 생기는지,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빵 시장의 독과점 문제도 있고 본사·가맹점 간의 어떤 불공정거래 이슈도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에서 경쟁 제한 이런 것들을, 아니면 독점 가격 형성 혹은 담합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영 위원** 공정위가 제대로 제재를 안 해요. 별금 내는 수준으로 말지 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래서 제재의 실효성도 굉장히, 저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정위가 제재하는 경제적 제재의 재발방지 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대 위원** 인천 연수갑 출신 박찬대 위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감사합니다.

○**박찬대 위원** 공정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던 윤석열·김건희, 여러 거래들이 있었는데요.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22년 5월 윤석열은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당시에 관저 공사를 맡았던 현대건설은 A업체에게 일정이 급하다면서 정식 계약서 없이 스크린골프장, 경호 초소 등 공사를 위탁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같은 방식으로 또 같은 해 7월 달에 안가에 리모델링까지 불법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후보자님, 서면 또는 전자계약서 없이 진행하는 국가공사 법 위반이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박찬대 위원** 심지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하도급의 하도급, 결국은 재하도급 구조로 사업이 강행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외부에 알리지 않았던 편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 위반이 중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 하청업자에게 지불했던 공사대금의 출처도 불분명합니다. 저희 의원실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사업비 대금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 사업

으로부터 대금을 끌어왔고 이것을 일부 지급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하청업체는 계산서를 끊어야 될 텐데 이 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계산서를 끊지 못하다 보니까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달라는 압박도 받았습니다.

허위 계산서를 쓰게 하고 하도급의 하도급을 내리는 불법의 연속이 대통령실에서 있었는데요. 이거야말로 진짜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과 함께 이 부분을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현대건설은 왜 다른 사업비를 끌고 와서 스크린골프장도 놓아 주고 안가 리모델링도 도왔는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 큰 대가가 있지 않을까 합리적으로 의심하게 됩니다.

결국은 현대건설이 관저 공사비를 떼안고 그 대가로 878억 원 규모의 영빈관 공사 수주를 약속받았다는 정황이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특검팀은 경호처와 관련자 등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긴급하게 수사를 지금 이어 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현대건설이 관저 공사 비용을 우회 전용하고 그렇게 부담시키고 난 다음에 그 대가로 영빈관 수주 약속을 받았다면 형법 130조에 따른 제삼자뇌물제공 해당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 부분은 공정위원장이 답할 사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찬대 위원** 형법 130조 제삼자뇌물공여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공공발주 사업을 권력자와 재벌기업 간의 거래의 장으로 만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님, 지금 공정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물론 필요할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하실 텐데요. 이 범죄사실을 간단하고 분명하게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 정식 계약 없이 선시공했고, 두 번째 타 현장의 자금을 불법으로 전용했으며, 세 번째 사실관계와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을 종용했거나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재하도급 금지 위반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결과의 결과로 영빈관 대가성 수주 정황이 지금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법을 위반한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한 행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취임하신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좀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이 사건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잘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세상에 알려진 불법거래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으로 취임하신다면 부패한 권력자의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윤석열·김건희 내란 공동체의 범행을 전수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정부의 공공발주 공사 전수조사 즉시 착수할 의지가 혹시 있는지 묻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살펴보겠습니다. 임명되고 나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꼭 전수조사해 주시기를……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전수조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찬대 위원** 취임하신다면 관련해서 향후 계획과 결과를 우리 의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박찬대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수 위원** 후보자님,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오전에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홀륭한 분이라고 치켜세우기 바쁘고 그다음에 야당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좀 했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할 것을 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하셔서 확인만 좀 하고 갈게요. 정리 차원에서 적어 봤습니다.

지난 5년간 속도 위반 교통과태료 14회 맞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양수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도 과속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적이 있으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재산세, 지방세 그리고 차량 과태료 등 상습 체납을 하신 적이 있나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체납을 많이 했습니다.

○**이양수 위원**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7년간 다섯 차례 연체를 했는데 후보자 지명 이후에 다 납부하셨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지명 후가 아니고 지명 전에 다 납부했고요. 지명 후에 한 것은 지명 전에 납부한 것에 오류가 있어서 정정한 것입니다.

○**이양수 위원** 체납으로 자택과 차량에 대해서 열네 차례 압류된 적이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자택은 한 번, 차량 13번 맞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리고 지난 5년간 최소 1300만 원의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인정하시나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아마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양수 위원** 기타소득으로 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될 걸 좀 적게 낸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 그 말씀이신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이양수 위원** 고교평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장하시고 자녀는 국제학교라고 하는 특목고에 진학한 것에 대해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시나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사실관계 확인이 조금 됐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이것들에 대한 해명으로 송구하다, 사과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에 대한 의무를 다하려 했으나 실수였다’. 그런데 앞에 송구하다, 죄송하다는 좋은 자세라고 생각했는데 실수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태료나 세금 체납을 하면 사전통지서가 나가요. 그리고 안 내면 1차 고지서, 2차 고지서가 계속 나가거든요. 그게 아까 우편함을 확인을 잘 못 해서 그랬다는데 우편으로도 가고 핸드폰으로도 갑니다. 과태료의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사진까지 찍어서 본인한테 발송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아닙니다. 핸드폰으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 당국의 실수라고 보더라도 사전통지서 1차 고지서, 2차 고지서는 법적으로 세 번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이것을 다 못 봤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리고 이런 적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법 무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고지서가 왔기 때문에 1년 내지 늦게는 2년 때에 냈던 것입니다.

○**이양수 위원** 충분한 설명은 잘 안 된다고 본인 스스로도 생각하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양수 위원** 지금도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별거 아닌데 위원들이 이런 것 갖고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십니다. 여태까지는 자연인이고 또 그냥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그래도 상당히 크신 분이지요. 오피니언 리더시고 대통령의 경제 스승이고 또 경제 멘토라고 불리는 분이니까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의 법에 대한 법의식이나 이걸 지키는 의지가 약해지거나 조금이라도 유혹에 빠지면 법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게 선이라 할지도.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명심하셔야 됩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불공정거래위원장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서 미래를 본다고 여태까지 했던 일들에 대한 반성이 좀 더 겹혀하고, ‘실수다. 내가 별거 아닌데, 그냥 할 수도 있었던 건데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고 정말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이 되어야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정거래위원장 업무를 정말 제대로, 법집행에 있어서 추호의 사심이 없고 법 어김 없이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질의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본인의 심정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지금까지 종합소득세라든지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 불찰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드립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영 위원** 오늘 인사말씀 중에서 맨 앞에 말씀하신 것이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 말씀부터 하셨는데요. 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진 사람들의 칼이 되느냐, 아니면 좀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지팡이가 되느냐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검찰이다 이런 것보다 경찰을 놓고 우리가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듯이 혁신적 중소·벤처기업 아니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힘이 되는, 그래서 때로는 좌절을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언덕이 되어 주는 약자들의 경제 지팡이 혹은 어려운 사람들의 경제 지팡이, 이런 것이 되는 그런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사회에서는 가진 사람들, 재벌 대기업 대기업집단의 불법, 위법, 비리, 부정 등등이 있어도 덮어지고 넘어가고 혹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큰 문제 없이 넘어가는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시장에서 공정한 질서를 만들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서 구조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어떤 측면에서는 대기업과 대기업집단의 개혁 이런 것들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경제 자체가 잠재성장률이 다운돼 있고 또 민생경제 그 자체도 매우 힘들고 그리고 국제적인 경제환경도 나쁘고 그래서 대기업이나 대기업집단과 우호적인 분위기도 만들고 이러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대통령이 그런 노력을 하는 것 못지않게 여전히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이나 대기업집단이 시장에서 강자로서, 가진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떤 불법, 위법, 부정, 비리 이런 것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 꾹을 뽑으라면, 대기업이나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원 꾹을 뽑으라면 후보자는 뭘 뽑으실 수 있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정책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인영 위원** 예.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지금 기업집단을 이용해서 내부거래나 아니면 자사주를 이용해서 지배력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사익 편취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제재의 강도는 그런 행위에서 얻는 이익을 능가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그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그 법적인 어떤 처벌은 제삼자에게 전가시키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계속 부당한 이익들을 취해 나갈 테니까 그걸 잡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대기업의 지배구조 그 자체에 직접적으로 손을 댄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예컨대 얼마 전에 있었던 사태입니다만 영풍문고나 고려아연의 사태에서 놓고 보

면 순환출자의 빈 구멍을 활용해서 나타난 그런 비판적인 지적의 소지들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기업지배구조 그 자체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한다 그러면 어떤 점을 손꼽을 수 있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방금 말씀하셨듯이 순환출자라든지 상호출자, 이런 법을 위반하는 어떤 루프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기업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법망을 피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범계 위원** 박범계입니다.

후보자님, 축하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감사합니다.

○**박범계 위원** ‘제가 존경하는 분이었는데요’라고 나올 뻔 했네요. 존경했고 지금도 존경합니다.

모두 발언에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자연적 자유입니다. 이러한 체계 안에서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등, 완전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후보자님은 완전한 자유와 평등·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 분입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그렇게 믿습니다. 그쪽으로 향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일까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저는 역사는 그 방향으로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 대체로 진보적인 학자분들이 내각에 들어가면 저희들같이 공무원 좀 하다가 그다음에 여러 번 국회의원을 통해서 내각에 들어가는 경우하고 또 다른데요.

이상을 추구하는 것과 현실 세계에서 만나는…… 후보자께서 위원장이 되시면 뒤의 이분들이 측근 실세를 아니겠습니까? 그럴 것 같은데, 현실의 공직사회에서 느끼는 한계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표를 어디다 둘 것인가, ‘이 목표가 다루기 어려운 목표구나. 현실이 장애가 너무 크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 ‘내가 여기 왜 와 있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차선으로 ‘돌 하나 던지는 진보면 나로서는 굉장히 만족한다’, 아니면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등, 완전한 정의를 위한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것 같아서 아예 그만두는 게 차라리 낫겠다’, 어느 쪽이 될 것 같습니까, 후보자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 국가보안법 7조 논쟁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국가보안법 전체를 폐지하자, 남용 소지가 많았던 7조의 소위 고무·찬양 부분이라도 현실적으로 야당이 크게 반발하지 않을 때 그저 그 조항이라도 개정하자, 없애자’ 이 두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후보자 같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각을……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저는 국가보안법을 없애자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 목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 그렇군요.

아까 야당 위원의 ‘자유롭게 진보적 경제학자로 남았으면 좋았을 법 했다’ 그 질문이 제 취지하고 약간은 좀 상반되지만 현실의 벽 안에서 느끼는 그런 한계들이 아마 느껴질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돌 하나라도 얹는 진보, 돌 하나라도 얹는 정의, 돌 하나라도 얹는 평등을 실현하고 나오시기를 기대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박범계 위원** 구체적인 사건에서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하면 그것에 대한 폐널티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기업 메시징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통신 3사가 제공하는 것인데, 거기에 통신 3사들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것을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다’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폐널티를 부과했어요, 과징금 부과했어요. 그것 하지 말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8년간 소송이 지연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8년이라는 소송 기간이라는 것이 소위 시장 열위적, 그런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거의 망하기 일부 직전 내지는 다 망하고 난 뒤예요.

일단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과징금 부과 정도로 끝나니까 통신 3사들이 일종의 대리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역시 가격 조정을 통해서, 그래서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여전히 경쟁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물은 궁극적인 질문들 이런 부분들을 외형적으로는 범망을 피해 나가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위원장이 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지금 사실은.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우선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는지 제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정위 자체 내의 업무 시스템을 개선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결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공정위가 자체 내의 시스템을 바꾸고 역량을 확충하고 하면서 충분히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범계 위원** 마이크는 꺼졌지만 돌 하나 올려 놓는 정의·평등 그런 관점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국가보안법 개폐와 관련돼서 그 당시로 돌아가면 전체 폐지가 이상적인 목표였다면, 그러나 국가보안법 남용 소지가 가장 많았던 7조 고무·찬양이라도 폐지했어야 되는 게 좋지 않았느냐라는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느 쪽을, 아까는 전체 폐지를.....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전체 폐지가 불가능했다면 후자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준현 간사님.

○강준현 위원 후보자님, 대통령께서 공정위원장 지명한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대통령님이 가지고 계신 국정 철학하고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소신과 일치하는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준현 위원 철학 얘기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주제, 어느 한 주제를 꼭 꼽는다고 하면, 불공정이든 뭐든 간에.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경제적 약자,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공정위가 기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준현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주질의시간에는 요즘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플랫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또 드릴게요.

갑을관계가 문제가 있지요, 지금. 특히 구글하고 애플 인앱 결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배력이 과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준현 위원 갑질인 거지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렇습니다.

○강준현 위원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문제인데 첫 번째가 수수료예요, 수수료. 이게 보니까 한 30%, 굉장히 많네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많습니다.

○강준현 위원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강준현 위원 두 번째가 광고비인데 이게 광고 플랫폼하고 연동이 돼야 자사 앱이나 또 서비스가 잘 노출되거든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이중 부담을 갖고 있다, 소상공인 분들이나 입점 사업자분들이.

더구나 세 번째가 입점 과정도 어렵다, 그러니까 술하게 지연되는 일은 다반사고 거절되는 경우도 많고 또 심사 과정이 투명치 않다.

지금 수수료, 광고비, 입점 과정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어느 정도 했습니다.

○강준현 위원 어느 정도 했어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강준현 위원 문제 인식은 다 하고 계신 거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더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강준현 위원 여하튼 핵심은 독과점이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독과점인데 연구에 따르면 한 95% 수준 뭐 이래요. 우리나라로 원스토어가 있기는 하지만 독과점이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강준현 위원**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2021년도에 인앱 결제 갑질 방지법을 가결시켰으나 효과가 미비한 거예요.

요즘 근자에 온플법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통상 문제가 연결돼 있어 가지고 정말 애로사항이 많은데,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공정위원장이 되시면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실 건지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저는 우선 한국과 다른 선진국과의 비교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앱 결제와 관련해서 수수료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려면 우리나라 시장과 다른 시장을 같이 비교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면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지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준현 위원**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지요, 정부 측과 국회와 충분히 소통을 해서 혹자라도 통상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니까 수위 조정을 좀 잘해서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소상공인들 또 입점 사업자분들 상당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빨리 좀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강준현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동의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강준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민국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제가 6년 동안 정무위를 하면서 많은 장관후보들을 청문회 했는데 이런 후보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과거 후보자가 언론뿐만 아니고 기고한 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면)

‘21대 국회의원 평균 재산 28억 원은 놀라운 현실이다. 가난한 서민의 대표, 노동자와 농어민의 대표가 우리 국회에 몇 명이나 있나?’ 이런 글을 적은 적이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강민국 위원** 후보하고 가족 명의의 재산이 총 얼마예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25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공정거래위원장 재산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봅니까? 후보자가 공직자의 적정한 재산 기준을 아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회의원 28억이 놀라운 현실이다’ 글을 쭉 적었잖아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강민국 위원** 25억 정도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빨리 답변하세요. 시간 없어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생각을 해…… 지금 놀러 왔어요? 놀러 왔어요, 지금?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아닙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웃음이 나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아닙니다.

○**강민국 위원** 왜 내가 이런 후보 처음 만났는가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이렇게 재산이 넉넉한 분이 세금을 5년간 무려 삼십 번을 넘게 체납해요. 아파트 1채는 압류당하고 차량 2대도 2007년부터 열세 번 압류당했지요. 그렇지요? 지방세만 하더라도 재산세 여섯 번, 자동차세 열여덟 번, 주민세 두 번, 지방소득세 세 번, 다 지방세법 위반이에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오신 건지 그냥 거래위원장으로 오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넘겨서 소득세법 위반한 것도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주무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잘 듣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2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년 2개월, 24년도 한 달을 넘겨서 신고한 것도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왜 이랬어요, 그래? 단순히 고지서를 못 본 거예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게 참 내가 진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해명다운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금 고지서를 못 봐서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하셨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강민국 위원** 21년도하고 22년도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스스로 냈어요. 종합소득세는 아시다시피 신고하는 신고의 의무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또 그 기한까지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21년도·22년도는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미숙이 아니고 명백한 고의다. 왜 이렇게……

그리고 또 보니까 더욱더 이해 안 가는, 그 기간 내에 보니까 6개월 사이에 아주 부지런하게 5억 7000만 원 예금을 부부 명의로 개설하더라고요. 그 돈은 어디서 낸 거예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기존의 예금을 갱신한 겁니다.

○**강민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많은 세금을 체납해서 압류까지 당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라는 분이 압류까지 당하면서 6개월간 5억 7000만 원 예금을 개설할 돈은 있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러니까 세금을 체납한 것은 의도한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고지서가 다시 날아오면 그것을 보고서 다시 냈습니다. 늦게 냈습니다.

○**강민국 위원** 오전 우리 위원님들 질의 때 세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주중에는 수도권, 주말에는 세종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편물 확인 못했다는 말씀 하셨지요?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오전에.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제가 사실 장관의 업무능력을 보지 가족들은 잘 안 건드려요. 그런데 지금 너무 어처구니없는 횡계를 하시기 때문에, 후보자 배우자는 지금 세종에 계속 계시지

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강민국 위원** 그런데 후보자 배우자도 지금 지방세를 몇 번 체납한지 아세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것도 좀 설명드릴까요?

○**강민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번 체납했는지 아세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게 횟수가 네 번으로 되어 있는데……

○**강민국 위원** 네 번은 무슨 네 번이에요, 열한 번이나 체납을 했다고. 이것은 그냥 심각하게 반성, 오늘 청문회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고……

아니, 도대체 우리 평범한 국민들 중에서도 이렇게 수십 차례 압류당하고 위반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이런 국민이 어딨어, 일반 국민 중에서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죄송합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왜 후보로 나왔냐고, 스스로 사퇴를 했어야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위원님들……

○**박범계 위원** 뭘 물어봐요. 다……

○**위원장 윤한홍** 아니, 다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내 질의시간 있잖아.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작년에 국감 할 때 배달앱에 대해서 ‘무료 배달’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냐 지적을 한 게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지난번에 저한테 와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하시던데 제가 그때 지적했던 이유는 결국은 배달 비용을 자영업자들이나 또는 소비자자가 다 부담을 하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맞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하는데도 불구하고 배달 플랫폼에서는 무료 배달이라고 홍보를 하고 소비자들을 유인하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위원장 윤한홍** 그런데 이게 적절한지 공정위에서 좀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도…… 보면 가게에서 직접 물건을 사는 것보다 배달하면 더 비싸잖아요.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배달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그 배달요금을 다른 항목에다가 포함시켜 놓고 무료 배달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런데 그 부분을 영업 전략상 광고비에다 포함시키고 다른 수수료에

다 포함시켜 놓고 배달비는 무료다, 그게 적절한지가 저는 아직도 납득이 안 돼요. 1년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동안에는 소비자와 점주가 배달비를 부담 하다가 플랫폼 업체와 점주가 부담하니까 소비자가 부담 안 한다 또 이런 표현을 해요. 그것도 저는 말을 살짝 돌린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요즘은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게 수수료 상한제라는 게 나오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위원장 윤한홍** 수수료 상한제가 들어오면, 후보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계신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수수료 상한제가 되었을 때 플랫폼 업체는 수익이 줄어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수익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맞겠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자영업자나 소비자는 어떤 혜택을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자영업자들 이야기 좀 직접 들어 보셨어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좀 더 들어 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윤한홍** 전혀 자영업자들은, 자기들 수익이 더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고요. 왜? 시장에서 이게 전가가 될 것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전가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소비자들은 만약에 수수료 상한제가 되어 가지고 혜택을 보려면 물건 값이 좀 내려가야 되잖아요, 수수료 상한제가 됐으니까 배달료가 내려가서.

저는 그럴 가능성 전혀 없다고 봐요. 왜? 그대로 다른 광고비라든지 다른 수수료에 전가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플랫폼 업체가 자기들 수익을 안 줄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배달하는 노동자들이겠지요.

○**위원장 윤한홍** 그렇지요. 우리가 보통 라이더라고 표현하잖아요. 직접 배달하시는 분들의 수익이 확 줄어들 겁니다.

이게 지금 배달앱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법적으로 사회주의식 공산주의식으로 가격 통제를 하게 되면, 그 가격만 통제를 해서 낮추면 다 혜택을 보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게 전가가 이루어지고 풍선효과가 생기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또 생기고 하는데 아까 모두발언할 때 약자가 경제력 강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겠다, 표현도 뭐 자연적 자유라고 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위원장 윤한홍** 그런 아주 멋진 표현도 쓰시던데 실제 현장은 다른 거예요. 교수로서

칼럼을 쓸 때는 정말 멋진 말로 다 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들어오면 이해관계가 다 다른 거예요. 이거 배달 분야 하나만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려 보는데 플랫폼 업체, 자영업자, 소비자, 라이더, 네 파트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입장이 다 다른 거예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서로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로만 하다가 실제로 실천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작년 국감 때 무료배달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 공정위에다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된 답을 못 받고 있어요, 1년이 됐지만. 오히려 배달앱들은 무료배달이라고 더 자랑스럽게 광고를 하고 영업전략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회원가입비를 더 많이 받고. 결국은 다 풍선효과, 전가예요.

어떻게 이거라도 제대로 해결하실 수 있는 자신이 있을 것 같습니까, 후보자님?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무료배달 광고의 불공정성, 이것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게 왜 늦어졌는지는 제가 유심히 살펴보겠고요.

말씀하셨듯이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소비자라든지 배달노동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대비책이 없으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비책까지 같이 고려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그겁니다. 교수 하실 때 현장에서 벗어나서 아주 좋은 말로 규범적인 표현만 하시다가 이제는 현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래서 현장을 직접 듣고 현장과 이론이 다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위원장 윤한홍** 주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정회 없이 보충질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7분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현승 위원님 하십시오.

○**李憲昇 위원** 질의에 앞서 아까 요구자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정회 시간에 요구자료를 잘 주셨는데 주식계좌에 대해서는 제가 잘 받았고요. 내용을 보니까 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늦게 냈는지 이해가 안 가고, 이것 말고 주식계좌 외 거래내역, 펀드계좌라든지 RP계좌 내역도 필요한데 이 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배우자 명의 세종시 주택에 대해서 계약서를 제출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받은 것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입니다. 이게 계약서가 아닙니다, 후보자님. 그래서 계약서를 한번 받아 봄아 되겠습니다. 잔금을 언제 치렀고 최종 납입을 언제 했고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자녀 학적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신 대로 충분히 제가 익스큐즈하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후보자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죄송하지만 계약서는 지금 제출드린 걸로, 계약서의 형태가 지금 다른데 저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게 계약서로 알고 있는데요.

○**李憲昇 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다른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윤한홍** 자료는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憲昇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후보자께서는 재산세 과태료 제대로 납부 안 해 가지고 주택·자동차 압류당했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맞습니다.

○**李憲昇 위원** 특히 의왕시 주택 배우자하고 함께 소유하고 있는데 작년 재산세 1기 분·2기분을 미납해서 체납을 해 가지고 올해 2월에 압류됐다가 3월 달에 해제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맞습니다.

○**李憲昇 위원** 후보자가 과거에 작성한 기고문을 보니까 ‘세율 인상을 통해서 부동산 소유에 대한 과세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맞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런데 정작 후보자 본인은 재산세를 제때 납부 안 한 건 좀 자기모순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죄송합니다.

○**李憲昇 위원** 죄송하다 한마디로 넘어갈 건 아닌데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반성하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후보자의 준법정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공직자라면 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李憲昇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물론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무려 14건인데 과속운전하세요? 왜 그렇게 많이 그랬지요? 급하게 다니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제가 차가 저희 집에 3대가 있고요. 제가 운전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것은 평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반성하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다른 건 다 좋습니다. 다른 건 제가 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민식이법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李憲昇 위원** 그게 2020년 3월 25일에 시행됐는데 그런데 후보자는 스쿨존, 어린이집 앞에서 무려 3번이나 속도위반을 했어요. 민식이법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알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는 경우에

는 가중처벌받는 건데 후보자께서는 상습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규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연 이런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송구합니다.

○**李憲昇 위원** 그다음에 또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과거에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의 공평한 배분을 강조하시면서 ‘토지 때문에 발생하는 과도한 부의 불평등을 막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적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결국 이 말은 부동산이 개인에게 사적으로 몰리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李憲昇 위원** 그러면 1가구 2주택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1가구 2주택은 뭐 자랑할 것은 못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리 못한 것은 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李憲昇 위원** 과거 문재인 정권 같으면 이게 공직후보자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알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과거에 많은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근무하면서 특별공급도 받고 아래 가지고 했는데 결국 이분들이 인사철 되면 본인도 이걸 정리를 해야만 다른 직으로 가고 또 승진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후보자가 본인이 평소 말씀하셨던 것하고 실제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세종시 아파트 이것 실제 공급권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조합원도 아니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조합원 아닙니다.

○**李憲昇 위원** 그러면 중간에 전매를 한 겁니까, 분양권을? 어떻게 된 겁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공급을 받은 공무원으로부터 구입했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전매행위가 정당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합법적이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매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이유가 타당하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李憲昇 위원** 전매는 언제든 가능하다? 그렇다면 현 법에 부동산 조합원 전매가 금지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허용이 된다 그 말씀입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 당시에도 금지된 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이 도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는 그 전매가 그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고 얼마든지 해도 되는 행위였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십니까? 부동산 전매에 대해서 본인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걸 제가 잘못됐다 잘됐다는 게 아니고.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전매를 악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李憲昇 위원** 그 당시 세종시는 분양권 전매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시장 질서가 굉장히 어지러웠습니다. 배우자께서는 아마 그 당시에 학교가 그 근처에 있어서, 직장 근처라서 거주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해당 단지 청약 경쟁률을 보면 이전기관 특별 공급은 한 6~7 대 1 정도 됐고 일반분양은 한 육십몇 대 1일 정도로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지금은 그 아파트 얼마 합니까? 보니까 호가가 13억 5000, 결국 후보자 가족은 이 아파트로 8억 4000만 원이 넘는 이득을 본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후보자가 주장해 왔던 부동산의 공평한 분배 철학하고는 완전히 다른 행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서 쉽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 당시에 저희 가족이 이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李憲昇 위원** 그렇다면 분양권 전매가 아니고 정당하게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시든지.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때는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세종시에.

○**李憲昇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전세를 하고 있을 때인지, 물론 후보자 부인 배우자께서 학교를 그쪽으로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식으로 그걸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가 없었다, 분양권을 전매 받았다고 했는데 그 말은 그 당시 입주하기 전까지는 그 아파트도 없었던 것 아니겠어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아닙니다. 아파트는 있었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러면 입주하고 나서 그걸 산 겁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제가 입주할 시점이었는데 그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신 공무원께서 서울 쪽에 근무를 하시게 돼서 그때 전매 금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분께서 팔 것을 결정하셨던 것 같고요. 저는 그 아파트를 산 것입니다.

○**李憲昇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지금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지금도 원칙적으로 저는 권력이 분산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기본적인 원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는데……

○**李憲昇 위원** 전속고발권 폐지를 하면 후유증 같은 건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맞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李憲昇 위원** 후보자께서 재야에 학자로 계실 때하고 막상 정부를 책임지는 공무원으로서 입각했을 때하고 사실 입장이 같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다시 추가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만 위원 후보자님, '재벌과 대기업의 반칙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바로잡고 평등한 시장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혹시 누가 얘기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후보자님께서 과거에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정권 공정위에서 스스로 감시·견제 기능을 좀 약화시켰었지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힘 빠진 공정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부당내부거래,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해 가지고 일부 재벌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그런 부의 대물림을 사실상 용인한 건데요.

그중에서 내부거래 공시제도도 바뀝니다. 2000년도에 도입됐던 당시에 100억 원으로 공시기준이 설정이 됐었는데 이게 2012년에 50억 원으로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에 24년 윤석열 정부 때 100억 원으로 다시 후퇴가 됩니다. 그리고 공시 횟수도 분기에 한 번씩 해야 됐던 것을 연 1회로 축소하고 위반 시 정정 과태료 감경까지 허용이 되지요. 이런 상황을 보고 공정위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개편으로 전체 내부거래의 25%가 공시 대상에서 빠진다. 그다음에 100억 원 미만의 내부거래 4개 중의 하나는 빠지게 된다 이런 건데요. 이런 공시제도 계속 유지할 건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공시제도는 저는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약화됐던 걸 다시 강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만 위원 그래야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방건설그룹이라고 있는데요. 작년 전체 매출의 65%가 계열사 내부거래, 그중에서도 오너일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대방건설은 내부거래 비중이 87.5%. 심합니다.

그리고 YTN 인수했던 유진그룹 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김용만 위원 여기가 올해 6월에 시민사회에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라는 곳인데 공정위에 사익편취 의혹으로 신고를 했어요.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유진그룹 오너일가가 자본금 2억 원으로 부동산 임대업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임대업체에서 매출의 90% 이상이 계열사 임대료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중에 이 부동산 임대업체 지분 약 19%를 유진그룹이 246억 원에 사 갑니다. 어마무시한 사익편취를 한 거지요. 그래서 사익편취 교과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고 이제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이브 그다음에 레저 기업으로 유명한 소노인터내셔널 여기도 각각 내부거래 비중이 30%, 20% 중반에 달합니다. 이게 결국은 이렇게 계속 내부거래가 유지가 되면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시장진입 어려워지고, 기회 분배뿐만이 아니지요. 이게 결국은 나중에는 보면 지금 국내 내부 거래액 규모가 35조 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35조 원 중의 약 90%가 수의계약입니다. 공정성, 투명성이 이미 결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하는 꼼수 잡아내는 데 위원장님께서 역할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윤한홍 위원장, 강준현 간사와 사회교대)

또 다른 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6월 공정위 조직에 대한 기능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런 지시사항에 맞춘 공식적인 발표가 없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좀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힘 빠진 공정위라고 얘기를 한 게 그냥 빙말이 아니고 실제 인력이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에서 조금씩 축소가 됐어요.

그 결과로 공정위 전체 사건 중의 36%가 처리 기한을 지나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불공정행위제재에 따른 과징금도 상당히 축소가 많이 되더라고요. 보면 21년에 약 1조 원이었던 게 22년에 8000억, 23년에 3900억. 그래서 지금 한 150명 정도를 대규모로 증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발표된 게 없어서 궁금한 겁니다. 국단위 조직이 신설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도급국 그다음에 가맹유통국이 신설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지금 인력이 더 확충돼야 될 부분이 그런 조사와 관련해서 하도급 가맹점과 관련된 부분 그런 쪽인 건 맞고요.

○**김용만 위원** 그러면 이 2개 국이 신설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나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정확한 조직개편은 제가 아직 파악을 완전히 못 했고요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김용만 위원** 그리고 아까 언급 드렸었던 내부거래 규제를 관리하는 곳이지요. 여기가 기업집단국 여기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거운데 이 기업집단국이 문재인 정부 시절 규모로 원상복구가 되는지, 조직개편의 의지를 지금 위원장후보님께서 갖고 계신지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내부거래에 대한 투명성 강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기업집단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면 실제 기업집단국이 다시 재편되는 거를 검토를 하시는 건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거는 아직 제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좀 더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모두발언에서처럼 강한 의지를 보여 주신 만큼 앞으로 하실 일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시장 관계자나,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냥 교수님으로서의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현장에 나와 있는 전문가분들이나 시장 자체에 대한 소통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져야만 저는……

후보자님께서 첫 번째 공정거래위원장님이신 거지 않습니까, 이번 정부의?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김용만 위원**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열심히 돋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식 위원** 네이버 부제소합의 부당 약관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보시면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전문기자 박동희 기자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냥 기자만 하는 게 아니라 MBC 스포츠플러스 대표예요, 스포츠 전문 언론사. 그런데 이분이 네이버가 청탁을 받고 기사를 잘 안 보이는 데다 배치했다라고 하는 폭로를 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네이버 대표님이, 그 얘기 듣고 하신 분인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이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그런데 21년도에 갑자기 네이버가 뉴스 제휴에서 제외를 시켜 버립니다, 뉴스 제휴사에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안 가르쳐 줘요.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네이버 약관 제19조 2항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께서 23년도에 지적을 합니다. 한기정 위원장이 ‘예, 불공정 약관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될 것입니다’라고 확인을 했어요.

제가 25년 2월 19일 날 공정거래위원장님에게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19조 2항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그다음 PT 보여 주세요.

제휴위원회가 갑자기 활동 중단해서 약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못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불합리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관이 없으니까 못 들여다보겠다.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전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21년에 있었던 일인데 4년이 지났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렇지요.

○**신장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사법원에다가 제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 올 4월 달에 이런 판결이 나와요.

밑의 검은색 부분만 보시면요,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및 법원조직법의 규정과 부제소합의 제도의 취지에 위반되어 무효다’, 약관 무효だ라고 얘기해요. 부제소합의 약관 무효だ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또 한 5개월 지났잖아요. 5개월 지났는데 공정거래위원장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갑자기 이 약관을 개정하고 9월 5일 오늘 10시부터 발효하겠다라고 하는 이메일을 네이버가 보냅니다. 지금 국회를 우롱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장난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전 조항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오늘 10시부터 발효되는 조항은 뒷부분이 없어진 겁니다. 위원장님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무서웠나 봅니다, 네이버가.

그리고 또 약관 심사기간을 보면요 쭉 보시다시피 2개월, 3개월 막 이래요. 그런데 네이버 스포츠뉴스 제휴 약관은 23개월 만에 변경된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앞에 약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온라인플랫폼 독점 대기업들 앞에서 약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좋겠고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신장식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약관 심사기간 신속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대리기사 이중 착취 문제가 있습니다. 카카오가 수수료를 처음에 20%를 받습니다. 그런데 백마진 같은 것 했나 봐요. 14~15% 돌려주는 제도 채택하고 있었어요. 최근에는 노조 등과 논의해서 실질 수수료 2.8%로 내렸습니다. 20%에서 2.8%까지 수수료가 막 내려왔어요.

그다음에 배달 라이더들도 볼까요? 배달 라이더는—이것도 문제인데—수수료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급여명세표를 안 줘요. 급여명세표 자체를 안 줍니다.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일해서 받은지를 몰라요. 이것도 문제지요.

대리운전 수수료 20%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 그런데 20%에 그치지가 않아요. 플러스 알파가 또 있습니다. 어떤 플러스알파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플을 보시면요, 지금 대리운전 하는 테가 카카오모빌리티가 최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CMNP 그다음에 티맵모빌리티…… 티맵 아시지요, SK?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신장식 위원** 로지소프트라는 테가 애플리케이션을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 한 사람, 한 기사 거예요. 2개의 핸드폰에 애플리케이션 4개를 깔고 다닙니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콜마너, 콜마너2, 콜마너3, 애플리케이션 3개를 따로따로 팔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로지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에 1만 5000원씩 해서 3개 깔면 월 4만 5000원,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의 핸드폰에는 2개까지밖에 못 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도 무조건 2개 들고 다녀야 돼요, 3개 깔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케어플러스라는 게 있어요. 이것 무슨 보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험이 아니에요. 케어플러스를 깔면 5초 먼저, 다른 대리기사보다 5초 먼저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 어떻게 안 깔겠습니까? 다 깔아야지, 남들보다 5초 늦게 콜 받는데. 보험이 아니라 이것도 사실상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다음 것 보세요.

결국 얼마를 더 받느냐 하면 20%에다가 애플리케이션 4개 깔아야 되니까 7만~8만 5000원 그다음에 핸드폰 2대 유지비용 이렇게 대리기사들이 대기업 카카오와 티맵에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공정한가요? 이것 반드시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신장식 위원** 실은 이것보다…… 또 1개 있어요. 이건 나중에 국감 때 조금 더 조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2분 더 주시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준현** 안 하신다고요, 이따가?

○**신장식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공정거래법 관련된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놓고 ‘불법과 절대 태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건설노조 가리키면서 ‘건폭’이라는 신조어 만들어 가지고 때려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정거래법을 적용을 했어요. 공정거래법상 이걸 사업자단체로 보고 담합행위로 보고 부당한 공동행위로 봤단 말이지요. 그런데 결국 무죄가 나왔습니다. 공정거래법으로 이것하면 안 된다라고 법원에서도 판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184명을 특별사면하게 된 거지요.

공정거래법을 여기에 적용하는 게 적절한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화물연대를 공정위가 뭐라고 처분했느냐? 파업 당시 집단 운송거부 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을 했고 법적 근거……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거예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라고. 노조가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화물운송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서 정당한 단체행동이라고 얘기를 받았고 건설노조 역시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 나왔어요. 공정거래법 이러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맞습니다.

○**신장식 위원** 건설노조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보는 것이 노동삼권 보장의 원칙과 완전히 충돌했고 이에 대해서 사법부도 대통령도 수정하는 행위를, 판결과 사면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밥은 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공정거래법에서, 노동조합에서 노무제공자는 사업자단체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개정법안을 어쩔 수 없이 냈어요.

이 법 개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사법부의 이번 판단이, 잘 판단한 것 같고요. 선진국들은 지금 ILO에서 계속 플랫폼노동이라든지 특수고용직 노동에 대해서 노동자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되고요. 특수고용직의 노동삼권이 준수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신장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후보자님, 혹시 굽네치킨의 편법승계 의혹,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 공정위가 조사 진행 중인 거 보고받으셨나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보고받았습니다.

○**김현정 위원** PT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PT를 보시면요 이게 굽네치킨의 지배구조인데요. 왼쪽은 2019년까지의 지배구조고 오른쪽이 2020년 12월 달에 바뀐 지배구조거든요. 저기 보면 굽네치킨은 홍철호 전 정무수석하고 그 동생이 공동으로 창업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닭을 도축하는 플러스원의 98.5%가 홍철호 전 수석의 지분이었고 크레치코, 닭을 유통하는 곳의 100%가 홍철호 전 수석의 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엔팜이라고 닭 부산물을 취급하는, 닭발이라든지 똥집을 취급하는 엔팜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엔팜이라는 회사는 홍철호 수석의 자녀들 소유입니다. 그런데 매출이 한 1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연 매출이.

그런데 그것이 2020년 12월 달에 소유 지배구조가 어떻게 바뀌냐면 중간에 있는 크레치코를 플러스원에 합병을 시킵니다. 둘 다 홍철호 전 수석의 회사잖아요? 자기 회사끼리 합병을 시킨 다음에 엔팜을 크레치코랑 똑같은 사명으로 바꿉니다. 그렇지요? 바꾼 다음에 크레치코에서 취급했던 닭 유통과 관련된 사업을 일감몰아주기로 100% 다 자녀 회사인 현재의 크레치코 회사한테 넘긴 거예요. 일감몰아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은 편법적인 승계를 위한 일감몰아주기다라는 의혹을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했고 관련해서 직권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정위에서 6월 초에 결과를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했는데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이 없었고 경쟁제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면서 조사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엔팜이라는 회사가 크레치코로 바뀌면서 조그마한 부산물 회사에서 닭 유통을 100% 다 취급함으로 인해서 매출이 1400억이 넘습니다. 140배의 경제적 이익이 더 그쪽으로 주어졌는데 이것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아니다라고, 조사를 이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저는 설득력이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다음 PT 한번 보시면 공정거래법 45조에 근거해서 해석을 했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45조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거기에 분명히 해당된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재조사하신다고 했어요. 그 내용을 살펴봐 주시고요.

다음 PT 보시면, 만약에 이게 공정거래법 47조,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감몰아주기로 규정하고 있는 저 내용에 보면 명확하게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자산이 5조 원 이상이라고 하면 일감몰아주기 해당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5조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렇게 해석을 한 것인데,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서 자산 5조 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에 의한 편법적인 일감몰아주기, 이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초에 공정위에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합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저기 나와 있잖아요. 중소기업 외식업 나와 있고 외식업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적극 감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굽네치킨의 사례가 전형적으로 저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스스로 공정위에서 약속해 놓고 저렇게 모순된 답변을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이런 행위가 제재 없이 용인되면 시장 전반에 중소·중견기업은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왜곡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혹은 홍철호 전 수석이 전 정권의 정무수석이었기 때문에 봐주기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덧붙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정확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임명이 된다면 이 사건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유사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것인데 이것도 공정위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요새 계속 등장하면서 협행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규제의 사각지대가 정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 우리 당의 을지로위원회에서 책임위원을 맡아서 조사하다 보니까 정말 심각

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도처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공유 칵보드 업체 중에 ‘더스윙’이라고 있어요. 더스윙 사례가 있는데 파트너라는 이름으로 점주는 모집하지만 실상은 가맹사업과 똑같습니다.

저 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가맹사업의 기준이 왼쪽의 다섯 가지에 해당되면 가맹사업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스윙 같은 경우에는—오른쪽에 죽 있는데—그 가맹사업 기준 요건을 충족하고도 넘쳐요. 넘치고, 실제로 활성화율이라는 기준을 강제하면서 점주들의 영업 방식을 통제하기도 했고 또 일방적인 프로모션으로 사실상 가격도 통제를 했어요. 심지어 점주가 항의를 하니까 계정을 삭제해 버리고 사업 자체를 아예 통제해 버리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회사가 프로모션이나 수수료, 통신비 등은 다 점주에게 전가하고 수익은 본인들이 다 가져가고 그래서 많은 점주들이 지금 현재 투자금 회수도 못하고 적자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스윙은요 점주들이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는 측면으로 지금 계속 법망을 피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종업계, 칵보드 동종업계의 모든 회사들은요, 더스윙을 빼고 업계의 모든 회사들은 가맹사업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만 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만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법의 혀점을 이용해 가지고 본사의 책임은 회피하고 이익만을 위해서 점주들인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는 불법적인 행태, 이것을 공정위가 방지하면 저는 국정과제는 구호에 그칠 뿐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신고된 사안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직권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준현** 마무리하실래요, 2분?

○**김현정 위원** 예.

질의할 게 많은데 공정위 과징금과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가지고 하도급법이라든지 또는 가맹사업법이라든지 대규모유통업법 등 여러 법률에 기반해서 해당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매년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김현정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부과된 과징금이 지금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피해를 받은 이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렇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래서 제가 후보자님께 서면으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왔는데 그 답변에서 공정위 과징금에는 부당이득 환수 성격도 있는 만큼 과징금 일부를 피해 구제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김현정 위원** 차트 한번 보시지요.

보시면 저게 작년 12월 달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피해기금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85.9%가 미흡하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또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기업도 92.7%에 달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서면답변서를 보여 드린 이유는, 궁정적으로 답은 하셨지만 구체적인 답변이 안 돼서……

미국에 페어펀드 제도라는 것 있는 것 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김현정 위원**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라든지 사기판매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자본시장에 물의를 일으킨 금융사로부터 징수한 민사제재금 등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들 같은 경우를 벤치마킹해서 제가 법안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이러한 불공정 피해 구제를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기금을 이용해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궁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소비자 피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운영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겠지만 기금 설치에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현정 위원** 최근 4년 동안에 과징금으로 공정위에서 부과한 것이요 2조 8000억입니다.

그런데 피해받은 기업들이나 대상 기업들은 그것을 본인의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라는 것을 감안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강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후보님.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김상훈 위원** 최근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분쟁이 봇물 터지듯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 앞서도 몇 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겠지만 차액가맹금이라고 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김상훈 위원** 이게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적으로 구입하도록 요구하는 품목을 공급하면서 얻는 경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물류비도 포함되어 있고 인건비도 포함

되어 있고 보관비, 가맹본부의 이익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공정위는 2017년도에 관련 내용을 체크하고 정비할 수 있는 실태조사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런 분쟁에 대해서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차액가맹금 분쟁이 현재 17개사의 점주 2500여 명이 출소송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화면 좀 부탁해요.

(영상자료를 보면)

제도는 지금 잘 정비를 해 놨습니다. 보세요. 2018년도 3월에는 가맹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으로 지금 규정을 해 놨어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래서 가맹 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는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와 수준 등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잘해 놨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김상훈 위원** 2024년도 1월에는 가맹법을 개정해 가지고 필수품목 종류와 그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신설해 놨어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잘했습니다.

역시 같은 해 6월 달에는 가맹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가맹점주와 미리 협의할 의무를 가맹본부에 부과해 놨어요. 역시 법적으로 잘 정비를 해 놨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공정위는 2017년도 이후부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다가 2022년도에는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정도만을 하고 관련 제도에 따른 위법·부당한 거래사항에 대해서 점검 그다음에 패널티를 준다거나 하는 시정조치 이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좀 방관을 해 왔다.

이 도표 한번 보세요. 이게 2018년도 초반에 한 2건 정도 해 놓다가 2024년 말부터 한 6건 정도의 시정명령 과징금 조치가 있습니다.

그다음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이것은 그간에 차액가맹금에 대해서 가맹법 준수 확인에서 7~8년간 사실상 공정위가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태가 벌어졌느냐 하면 피자헛이 2024년도 9월 달에 차액가맹금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가맹점주들에게 패소합니다. 그제서야 뒤늦게 공정위가 뛰어들어 가지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관련 주요 소송사항이 나와 있지요.

치킨은 BHC, 교촌, 푸라닭, BBQ, 굽네 뭐 말할 것도 없고 패스트푸드, 카페, 디저트, 한식, 도소매, 서비스, 이제 주요 소송들이 봇물 터지듯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로펌 시장만 배불려 주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는 사실은 소송의 실익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지고 갈래를 타 주는 역할을 공정위가 해 줬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공정위가 소홀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간의 공정위 입장은 이런 거였어요. 차액가맹금소송은 가맹사업법이 아닌 민법에 근

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다 이 정도로 공정위가 인식하고 ‘여기는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는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했던 게 저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봅니다.

이제 공정거래위의 수장이 되시는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느 특정 브랜드에 의존해서 가맹점주로서의 일정한 이익을 기대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드는데 공정거래위가 더욱더 관련 법령을 통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점검하고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고 시장질서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위원님, 공정위가 그동안 방관자적 입장을 했다는 질타, 아주 가슴 깊이 새겨듣겠고요. 지금 최근에 개선된 법률들이 현실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태를 조사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앞으로 제도개선 효과와 보완사항이 없는지 철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위원** 로펌 시장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이 출소송이 자기들에게는 커다란 수익거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어요. 불필요하게 출소송을 통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시달리지 않도록 공정거래위가 더욱더 해당 사항에 대한 제도적 점검, 보완·처분 조치가 일목요연하게 뒤따라 줘야 됩니다. 그래야 가맹점주들이 변호사들에게 목매달면서 불필요한 소송비, 소송 기간을 낭비하지 않고 본인들에게 보장된 정당한 이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공정위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후보님의 새로운 각오를 좀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덕 위원** 후보자님, 쿠팡 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민병덕 위원** 쿠팡이 최근 공정위에서 여러 개의 제재를 받았는데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쿠팡에.....

○**민병덕 위원** 많습니다. 최저가 강요해서도 받았고 불공정약관으로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알고리즘 조작으로도 받았고 자사 상품 우대행위로도 받았고 그다음에 후기·별점을 인위적으로 작성해서도 받았고, 그래서 공정위에서 또 제재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는 질의를 넣어 놨었는데 혹시 ‘올 셀렉션(all selection)’ ‘다이내믹 프라이싱(dynamic pricing)’에 대해서 들어 본 적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알고리즘을 이용한 프라이싱.....

○**민병덕 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납품업자가 있으면 납품업자가 취급하는 모든 상품을 쿠팡에다가 납품해야 된다는 겁니다. 쿠팡에 납품하려면 납품업자가 생산하는 모든 상품을 납품해야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상품은 쿠팡에다 납품하고 다른 상품은 다른 데

도 납품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모든 상품을 납품해야 된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독점거래권을……

○**민병덕 위원** 예.

그리고 다이내믹 프라이싱이라는 게 뭐냐면 AI로 다른 유통상점들의 가격을 돌립니다. 쿠팡보다 낮은 데가 딱 발견되면 그 가격으로 쿠팡의 가격을 조정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상점이 가게를 폐점을 하려고 엄청 싸게 팝니다. 그런데 그게 딱 걸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납품업체의 가격을 거기에 맞춰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묻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경우도 발생하겠지요.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쿠팡에 물건을 파는 기업들이 어렵겠지요.

○**민병덕 위원** 그리고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다른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빨라 보기로 하고 뭐도 다 하고 그리고 쿠팡에서 딱 검색을 합니다. 쿠팡이 더 싸면 쿠팡으로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들이 다 죽는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증거가 없어요. 메일이나 래터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알겠습니까? 납품업자들이 제게 말을 하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혹시 공정거래법으로 해결 가능할까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뭔가 담합이나, 가격 담합 이런……

○**민병덕 위원** 엄청나게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정거래법으로 못 하면 공정거래법 필요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아직까지는 법률 공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민병덕 위원** 예, 있습니다. 국감 때 다시 할 거니까 더 의논을 해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알겠습니다.

○**민병덕 위원**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21년 폐이스북입니다. ‘12살 때 일하던 목걸이 공장이 하룻밤 새 사라지면서 3개월 치 월급을 떼어서 평평 울었던 기억이 난다’라고 써 놓으셨습니다.

임금 체불은 노동자 개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전체의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어제 어떤 신부님은 성경에도 인간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이 임금 체불이라고 나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입니다.

또 볼게요. 우리나라 지난해 임금 체불이 2조 448억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5월까지 1조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맞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요 GDP 대비 미국보다 143배입니다. 일본보다 48배. 뭐니까, 우리나라?

그런데 이게 건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발주자가 있고 그다음에 시공사가 있고 시공사 밑에 하청업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맞습니다.

○**민병덕 위원** 문제는 발주자는 발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있습니다, 시공사한테

돈을 안 주면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공사는 하청업체한테 돈을 주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요즘 그러지 않잖아요. 먼저 일은 선불이고 그다음에 임금은 후불인데 이것을 체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주자가 하청업체한테 직접 지불하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 하는지에 대해서, 이것이 노동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정거래법상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불법 다단계 하도급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챙기셔야 된다. 아까 말했던 노동기본권의 핵심 중의 핵심은 일했는데 살아서 돌아오는 것 하나하고 일했는데 돈을 못 받는 것, 이것이 기본권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민병덕 위원** 그다음에요 우리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이면 기업집단을 뭐라고 부르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공시……

○**민병덕 위원** 공시 대상 기업집단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이러저런 규제들을 하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민병덕 위원** 사익 편취, 내부거래 공시 이런 것을 합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던 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법들의 규정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5조 원 이상이면.

그런데 5조 원 이상에 대해서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아실까요? 주력 업종이 금융업인 경우에는 이 지정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민병덕 위원** 그래서 문제는 이 주력 업종이 사모펀드일 때 문제가 됩니다. 사모펀드가 가장 주력 업종 정점에 있고 사모펀드가 다수의 회사들을 사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계열사를 이끄는데 이곳은 5조 원 이상이더라도 이 기업집단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룹 전체가 금융업이라는 투명 망토를 쓰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를 피해 다니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발견되느냐면 MBK에서 발견됩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렇습니다.

○**민병덕 위원** MBK의 문제, 이런 구조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감 전까지는 이 문제 해결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민병덕 위원** 할 얘기가 이렇게 많아요. SNS에 허위·과장 광고 이런 것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70%가 그냥 경고에 그칩니다. 허위·과장 광고를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요.

그런데 진짜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어떠냐면 이 가짜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진짜가 가짜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먹는 위고비라든지……

저 2분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준현** 예.

○**민병덕 위원** 천연원료 화장품 이런 것 있으면, 먹는 위고비 식품인데 의약품처럼 선

전하는 거거든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렇지요.

○**민병덕 위원** 합성인데 천연처럼 하다 보니까 다른 진짜 천연을 만들어 냈던 데들이 피해를 당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허위·과장 광고가 팬히 나오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허위·과장 광고를 인플루언서들이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처벌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잘 못 하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 이유는 일이 많기 때문이잖아요.

PPT를 한번 보시지요.

영국 정책 전문지에서 분석을 했어요. 우리나라 카르텔 담합 사건이 평균 670일이다 그리고 독과점 사건이 56개월인데 뉴질랜드나 대만의 6배다, 이렇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 충원 말씀하셨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민병덕 위원** 저는 이것을 속도를 빨리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서울이 너무 집중돼 있습니다, 말씀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맞습니다.

○**민병덕 위원** 서울이 다른 데에 비해서 한 2배 정도입니다. 그런데 1인당 사무처리 건수가 2.5배입니다. 당연히 길어지겠지요.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강원을 나눠야 된다. 서울·강원, 경기·인천 이 정도로 나누는 것도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하면 공정위 권한의 일부를 지자체에 나누는 겁니다. 공공부문 입찰담합 신고, 누가 잘하겠습니까? 지자체가 잘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기에 1차로 넘기고 그리고 정 불편하면 그러면 불복절차를 공정위에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민병덕 위원** 그래서 공정위는, 후보자님은 공정위 조직을 위해서 있는 분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있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안으로 인사고파로 가점을 주면 대안이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 처리한 사람한테 인사고파로 가점을 주면 된다라는 대안을 공정위에서 내셨어요.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제가 이렇게 많은 문제를 제기했고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빨리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위에서 내세운 대안이 사건을 빨리 처리한 직원에게 인사고파에서 가점을 주는 방식, 이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후보자님을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이유는 이런 문제를 관료주의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해결하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선진적 시장시스템 제발 만들어 주시라, 같이하자라는 말씀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제안들을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강준현 답변 다 하신 거지요, 후보자님?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민병덕 위원님 진짜 많이 알지요? 제가 정무위 와 가지고 첫날 신고할 때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제가 한 시간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나마 질문이 가능한 그런 위원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알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공정위원장 되시면 어려운 일에 봉착할 때마다 민병덕 위원님을 찾아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그리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저는 후보자님께 말씀을 많이 하기보다는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한 2분 더 해서 이 질의로 마칠까 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께서 플랫폼 업체 수수료 상한제 관련해서 결국은 책임의 전가가 일어난다, 소비자 그리고 라이더들에게. 그러면 이 상한제와 같은 정말로 필요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후보께서는 보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지금은 제도개선은 필요합니다.

○박범계 위원 그러면 책임이 전가되는 또는 편법적으로 제도를 우회한다든지 편법적으로 위반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어떻게 궁극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저는 우선 수수료 상한제를 할 때 수수료의 범위에 광고비를 포함시켜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배달노동자가 별개 되는 배달료 있잖아요, 배달료는 거기서 포함시키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달료와 관련해서는 뭔가 최저임금과 같은 최소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 결국은 3축을 하나의 패키지로 해서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책임 전가가 일어나는 현상까지 다 막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렇게 하면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기업메시징서비스 관련해서 법정 공방 8년까지 갔는데 이미 시장은 망가지긴 망가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중소업체가 이겼어요, 통신3사를 상대로 해서. 통신3사가 대리업체를 만듦으로써 일종의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 혹은 탈법 또는 우회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법원 판결 취지와 다르게 자기와 친한 업체를 중간 대리업체로 지정해서 훨씬 저가로 페이버(favor)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이 안 되겠지요?

(강준현 간사, 윤한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이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위반하는 거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박범계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간접 사실을 종합해 보면 그것은 여전히 위법이다, 그것은 탈법이 아니고 위법이다라고 규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정위가 궁극적인 힘을 발휘하려면 특정한 케이스에서, 그것이 8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특정한 케이스에 있어서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박범계 위원 우회할 수 있는 우회로를 그냥 열어 놓는다든지 또는 문제의식이 약화돼 가지고 ‘그 정도면 봐줄 만하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동의합니다.

○박범계 위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소위 판단 능력과 그 이후의 사법적 절차에서의 대응 능력이 세야 된단 말이에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알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런데 정권마다 왔다 갔다를 하긴 했습니다만 예전에는 과연 공정위가 더 정의로운가,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소위 자연적 자유라는 측면에서 어디가 더 정의로운가, 공정위인가 그 이후의 공정위의 결정에 대한, 처분에 대한 사후 법원에 의한 사법 절차가 정의로운가. 왔다 갔다 했어요, 공정위가 정의로울 때도 있고 법원이 더 정의로울 때도 있고.

그런데 일관되게 문제점은 하나 있어요. 공정위의 소송 대응 능력이 약하다, 이 점 알고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저는 아직 그 부분 잘 모르지만 면밀히 새겨 두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공정위원장께서 아무리 전문성이라든지 개혁성이라든지 말씀하시는 애덤 스미스가 얘기하는 소위 자연적 자유 이상을 지향하더라도 공정위 직원들과의 현실적으로 봉착하는 문제점…… 그 이후의 사법적 분쟁 과정에서 저쪽은 대기업체들이 많겠지요. 저쪽은 대형 로펌으로 선임해 가지고 물량 공세를 하는데 우리 공정위 공무원들은 그러기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이 문제에서 판판이 깨져 나갈 때 결국은 공정위가 갖고 있는 그 의지나 능력이나 이런 문제들이 경시될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래서 이번에 역량을 확충하고 인력 확충하면서 이런 로펌에서…… 공정위가 로펌이 훨씬 더 좋은 인적 역량을 발휘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돌지 않게끔 공정위의 인적 역량을 충분히 확충해서 그것이 사법적 대응……

○박범계 위원 그런데 그 말씀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주병기 후보자님 검증한다고, 인사청문 한다고 제가 잘 아는 공정위 관련 소송 전문 변호사한테

공정위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공정위 우리가 알기로는 제일 센 국가기관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라고, 딱 한 가지만 짚어 달라 그러니까 ‘의원님, 공정위 세지요. 세긴 샌데, 법원에 가면 판판이 깨지는데 그리고 재판도 한 10년씩 하는데 뭐가 셉니까?’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 1개라도…… 아까 돌 하나 얹어 놓는 자연적 자유, 공정한 자유 그 지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실행 능력, 전문 능력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명심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케이스인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했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박범계 위원** 그 조건이라는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은 행정법상 일종의 부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관을 지키지 않으면 당해 행정행위, 즉 기업결합 승인행위는 취소가 돼야 돼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 부분은 제가 법률적으로 확인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박범계 위원** 부관이라는 게 행정법적인 조건인데 그 행정행위의 조건이 달성되지 않으면 그 행정행위는 무효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러이러한 조건을……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합병을 하는데 좌석 공급을 축소하지 말라. 너희들 합병했다고 그래서 좌석 공급을 축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또 좌석의 평균 운임 인상 한도를 딱 지워 줬는데 그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조건을 붙여서 승인을 했는데 이걸 다 위반해요. 위반하면 공정위는 뭘 하느냐? 이행강제금 정도 부과하겠지요. 많은 액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결합한 그 두 기업 입장에서는 결합이라는 그 행정행위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철회되지 않는 이상 이행강제금 정도는 우리가 내고 말지라고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EU 같은 데는 이러한 조건, 즉 부관을 이행하지 않는 행정행위는 그 성격상 당연히 취소·철회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공정위원장 부임하시면 궁극적으로 공정위의 오소리티(authority), 즉 권위의 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이행력의 담보 문제. 법원에 가면 무조건 공정위 처분에 대해서 소송 제기하고 집행정지 받아 내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박범계 위원** 그러면 몇 년 뒤에나 결론이 나오, 집행정지 딱 끝나 있고. 그러면 공정위의 권위라는 것이, 국가의 공신력이라는 것이 없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맞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박범계 위원** 그래서 이 조건과 부관을 지키지 않은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 철회, 재

심사, 이 제도도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 후보께서 어린이보호구역 왜 만들었는지 취지 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강민국 위원** 교통안전에 취약한 우리 어린이들을 어른들로부터 특별히 보호하고자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특히 후보는 지금 수십 년간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렇지요? 한 아이의 아버지기도 하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강민국 위원** 22년 9월 30일 서울인현초등학교 앞의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과태료 부과받고 또 더해서 인현초등학교 건너편의 스쿨존에서 또 하고 세종시 소재 어린이집 앞에서 또 하고 과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앞에서 또 하고 심지어는 과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앞에서 이미 속도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아서 납부까지 했으면서 4개월 뒤에 똑같은 장소에서 또 스쿨존 속도 위반을 한단 말입니다. 왜 그랬어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제가 부주의……

○**강민국 위원** 아무 그냥, 뭐 얘들 보호도 상관없는 거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부주의했었습니다.

○**강민국 위원** 예?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부주의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강민국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차량은 아이들을 위협하는 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흥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병기가 돼요, 병기가.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위험한 병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강민국 위원** 그리고 후보님 보면 외부 강의 미신고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 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경향신문 등 외부 강의 미신고, 교수 하실 때. 그리고 서울대법 위반 소지도 있어요. 지금 확인된 것만 해도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열다섯 차례 겸직했지요? 단한 차례 겸직 허가도 받지 않으셨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제가 그걸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강민국 위원** 몰라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어떤 겸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민국 위원** 본인이 어떤 겸직도 몰라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강민국 위원** 나한테 자료 요구하세요, 다 드릴 테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아, 학회……

○**강민국 위원** 그리고 후보가 보면 앞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소득세법 위반, 그렇지요? 자동차관리법 위반도 있대요, 보니까. 자동차 검사도, 5년간 지금 그것도 안 하고, 그렇지요? 도로교통법 최근 5년간 열일곱 차례 위반, 지방세법 위반, 아까 말씀드렸지만 5년간 스물아홉 번이나 체납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지금 다 보고 계실 건데 이것 불공정거래위원장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강민국 위원** 맨날 송구하면 어떻게 해.

자, 만약에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었다 치자고요. 그런데 만약 많은 기업들이 공정거래법 위반, 뭐 하도록 법 위반 등등을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약에 기업들이 법을 수차례 위반했어요. 그런데 그 기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바쁜 일정으로 몰랐다, 송구하다, 미숙해서 실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주병기 후보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러면 기업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담당자가 미숙해서 실수했다, 우리 기관장도 그랬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게 답변해야 돼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건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민국 위원** 이유가 안 되지, 그게. 지금 앓아 계신 것 그 자체가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송구합니다.

○**강민국 위원** 아니, 교수로서는 훌륭하신 분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잖아.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공정거래위원장 될 거라는 생각 안 하셨겠지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뭐 할 말이……

○**강민국 위원** 아니, 왜 이랬어요, 그래? 너무 심하잖아. 내가 어느 정도만 해도 예이,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죄송합니다.

○**강민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공정거래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하는 기업에 그냥, 기업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송구하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끝나지 않습니다.

○**강민국 위원** 후보,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입학해서 다니다가 89년 3월에 다시 서울대 경제학과로 입학하게 되지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강민국 위원** 그것 왜 그러셨어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때 제가 좀……

○**강민국 위원** 제가 좀 알아보니까 마르크스 경제학에 아주 심취했던데,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때 관심이 많았고요, 철학……

○**강민국 위원** 지금 마르크스 경제학이 현재 대한민국 경제질서에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공정거래위원장후보로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마르크스 경제학 자체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민국 위원**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세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마르크스 경제학 자체가 아니더라도 같은 의문에 답해줄 수 있는 여러 사회과학적인 발견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강민국 위원** 대한민국헌법 제9장 119조 1항은 아시지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강민국 위원** 그러면 이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시장경제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는 동의하시나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물론이지요.

○**강민국 위원** 동의하신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럼요.

○**강민국 위원** 자, 온라인플랫폼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법안 위원장이고 지금 계류되어 있거든요. 상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뭐였지요?

○**강민국 위원**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온라인플랫폼법은 필요……

○**강민국 위원** 지금 상정되어 있다고, 우리 법안 소위에.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러니까 갑을 관계 개선에 관한 법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를 말씀……

○**강민국 위원** 아니, 그 전체적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기고하신 것도 있고,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민국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강민국 위원** 그러면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 중 어떤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둘 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문에서는 사전 규제를……

○**강민국 위원** 이것은 제가 후보님한테 추궁하려는 게 아니고 후보님의 철학을 물어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말씀하시라고……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둘 다 필요합니다. 둘 다 필요하고……

○**강민국 위원** 이것은 뭐 내가 아무 탓도 하는 게 아니고 정답이 없는 거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러니까요. 사후 규제는, 아까 이강일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사전 규제에 대한 비판 중에 가장 중요한 비판이 이것이

기업의 혁신을 막을 수 있다라는 비판인데요. 그런데 저는 어떤 혁신을 우리가, 우리 산업이 추구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사전 규제냐 사후 규제냐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배달앱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혁신이라기보다는 선발자가 네트워크 효과를 이용해서 작은 혁신만 가지고서 지대를 추구하는 그런 시장에는 저는 사전 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강민국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윤한홍** 예.

○**강민국 위원** 후보님, 이번에 우리 한미 무역협상,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고 왔잖아요. 그런데 6000억 달러를 미국에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투자 말씀……

○**강민국 위원** 앞의 3500에 지금 1500 다 합치니까 6000억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한 800 몇십 조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아닙니다. 3500 안에 1500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내가 아는 것하고 다른데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3500 안에 1500……

○**강민국 위원** 어쨌든 3000억 달러라고 치더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3000억 달러를 대한민국에 유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국에 갖다준 게 자랑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지금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그 질문에 답드리기가……

○**강민국 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후보가 그 관세 전쟁을 하려고 한 치의, 암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글을 기고한단 말입니다, 후보가 그 민감한 시기에.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미국 사회의 병폐를 가리려는 술수다. 트럼프의 관세 갑질은’, 갑질이라고 표현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마치 동맹을 보호 서비스 상품으로 여기는 듯하다’ 이것 기고하신 것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나중에 또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3000억 달러를 대한민국에 유치한 것도 아니고 미국 갖다주면서까지 굴욕적인 외교를 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그러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장후보라는 분이 이런 글을 기고한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비판하신 점은 동의하고요. 계속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글을 쓴 것은 지명되기 이전에 쓴 글인데요. 공교롭게 제 글이 탈고되고 나서 지명이 돼서 제가 그 글을 취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글의 요지는 지금 트럼프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국 경제 발전의 혜택을 골고루 분배하지 못하는 문제를 관세 문제로 탈바꿈시켜서 외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미국 정치와 미국 경제의 문제를 짚은 것이라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저뿐만 아니라 미국의 많은 경제학자들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 칼럼의 주된 요지는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지금 이런 식의 거래만 하지 말고 동맹으로서의 신뢰를 강화하는 외교적 성과 쪽으로 목표를 바꿔 봐라. 그래서 한반도 평화라든지 북·미 어떤 교류라든가 한반도 평화 쪽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 쪽에 좋은 성과를 내면 트럼프 외교에 외교적 성과로서 큰 이익이 될 것이다. 트럼프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제안했고요. 실제로 그렇게 정상회담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좋은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한홍 조금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강민국 간사님이 지적한 것은 대통령은 가서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대기업들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와중에 후보자가 그런 칼럼을 쓴 건 맞지 않느냐 그런 지적 같고요.

우리 칼럼 쓴 걸 트럼프나 트럼프의 최측근들이 읽어 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렇지 않지요.

○위원장 윤한홍 그건 국내용이잖아요, 그 칼럼은.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국내용인데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대기업 다 데리고 가서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우리 강민국 간사님 지적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저는 강 위원님의 지적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했다가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한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수 위원 후보자님,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주요 프랜차이즈의 이중 가격제에 대한 사례를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유동수 위원 이렇게 이중 가격이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하고 있는지 이 판단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수 위원 소비자의 후생적 관점에 대해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공정거래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5호 후단에 보면 소비자의 이

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지위 남용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유동수 위원** 그런데 이 5조에 따른 시행령이 제정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정책이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행령 개정이 꼭 필요한데 시행령이 뒤따라 있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알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래서 이 행위를 판단하려고 하면 플랫폼 수수료가 사회적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수집하고 모니터링이 필수다 그거예요. 이걸 해 달라고 지난 국감 때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기정 위원장은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서면답변에 보면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취임하시면 이것 좀 모니터링하거나 아니면 민간데이터를 이용해서 소비자의 후생과 배달수수료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행령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유동수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사회 후생 효과를 파악해야지 적정성 수요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후보자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도의 히스토리는 알고 있어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전에는, 2017년도에는 얼마였지요? 그게 한 10조였습니다, 그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2017년도…… 5조~10조……

○**유동수 위원** 5조에서 10조로 2017년도에 상향이 됐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10조지요.

○**유동수 위원** 10조였는데 2024년도에 좀 바뀌었잖아요. 그게 GDP의 1000분의 5로 바뀌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대략 10%, 대략 10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퍼센트, 비율이.

○**유동수 위원** 그게 원래 10조였는데 이걸 GDP하고 연동시키면서 좀 경제 상황에 대응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10조 이상에서 24년의 경우는 10.4조가 됐고 25년에는 11.6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시대상기업집단 이거는 그냥 5조에서 지금까지 머물고 있거든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이렇다 보니까 2009년도에 48개였는데 지금은 92개입니다. 좀 많아졌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GDP에 연동해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존경하는 김상훈 의원님이 법안도 냈거든요. 이걸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물론 또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줄어들면 시장 감시 기능이 좀 약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아마 공정위원장 되시면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유동수 위원** 다음에는 코인거래소 독과점 문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코인거래소 원화 기준 거래 규모가 2433조입니다. 이게 코스닥보다 커요. 코스닥이 한 2000조 되고 유가증권이 2600조인데 이게 2400조예요.

그런데 거래소를 보면 9월 4일 기준으로 보면 업비트가 63.4%고요, 빗썸이 33.6%입니다. 둘이 합해서 97%예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맞습니다.

○**유동수 위원** 이 시장을 어떻게 보세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거래소와 관련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시장은 분명히 공공성이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유동수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말씀하십시오.

○**유동수 위원** 그래서 이게 12월 3일 날 계엄 났을 때 평소 거래의 10배 정도 증가하면서 거의 1시간 이상씩 거래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거래소의 독과점 구조를 좀 깨야 된다.

지금 2025년도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독과점 고착화로 효율성이 저하된 분야에서의 시장구조 개선방안 마련’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래서 항상 사후적 제재가 문제가 아니고 사전적으로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고맙습니다.

○**유동수 위원** 마지막으로 공정위 인력 부족 문제를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유동수 위원** 후보자님이 생각할 때 어느 분야가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공정위의 여러 과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아까 가맹점이라든지 하도급 이런 쪽과 개인적으로 저는 경제분석에 관한 역량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수 위원** 예, 정확하게 잘 보고 계신다고 봅니다.

이게 김상조 위원장 발언인데요. 2017년도에 한진그룹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소송 패소 후에 김상조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법리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분석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한다’, 경제분석이 사실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여러 가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인수 과정 문제라든지 대한항공 아

시아나 합병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한 2분만 더 주시면……

경제분석이 가장 중요한 이슈고 또 우리 후보자님도 8월 14일 날 지명 직후에도 ‘경제 분석과 데이터 생산·분석 역량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맞습니다.

○**유동수 위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지금 현재 공정위의 경제분석과에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지금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지금 9명입니다. 9명인데……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행정직……

○**유동수 위원** 그중에 1명, 정원이 9명인데 1명 못 채워 가지고 8명 근무하고 있고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런가요?

○**유동수 위원** 박사급이 6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박사급이 6명……

○**유동수 위원** 그리고 근무기간도 되게 짧습니다. 제일 오래 근무한 사람이 6년 있기는 한데 근무기간이 되게 짧아서 전문적 지식을 갖기 어렵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 구성으로는 경제분석 역량을 충분히 갖추기 어렵다……

지금 해외 사례를 봐도, 해외 경쟁 당국의 경제분석 조직들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굉장히 탄탄하고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맞습니다.

○**유동수 위원** 이 부분 좀 더 쟁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로서는 경제분석과가 경쟁제한적 제도의 경제효과 분석, 독과점 요인 분석 등 제도개선 이 정도 하고 있고 소송 지원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맞습니다.

○**유동수 위원** 이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 조직 확장 더 하시고 더 전문성 길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제안 감사합니다.

○**유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柳榮夏 위원** 위원장님, 저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조금 하고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예, 1분 넣어 주세요.

○**柳榮夏 위원** 후보자님, 아까 저희 동료 위원께서 부동산 계약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출하셨다는게 제출된 게 없어요. 지금 주신 게 뭐냐하면 부동산 계약서 뒤편에 첨부된 그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계약금액이 얼마고 중도금이 얼마고 잔금이 얼마고 이게 기재된 그런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계약서 뒷면에 첨부된 서류예요.

그래서 혹시 착오가 생겼을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있으면 뒤집어 말

하면 앞의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의 끝나기 전까지, 오후에 또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柳榮夏 위원**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제 서면답변에 이렇습니다. ‘본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정의로운 역사의 길을 찾는 수호자라고 평가한다’,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 아름다우려면 행동도 같이 아름다워야 돼요. 말만 아름다우면 헛말입니다.

제가 후보자님의 행적을 보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정부 위원회에도 여러 번 참석하시다가 주도적으로 한 게 20대·21대 대선에 이재명 후보의 싱크탱크 성공포럼, 세바정 2022, 성장과 통합 이렇게 참여하셨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위도 참여하셨고 아까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경제 멘토라고도 불린다고 보는데 저는 학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살았다가보다는 정치적으로 한편에 서서 편향성을 가지고 반기업 정서와 반시장적인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분으로 보여져요.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화면 띄워 보시지요.

2025년 4월 15일 오마이뉴스 기고문입니다. ‘보수를 자처하는 정치인 중 절대다수가 행정부의 오만과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입법부 일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되어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짓밟는 폭력을 두둔했다’ 이렇게 기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나라의 보수 정치를 대표한다는 대다수 정치인이 내란의 우두머리를 비호하고 내란세력의 복귀를 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여기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짓밟는 폭력을 두둔했다’ 이게 12월 3일 비상계엄을 두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국민의힘에서 비상계엄을 두둔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했네요. ‘윤석열 일당이 북한군을 자극해 전쟁 위기까지 초래했다는 외환의 혐의도 짚다’, ‘이런 명백하고도 중대한 반헌법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랬는데 지금 특검에서 조사 중인데 무슨 명백하고 결정적인 증거 있어요? 이렇게 말을…… 쓰시려면 학자로 쓰시는 것 좋아요. 그러면 근거를 갖고 쓰셔야지.

자, 여기서 내란 우두머리를 비호하고 복귀를 꾀한 보수 정치인들, 국민의힘을 지칭하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내란을 추종하는 정치세력 앞에서 왜 검증받으러 나온 거예요, 지금? 자존심 안 상해요? 학자로서 저는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학자로 주장을 하시면 학자로 사시면 됩니다. 정치권 기웃기웃하면서 자리 탐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후보자 글 많이 분석했습니다. 지난 비상계엄 전의 후보자의 글을 저는 진보적 경제학자로 쓸 수 있는 글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글은 굉장히 편향되고 과격해졌습니다.

아까 대학 생활 때 마르크스 경제학에 심취했다지요? 그 당시에 그 경제학에 심취한 분들 많아요, 보수 진영에서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중견 경제학자 아니겠어요? 아직도 그 사고가 20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

다, 저는.

그리고 ‘마땅히 해체돼야 할 특권 질서를 지키려는 수구 정치의 끊임없는 탐욕이 정점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보수 정치세력이 언제든지 내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셨어요, 왜냐하면 ‘내란을 도발할 수 있음을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내란 사태는 여실히 보여 줬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쪽 편에 서 가지고 상대 진영을 그냥 폄하하고 매도하는 이런 분이 과연 공정을 기치로 하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자격이 있는지 저는 심히 의심스럽고요. 이것은 학자로서도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학자가 자기 주장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柳榮夏 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악의 무리라고 봄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42%가 지난 대선에서 보수진영의 후보를 지지했어요. 그분들 다 청산될 수구세력으로 보세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렇지 않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러면 이렇게 국민을 분열시키고 편 가르는 발언을 한 사람이 공정을 가치로 하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더 들으세요. 이게 정치세력에 대한 편향적 시각이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후보자가 시장과 기업을 보는 태도도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들어 볼게요. ‘한국 자본주의는 여전히 재벌 대기업 집단과 같은 경제 강자의 특권이 지배한다’,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포용사회의 적은 무엇인가? 첫째는 재벌과 대기업 집단의 세습 경제다’.

여쭙겠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을 착취와 비착취의 그렇게 대립적 구조로 보시면 후보자는 착취적 계급입니까, 비착취적 계급입니까? 후보자는 기득권 세력입니까? 저는 그런 논리로 따지면 후보자도 착취적 계급에 해당된다고 봐요. 물론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시키고 대기업의 잘못된 것 저는 당연히 제재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대기업을 적으로, 악마화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 첫 출근길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특권 부여하고 그 소수에 의존하는 성장 문법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지요 재벌의 폐해를 완곡하게 지적했다고 선의로 제가 해석해 드릴 수도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시장 구조를 계급투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공정위의 역할은 한쪽을 편드는 게 아닙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한쪽을 편드는 게 아니라 공정한 경쟁 률을 만드는 게 공정위의 역할이에요. 인정하시지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인정합니다.

○**柳榮夏 위원** ‘돈과 자본의 횡포로부터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킬 시장경제의 민주적 통제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 공정위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공정위의 위상을 설명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지만 마치 공정위가 무슨 투쟁하는 전위대처럼 들려요. ‘시장경제의 민주적 통제’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과문한지 모르지만.

그런데 경제적 강자에 대한 응징만 하는 게 공정위의 역할이 아닙니다. 대기업을 타파 해야 될 기득권으로만 보시는 것은 저는 교정돼야 된다고 봐요.

위원장님, 저 2분 더 주시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예, 그렇게 하세요.

○柳榮夏 위원 후보께서 기업을, 특히 대기업과 대기업 집단을 보는 관점이 한쪽으로 너무나 치우쳤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슨 세금 체납이나 또는 과태료 위반 이 문제보다 저는 이게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어요. 대기업이 어떤 잠재적 범죄자고 강한 채찍 갖고 때려야만 되는 그런 집단은 아닙니다. 공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 부정적인 면을 공정위에서 하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어요? 저도 반대 안 합니다. 일감 몰아주는 것 당연히 단속하셔야 되고 엄하게 단속하셔야 되지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한쪽 진영 시각으로 보시면 내 편의 것은 넉넉하게 보고 상대방 편은 아주 바늘의 뛰 찾듯이 보시면 그것은 공정한 게 아닙니다. 공정을 빙자한 폭력이에요, 그것은. 더군다나 법에 의한 폭력이고 권력에 의한 권위에 의한 폭력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후보자가 바라던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柳榮夏 위원 공정위 추진하는 정책 중에 경쟁제한 규제 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파악이 안 되실 건데 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몇몇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 온 기존 기업의 독과점 지위를 공고히 하고 신산업의 성장률을 축소시키는 각종 규제를 발굴해서 개선하는 겁니다. 그게 공정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후보자님 말은 늘 규제 일변도, 규제만 강화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당근하고 채찍이 같이 가야 되고 시각이 균형적으로 가야 됩니다.

국가 재분배가 후보자의 지명이라 그랬는데요. 공정거래법은 ‘재분배’ 말 없습니다. 공정거래위는 시장경제의 질서를 지키는 데 메이커이자 심판자입니다. 시장에서 과정의 공정함을 담보하는 거지 결과의 공정함을 추구하는 것이 공정위가 아닙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경제학자로서는 되게 뛰어나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넉넉하게, 지금은 학자가 아닙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柳榮夏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위원님의 충고 새겨 들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일 위원 오전 질의에서 후보자님의 포부가 밝혀진 모두발언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더 할까요?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경제적 약자의 대항권 그리고 협상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 가지 따져 볼까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이 요새 사실 본질적으로 본래의 취지가 많이 왜곡됐습니다. 변질된 거예요. 원래는 안정적인 수익 검증이 된 사업 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동반 성장할 파트너를 찾아서 수익을 함께 나누는 구조인데, 지금은 말이에요 인테리어, 간판 이런 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지만 키오스크, 일회용 종이컵 같은 것도 팔고자 하는 상품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본사의 이익을 챙겨 갑니다. 이것 필

수 항목으로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본래 사업 내용이 아니라 가맹점주 그 상태를 대상으로 해서 수익을 거두는 가맹점으로 지금 많이 변질돼 있어요. 이것 좀 살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맹사업의 본질을 다시 한번 재정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가맹사업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갈등이 바로 필수품목 항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요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근 신림동 사건 세 명이 사망하셨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지금 추정되기로는 인테리어를 둘러싼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관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수품목 정의 규정 신설하고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정위 쪽의 입장이 현행 규정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글쎄요. 이게 그럴까요, 현장에서?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는 강요 금지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언적 규정이지 아무런 제어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쭙겠는데 갑과 을이 공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공정위가 왜 태동을 했지요? 갑과 을이 공정할 수 없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를 좀 물리적으로 정부에서 관장해 주기 위해서 만든 거지요. 공정했다면 이건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개정안은 불리한 가격 변경 시 점주 동의 의무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공정위가 이미 협의제가 있으니 불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냈습니다. 죄송한데 이 협의라는 개념이 굉장히 모호해요. 그냥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공문 발송한 것만 갖고도 협의가 됐다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에서 일방적으로 을한테 그냥 공지를 해서 추진해도 협의한 걸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굉장히 악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제 청년피자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 연 10회까지 회당 50%까지 인상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이런 조항을 처음 봤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58배까지 가격을 올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동의제가 불필요하다는 공정위 검토의견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이강일 위원** 그리고 공정위가 가맹본부를 대변하는 곳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전과 좀 자세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이강일 위원** 필수품목 강요와 불리한 가격 변경으로 점주들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이런 부분을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므로, 또 모두발언 마무리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정위 역량 강화, 인력 확대해서 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후보자께서 서면답변서, 더본코리아 연돈볼카츠 혀위·과장 의혹 조사가 곧 마무리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저는 약간 유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본부하고 서울지방사무소 사건 처리 지침을 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사건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고요. 공정위 사건 처리에 외부 영향력 개입하거나 사건 관할을 둘러싼 잡음이 생기는 그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마련된 안입니다. 그리고 누가 사건을 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면 안 되는데 그런 의혹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한, 신뢰를 높이는 목적으로 있었습니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의 조사 역량 차이 보완하는 의미도 또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방사무소에서 미비하면 공정위 본부에서 또 조사할 수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사무소가 사실은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본부에 비해서 말씀 좀 죄송하지만 전문가적 역량 차이도 약간 있는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신고인하고 피신고인 증거 제출하고 진술 대면조사 중심으로 하는 이런 것 굉장히 한계가 있다. 이러한 조사력 격차를 줄이고 중대한 사건은 본부가 직접 다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것은 중앙에서 다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 지침이 개정됐어요. 예외적 관할 이전 사유, 중요사건 기준 이첩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거든요. 전국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사건, 시민단체가 신고한 사건 등은 본부로 이첩을 해서 엄중히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더본코리아 연돈볼카츠 사건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그렇지 않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냥 지역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해 참여연대하고 가맹점주 단체가 신고한 뒤에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리고 국정감사에서도 분명히 문제 제기가 계속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본부로 이첩돼서 자세하게 다시 살펴봐야 될 항목이라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겁니다.

피신고인인 가맹본부는 신고 당시부터 이미, 이것 잘 들어 보세요. 피신고인은 가맹본부에서 자기 가맹점주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신고 당시부터 이미 증거 불충분이나 경미한 처분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신경 쓸 것 없다라고 얘기한 정황들이나 이런 첨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심지어 공정위가 사건 처리 과정을 모두 보고한다, 우리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했다는 겁니다. 이것 진짜 참 황당한 얘기거든요. 이것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이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연돈볼카츠……

저 2분만 더 주세요.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것 세간의 의혹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중앙에서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 ○이강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공정위 소관 법률에 ‘현저히 해칠 우려’, ‘현저히 제한하는 등’, ‘현저히’라는 문구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현저히라는 의미가 굉장히 두드러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피해가 실제 발생했더라도 사회 일반인이 보기에 뚜렷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수준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정위에서 기준이 이거예요. 피해자가 자료를 제출했을 때 이것 현저하게 볼 수가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권리 구제의 턱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EU 경쟁법이나 미국 반트러스트법에 보면 서브스탠셜(substancial) 그리고 시그니피컨트(significant) 이렇게 해서 중대하거나 유의미한 상태라고 해석이 됐을 경우에 입증 수준이 좀 다소 낮더라도 불공정거래로 해서 구제 장벽을 좀 낮춰서 구제를 해 주는 이런 게 있거든요.

'중대한'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크고 중요한 피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러한 표현들, 그래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허들을 좀 낮춰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권리구제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일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자. 그래서 허들을 낮춘 상태에서 공정위가 더 많은 일에 구제를 하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해야지 허들 자체를 올려놓고 웬만하면 일하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공정위가 한다는 것은 공정위가 설립된 본래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동의하시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네 가지 사안 공감합니다. 제가 임명되면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민 위원** 후보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명된 직후에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바로잡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정위의 존재 이유를 드러내는 정확한 한마디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칼 끝이 갑이 아닌 을을 향했지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건설·화물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공정위의 관여였습니다. 이전에는 비슷한 일들이 있음에도 그렇게 굳이 과잉 관여를 하지 않았었는데 건폭몰이 이야기가 나오고 화물연대 파업이 나오자마자 바로 공정위까지 투입돼 가지고 과징금까지 때리고, 그런 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정위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를 공정경제의 수호자가 아닌 노조 사냥꾼으로 전락시킨 거, 이거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면)

그런 행태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과징금 부과 부분은 재량의 일탈과 남용이라고 해서 취소판결을 내렸는데 공정위는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검사가 불복해서 2심 진행 중이고요.

공정위 관련해 가지고 이거 상소 부분 한번 취소 의향 있으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이재명 정부의 공정위가 강자의 횡포와 갑질을 막고 공정 질서를 만들

려고 하면 잘못된 과거의 행위를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한창민 위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정권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사과를 국민들과 희생자들한테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와 관련해서도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지요.

국민을 위해서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이 되시면 윤석열 정부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조를 탄압했던 일에 대해서 반성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정말 공정위의 제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 표시할 의향이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있습니다.**

○**한창민 위원** 그렇게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리는 일에 앞장서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제언 감사합니다.**

○**한창민 위원** 다른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정위에서 직접 관여 아니면 유관에서 살펴봐야 될 문제인데요.

얼마 전 팀프레시 회사라는, 기사들이 저희 의원실을 찾아왔습니다. 새벽에 배송트럭을 가지고 신선 제품들을 배달하는 회사인데요.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한 700명의 운송 기사들이 150억 정도의 운송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임금체불이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여러 공공, 책임 있는 기관들한테 이런 문제를 진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청에 가니까 진정이 기각되고 공정거래조정원에 가니까, 회사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화해·조정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못 하게 하니까 사실상의 해고 상태이고 임금 미지급으로 돈은 받지 못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급여의 지급권이 있기 때문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합니다.

사실 먹고살기 힘들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어정쩡한 상태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정말 삶이 무너지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공정위는 담합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여하는데 이 관련해 가지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체불 사업주도 엄정 제재하는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노동부와 협력해서 공정위원장이 되시면 조금 대안을 마련하는 걸로 한번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감사합니다. 사각지대 없도록 관련 부처하고 논의하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이 관련된 자료들은 저희들이 요청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한창민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의 서면답변을 보면 대기업 집단의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부당 이익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철저하게 부과하겠다, 그래서 대기업 집단이나 기업들이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유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한창민 위원** 아까 다른 동료 위원께서 잠시 이야기했는데 윤석열 정부 때 강제 매각해서 YTN 대주주가 된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일가가 천안기업이라는 별도의 부동산 임대업체를 만들어서 유진기업 계열사로부터 수백억 원의 사익 편취를 했다는 그런 혐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시민단체가 공정위에 고발을 했는데 두 달이 지나도록 아직 진척이 안되고 현장조사 계획서도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관련 사항 보고받으셨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관련 사항 보고는 받았습니다. 지금 6월 말경에 신고가 접수됐고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사실 이 유진기업 사례는 전형적인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단계 추가행위 위반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익 편취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관련된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YTN이라는 방송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런 식의 문제가 있으면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빠르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알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공정하려면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힘의 공정한 균형이 필요하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한창민 위원** 그런데 사실 가맹점주나 대리점주, 수급사업자 등등 단체협상권에 의해서 단체행동 할 수 있는 권리들이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지금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것들이 매우 제약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이번에 국정과제 5개년 계획 보고서에는 경제적 약자들에 대해서 단체구성권과 단체협상권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대상이 좀 다릅니다. 앞다시피 가맹점주는 단체협상권까지 되는데 나머지 입점업체나 대리점주, 수급……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입점업체, 대리점주, 수급업자들은 단체협상권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앞다시피 구성권이 있는데 협상권이 없으면 사실은 절반의, 반쪽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자가 자기의 권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한창민 위원** 그런데 오히려 가맹점주는 10년의 계약갱신권까지도 있고 조금 더 보호되고 있는데도 협상권이 있는데 사실 대리점주나 수급사업자 같은 경우는 훨씬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없는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래서 단체협상권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한창민 위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거……

30초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는 해야 돼서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윤한홍** 나중에 추가질의 안 하시려고 그래요?

○**한창민 위원** 예,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사실 중기조합법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있다고 하지만 실

제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단체협상권 여부를 판명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단체협상권을 부여할 대상들이 매우 협소해집니다. 대리점의 경우 비전속거래 비중이 80%나 되고 하도급의 수급업자들은 거의 100% 이 관련해 가지고 균질성이 높은 중기조합으로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어요. 이거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알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그러기 때문에 단순하게 구성권뿐만 아니라 협상권으로서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제대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이 문제점을 현장을 보면서 정확하게 살펴 주시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한창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도 마찬 가지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들여다봐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현장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개선방안 마련해 보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하시고요.

이어서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영 위원** 유진그룹하고 천안기업 얘기가 자꾸 나와서 제가 조금 들여다봤더니 이게 제도의 허점인지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의 불찰저함인지 잘 모르겠는데, 채무보증을 통한 회장일가 개인 회사에 대한 부정지원 의혹이 규정 적용에 있어 가지고 천안이 유진에 보증에 대한 수수료 9억 원을 제공했고 신용정보원의 대출에 대해서 연 8%의 이자 지급을 하고 있어서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에 비해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말하자면 시장보다도 이자율이 더 높고 수수료도 더 많이 내서 그렇게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건지 그게 좀 이상해서……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지금 읽으신 것은 공정위에서 나온 문건입니까?

○**이인영 위원** 예.

그래서 또 다른 걸 봤더니 내부거래를 통한 임대수익 이런 유인데 천안의 매출액이 연 80억 정도 되는데 유진의 투자증권이나 유진기업 이런 테가 천안이 소유한 빌딩에 임대를 들어가서 임대료를 지급한 게 80억 중에서 한 75억이 돼요. 그러면 이것은 상당한 정도의 내부거래이고 부당지원이라고 보이는데, 그런데 그렇게 보려면 주변 시세하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인근 빌딩은 어떤가 이렇게 해 보니까 이것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까 옆에서 이강일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저한’, ‘상당한’ 이런 것에 해당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어떤 논리를 세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알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어디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부거래다 아니다, 부당한 이익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보는 데 차이가 있는데 사실 일반적

인 시각으로 적용해 보면 그게 그거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맞습니다.

○**이인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법이나 규정의 맹점을 파고들어서 사실상의 부당지원과 내부거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과 관련해서도 보면 얼마에 사 주고 얼마에 팔고 이런 부분들이 불과 몇 년 전에 10원이었으면 불과 몇 년 후에 80원이 되고 이렇게 8배씩 떤단 말이에요. 그것도 시장에서 흥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비슷한 주식 가치를 가진 기업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어떤 데는 4000억 정도의 매출이 있어야지 100억 정도의 이익이 나는데 여기는 불과 사백몇억인데, 사십몇억인데 팔십몇억 정도……

아닙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매출이 팔십몇억인데 이십몇억의 수익이 나는 이런 것들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아마 그래서 공정위에서는 이 부분들은 지금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후자는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전자 이 2개의 사례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런 것은 제도적인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이용하면 앞에 말씀하셨던 지배구조나 내부거래나 경제력 집중과 관련해서 기업집단을 들여다보시는 과정에서 더 철저하게, 그래도 주병기 위원장님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태까지 약자들은 유별 하고 강자들은 무별 했던 이런 공정거래위원회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유진 상황과 이런 건 잘 보시기 바라고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이게 YTN하고 별개로라도, 앞에 YTN이 가지는 공중, 공공적 기능의 오너가 이런 데라는 것과는 별개로, 이게 YTN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시장 질서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제대로 조사되고 정리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말씀 더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는 주병기 위원장님이 신념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주병기 교수님의 모습을 저는 존경했고요. 약자에게는 지팡이가 되고 강자에게는 몽둥이가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똑같은 막대기를 들고 누구에게는 지팡이가 되고 누구에게는 몽둥이가 되는 게 그게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약자에게 지팡이를, 아무리 몽둥이를 휘둘러 봐야 강자에게 몽둥이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형평성이라는 게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병기 위원장께서 잘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오늘 모두발언에서 자연적 자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그런 게, 애덤 스미스까지 나왔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렇게 작동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도 등장한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자연적 자유라는 표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손 이런 이상의 질서가, 그것에 의한 이상적 질서가 시장에 존재하지 않고 강자에 의한 횡포가 상당 부분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바로잡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본연의 역할이고 또 주병기 위원장님의 신념이 느리더라도, 단계

적으로 실천되더라도 실천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문 위원** 후보자님, 현행 공정거래법 22조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경우에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국내 계열회사는 계열출자대상회사에 추가로 계열출자를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국내 계열회사 사이에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되어 있는 것인데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이정문 위원** 후보자님, 이렇게 법에서 상호 순환출자를 제한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뭐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이유가 지배력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고 또 기업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이정문 위원** 맞습니다. 기업은 순환출자를 하면 적은 자본으로 여러 회사를 소유하고 지배할 수 있는데 이를 한국 재벌 총수들이 많이 활용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순환 고리 중 특정 기업의 경영이 부실해질 경우 연쇄적으로 도산할 위험이 크고 또 기업 지배구조가 왜곡될 가능성이 커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 순환출자를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맞습니다.

○**이정문 위원** 하지만 여기서 공정거래법의 허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요 바로 국외, 즉 해외 계열사가 이 순환출자 금지 규정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규제 대상을 국내 회사로 한정한 탓인데요. 최근 고려아연과 영풍·MBK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미 이것이 드러났지만 모기업이 국외 계열사를 매개로 한 순환출자 구조 형성이 가능하다는 법적 허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후보자님,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그렇습니다.

○**이정문 위원** 이와 관련해서 이미 하이트진로 등 다른 기업집단에서도 일본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 사례가 확인된 바 있고 2024년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9곳이 7500여 개 해외 계열사를 보유한 현황을 고려할 때 또 이와 유사한 편법 사례가 확산될 가능성도 좀 크다고 봅니다.

이처럼 공정위가 공표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국외 계열사의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현황을 살펴보니까 2024년 경우에 총수가 있는 78개 기업집단 중 31개 집단, 즉 약 40% 가 국외 계열사에서 국내 계열사에 이렇게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국외 계열사를 이용한 순환출자 사례에 대해서 공정위원회에 취임을 하신다면 후보자는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접근할 것인지 혹시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지금 저는 구체적인 생각은 없지만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법 규제를 우회하는 하나의 통로로써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김남근 의원님과 이정문 의원님께서 제안한 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정문 위원** 예, 그래요. 저하고 김남근 의원님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2건이 정무위에 계류 중인데요. 과거에 국내 계열사에 한해서만 금지한 것은 사실 과거에는 해외 계열사의 존재나 출자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지만 현재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국외 계열사에 대한 공시가 지금 강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계열사의 출자구조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에서도 저희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비롯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이정문 위원** 아울러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대상과 채무보증 규제 대상 역시 국내 계열사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취임을 하신다면 꼭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리고 후보자님, 아까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건과 관련해서 질문을 이미 해 주셨는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의 대한항공 흡수합병으로 인해서 아시아나항공을 주로 이용하던 국민의 실질적인 혜택 축소라든지 또는 대한항공이 국내 유일의 FSC 항공사가 되면서 시장지배적사업자, 즉 독과점의 문제가 우려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후보자도 동의하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동의합니다.

○**이정문 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파악을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만약 위원장님에 취임을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 아까 박범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있지만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그러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최근에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구형 항공기 11대를 개조해서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도입을 하고 기존 이코노미석 3·3·3 배열을 3·4·3 배열로 변경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정위에서 합병을 승인하는 조건으로서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40여 개 노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요 상품 및 서비스의 불리한 변경을 금지하도록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3·4·3 배열로 개조한 항공기를 경쟁제한 우려 40여 개 노선에 투입하는 문제가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시정조치 위반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을 해 주시고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이정문 위원** 그리고 대한항공은 현재 프리미엄석을 일반석보다 약 1.5배 넓은 면적을 갖고 또 일반석 정상운임 대비 약 110%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약간의 표시광고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봅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고와는 달리 실제 늘어나는 면적이 1.35~1.37배 차이밖에 나지

않고요. 늘어나는 운임이 110%라고 했지만 이것은 고객들이 선택을 많이 하는 저렴한 이코노미 스탠더드 클래스 기준이 아니라 보다 비싼 플렉스 클래스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살펴 주시고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제가 마무리할 테니까 2분만 더 주시면……

그리고 또 반면에 90% 유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역설적으로 이 조항으로 인해서 일부 노선, 즉 LCC 항공사의 경우 이로 인해서 오히려 단항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촉석 90% 유지 조치로 인한 공급과잉으로 인해서 이미 판매가 완료된 항공권에 대해서 일방적인 취소를 집행한 바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티웨이항공 역시 일부 기간 동안 인천-괌 노선 운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즉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과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알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또 아시아나항공 측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작년 12월 12일부터 구조적 조치 이행 완료 시점까지 또는 10년간 촉석 등급별·분기별 평균 운임을 2019년 운임 대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산식에 따라 인상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니까 일부 노선, 즉 인천-바르셀로나 노선이라든지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또 광주-제주 노선 등이 이 조건에 위배돼서 인상 한도를 초과했다고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아시아나항공은 담당 직원의 착오로 인해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이 부분도 회사 측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해서, 어쨌든 합병으로 인해서 대한항공을 이용하거나 아시아나를 이용하거나 했던 우리 국민들께서 더 부담을 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도록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수 위원** 후보자님, 고생 많으세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건설노조라는 빨간 띠를 머리에 두르고 철근 공사랑 새시 공사를 달라고 확성기 틀고 막 데모를 해요. 공사를 안 주면 지나다니는 공사 차량에다가 쇠구슬을 새총으로 쏴서 유리를 뚫습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 도저히 안 돼서 공사를 줘요. 그런데 공사를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돈은 주고 대신에 그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다른 업체를 불러다가 거기다가 이중으로 돈을 주고서 공사를 합니다.

이게 노조입니까, 아니면 폭력 조직입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양수 위원** 잘못된 거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이양수 위원 공정거래위원장이시니까 공정하게 일이 진행되도록 이런 분들을 선처하는 그런 일까지 있지 않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이양수 위원 저기 PPT 자료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재명 대선캠프 경제2분과위원장 맡고 있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1년도에 이재명 대선캠프에서 일하셨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이양수 위원 25년도에도 캠프에서 일하셨고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이양수 위원 거기에서 그때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공정위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문재인 정부 공정위는 실패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건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제재의 실효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래서 전속고발권 폐지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사실이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이양수 위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지금도 어느 정도 그때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래요?

다음 장 한번 봐 주십시오.

지명 전에는 ‘지금처럼 공정위 체제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는 전속고발권 폐지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21년도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이양수 위원 꾸준히 그런 입장을 견지하셨어요. 그런데 지명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는 ‘현 단계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를 재점화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좀 전에 얘기하신 것하고 일맥상통한 겁니까, 입장이 좀 바뀐신 겁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지금 공정위가 처해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그 많은 문제 중에서……

○이양수 위원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를 해야 되냐, 아니면 지금 재점화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냐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신다면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지명 후입니다. 재점화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

○이양수 위원 재점화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이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 한번 봐 주세요.

온플법에 대해서 2025년 8월 20일 지명 전에는 ‘구글 정밀지도 반출과 온플법 가운데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정밀지도 반출—이건 사실 국가 안보에 해당되는 일입니다—그 것을 양보하는 편이 낫다’라고 얘기하셨는데 9월 5일에는, 지명 후에는 ‘통상 협상이 진행 중이다. 너무나 중요한 이슈다. 온플법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어느 게 현재 입장이신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두 주장은 상충하지는 않습니다.

○**이양수 위원** 한미 협상을 고려해 독자적 온플법을 만들기 어렵다라고 얘기하신 적 있나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이양수 위원** 어렵다고 얘기하신 적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독점 규제와 관련한 플랫폼……

○**이양수 위원** 온플법 만들지 않고 현행법으로도 개선 여지가 많다라고 얘기하신 적도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행정적 권한을 활용해서 현행법 체제하에서……

○**이양수 위원** 그런데 아까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는 온플법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갑을 관계 개선에 관한 공정화는 지금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양수 위원** 갑을 관계 관련 온플법은 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렇습니다.

○**이양수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활용하겠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독점 규제에 관한…… 그렇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온플법은 좀 중요한 문제니까.

예를 들어 온플법 논의 과정에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입점 업체가 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법에 명시하고 그걸 이유로 플랫폼사업자가 불이익을 주면 처벌하겠다 이 정도에 그치는 건지, 아니면 사업자단체가 플랫폼사업자에게 협의하자고 했을 때 응하지 않으면 제재하도록 할 것인지 전자와 후자 중에는 어느 것에 더 가까우신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후자에 가깝습니다.

○**이양수 위원** 후자에 가까우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이양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또 봐 주십시오.

지명 전에 과징금 제도와 관련해서 ‘정별적 처벌의 부담 때문에 위법행위 자체를 포기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되게 강경한 어조로 말씀하셨는데 지명 이후에는 ‘과징금 상한을 상향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 그리고 제재의 실효성을 분석해 보겠다’라고 조금 후퇴하셨는데 이거는 지명 후 입장이 맞으시겠지요, 지명 전 입장보다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러니까 상한을 상향해서……

○**이양수 위원** 상한 상향을 해서 징별적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이양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입장이 바뀐 건 아니네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바뀐 게 아닙니다.

○이양수 위원 그리고 다음 장, 대기업에 대한 시각인데요. ‘우리 경제정책은 소수 재벌과 대기업 중심 수출 주도적 성장에 의존해 왔다. 이런 성장은 더 이상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라고 대기업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제재할 것을 이야기 하셔 왔는데 지명 후에는 ‘대기업 집단은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에 기여해 왔으며 여전히 우리 경제 성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저한테 서면답변을 보내셨어요.

두 개의 입장이 반드시 상충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맞습니다.

○이양수 위원 이 두 개의 입장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두 입장 다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지명 전에 인용한 문구의 의미는 분배를 개선하는 데 낙수효과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적 성장만 가지고서 분배효과를 말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이양수 위원 알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지난 대선 그리고 최근 대선에서 대통령의 경제 멘토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실세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본인이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시장과 어떤 이런 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요한, 아주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강경한 입장들이 계속 나가서 다들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알고는 계세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 부들부들 떠는 것이 잘못한 사람들이 떠는 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공정한 사람들이 공정해지는 건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공정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불공정해지는 그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양수 위원 염두에 두고서……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한홍 추가로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후보님?

그러면 이어서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원 위원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공정위에 오시는 국민들께서는 본인의 분쟁이 일단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실 텐데 공정위 사건 처리기한이 혹시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사건 처리기한이 120일……

○**김승원 위원** 2024년도 보도자료인데요 조사하는 데 414일, 의결하는 데 171일, 소송까지 가면 526일, 그래서 3년이 걸린다는 그런 보도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보도에서는 공정위의 사건 처리기간이 524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도 공정위의 조직 확대라든가 사건 처리의 신속성에 대해서 주문을 하셨을 것 같고 또 수도권에 많은 기업체들이 몰려 있는데 수도권에, 우리 경기도만 해도 한 156만 개 기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상공인들도 한 200만 명이 넘고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런데 경기도라든가 인천, 강원에는 공정거래위 분쟁을 해결하는 사무소가 없다,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서울사무소에서 보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래서 조직을 확대하려면 경기도에도, 남부권에도 꼭 하나는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승원 위원** 두 번째는 공정위에 오시는 분들은 본인의 피해가 회복되고, 예컨대 과징금이 본인에게 분배가 되어서 피해가 좀 회복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생각이라든가 앞으로 정책 방향은 어떠신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제가 들은 바로는 공정위에 사건을 맡기면 잘 해결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김승원 위원** 예컨대 SK텔레콤 사태 보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이 부과가 됐는데 실상은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은 법원에다 따로 예컨대 10만 원 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따로 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어서 공정위에서 과징금이 피해자에게 환수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알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다음에 아까 효성 관련해서 효성이 2023년도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윤석열 정부의 김건희 집사 게이트에 35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공정위로부터 유리한 결론을 얻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거에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심결인가요? 의결을 봤는데 의결문에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보고 놀란 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효성이 바로 외국 기업에게 하도급을 하면 되는 것을 진흥기업이라고 해서 자기 계열사에다가 일종의 형식적인 포괄 하도급을 준 겁니다. 일괄 하도급을 줘서 진흥기업 수익률 좀 높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일은 예컨대 효성이 하거나 그 하청 받은 업체가 하는 건데 그 정표로서 심사

관은 뭐라고 했냐면 진홍기업 소속 직원은 단 1명으로 해당 직원은 해외에서의 4개월 공사기간 중 현장에 가서 5박 7일 출장을 다녀온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공사기간 동안 국내에서 1명이 업무를 수행했다는 겁니다, 해외 건설하고 있는 거를. 그런데 이거를 심리 종결인가요, 처리를 하면서 공정위에서 뭐라고 썼냐 하면 ‘진홍기업이 작업일보, 준공계 등을 작성하고 해외 공사현장에 관련 인력을 파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프로젝트에서 진홍기업의 실질적 역할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래 놓고 심리 절차를 종결합니다. 저는 이거 자체로도 납득이 안 가고 이걸 누가 국민들이 승복하겠습니까?

이런 점에 대한 자세한 설시라든가 조사도 필요하고, 공정위의 심리는 변론주의는 아닙니다. 아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직권탐지주의일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면 더 알아보고 질문하고 또 캐 보고 그렇다면 이런 결정문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거에 대한 개선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김승원 위원** 공정위를 보니까 제일 지금 문제되는 기업 중의 하나가 또 쿠팡이 자꾸 눈에 보입니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사실상 절대 강자인데, PPT 화면을 보시면, 쿠팡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를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보좌한 이력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긴밀한 황금인력을 갖췄다라는 평가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바뀔 것 같으니까 2025년 5월 달에 강한승 대표가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참 우연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쿠팡에 있던 사람들이 대통령실로 많이 갑니다. 예컨대 김영태 전 쿠팡 부사장은 윤석열 캠프에 있다가 윤석열 대외협력비서관으로 가고 이영상 전 쿠팡 부사장은 대통령 비서실 국제법무비서관으로 있다가 법률비서관으로 가고 또 김수혜 전 쿠팡 홍보실장은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장으로 가고요. 반대로 윤석열 정부에 있던 사람은 쿠팡으로 옵니다. 이충윤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은 최은순 법률대리인인데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 행정관으로 있다가 쿠팡 이사가 되고요. 국가안보실 A 행정관은 쿠팡이츠에 취업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비서실 B 행정관은 쿠팡 이사가 됩니다.

쿠팡에 대한 제대로 된 그런 조사라든가 이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쿠팡이 예컨대 취업 배제 블랙리스트도 작성하고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그렇게 사망을 해도 임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또 판매장려금이라든가 광고를 강압했다는 의혹도 있고요 또 최저가 보장을 위해 납품업체에 갑질했다는 그런 사실, 또 출판업계를 교란하고 있고 납품가를 후려치기 하고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불법들을 이렇게 과감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쿠팡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를 이재명 정부 때는 한번 해 주시고 또 중대재해처벌법도 철저한 조사를 한번 다시 시작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영 위원** 후보자님, 자연적 자유체계 안에서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등, 완전한 정의

가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지향을 삼는 것은 절대 굽히지 마시지 바라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알겠습니다.

○**허영 위원** 이것을 굽히면 관료 사회에 포획되어서 타협하게 되고 원칙을 잃고 소신을 잃고 정책이 우스워집니다. 소신을 가지시고.

현실에 다양한 사례가 잘 쌓여서 이것이 이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론과 현실은 별개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론이 현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이 이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학생들과 또 수많은 사회 방향성에 있어서의 선생님으로서 교수로서 학자로서의 양심을 가지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후보자님 그리고 과태료나 세금, 탈세까지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는데 과태료나 세금을 안 낼 작정이 있으셨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런 적은 없습니다.

○**허영 위원** 그러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허영 위원** 그런데 앞으로 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그것은 명심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2년 12월 6일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기억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뉴스에서 봤습니다.

○**허영 위원** 12살 도현이가 타고 있다가 안타깝게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그것을 운전했던 할머니는 형사입건 돼서 아직까지 재판을 받고 계시거든요. 도현이의 아빠 이상훈님께서 국회에 국민동의청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지금 급발진 의심사고가 신고된 접수 건수가 2018년부터 총 186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제조사나 법원에 의해서 급발진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없습니다.

○**허영 위원** 없지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고도의 전자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정밀 제조물인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결함을 직접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요. 그것 어떻게 입증을 하겠습니까? 제조사도 그 사고의 원인을 밝히지 못합니다. 이것을 피해자하고 유족에게 그 원인을 밝히라고 하는 현 제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영 위원**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총 여섯 분의 국회의원님들이 여야 다 저와 거의 비슷한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제조사가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고 법원에 자료제출 명령제도를 강화해서 법원에서 제조사가 자료를 꽁꽁 쥐고 안 내놓고 법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이 소송이 균형 있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없습니다.

○**허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법원이 자료제출 명령을 하면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서로 간에 균형 있게 법적 책임을 다툴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맞습니다.

○**허영 위원**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제조사의 영업비밀이 샐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 또한 영업비밀명령 제도를 뒤서 영업비밀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또 추가적으로 두고, 그렇지만 자료제출에 불응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재를 가하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법의 취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허영 위원**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껏 반대했어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아, 그랬나요?

○**허영 위원** 이것을 지난 때 한참 제기를 해 가지고 제 문제 제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용역까지 해 가지고 리포트를 만들었어요. 그것 제출하라 그랬는데 한 장 제출하고 두 장 제출하고 결론 부분도 제출하지 않다가 수십 차례 요구를 하니까 그때 가져왔어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알겠습니다.

○**허영 위원** 미국이나 영국, EU 등 국제적으로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제조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렇습니다.

○**허영 위원** 한국판 디스커버리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피해자 권리구제 실현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함께 잘 살펴서 추진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두 번째.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전관예우 문제입니다.

이게 공정거래위원회 전원위원회 현장입니다. 마치 법원의 재판정 같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허영 위원** 그래서 공정위를 경제사법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허영 위원** 후보자님께서도 위원장이 되시면 이제 9명의 위원 중의 한 분이자 동시에 650명의 직원을 이끄는 수장이 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허영 위원** 공정위 퇴직자 15명 중 11명, 재작년에는 퇴직자 19명 중 11명이 대형 로펌에 재취업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대기업으로 갔습니다. 현직에서 조사와 제재를 담당하는……

2분만 더 주십시오.

공직자들이 퇴직 후 곧바로 기업의 편에 서서 공정위의 약점을 공략하며 거액의 보수를 받는 현실로 갑자기 전환됩니다. 이것이 전관예우의 본질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솔방망이 제재, 징계 이런 것들이 연이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책을 들어 보이며)

후보자께서도, 제가 이것 사지는 못하고 국회도서관에서 빌렸습니다. 사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저자여서, ‘전관예우 같은 부패한 관행이 공권력의 공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허영 위원** ‘퇴직한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진출과 소득에 대한 정보의 보고와 공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공정위에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퇴직자 재취업 현황입니다. 자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취업 현황이 발생할 때마다 건건이 그냥 파일로 올려 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전체 현황은 얼마인지, 어떻게 갖는지 이것을 한눈에 볼 수가 없고 일일이 다 들어가서 확인해야 돼요.

이렇게 해 가지고 투명하게 이게 공시가 되고 국민들이 알아서, 공정위가 정말 제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 대신해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활동을 하고 있는가 파악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관련 통계를 훨씬 더 일목요연하고 보기 쉽고 분석하기 쉽게 개선하도록 알아보겠습니다.

○**허영 위원** 그리고 퇴직 이후에 제한 기간이나 이런 것들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허영 위원님 질의 중에 급발진 사고 관련 그것은 우리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심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2개의 허영 의원님 안과 이현승 의원님 안.

○**위원장 윤한홍** 그것은 충분히 논의한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충분히 보시기 바라고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이어서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근 위원**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오늘 아침 모두발언에서 재벌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에 대해서 재벌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재벌들이 새로운 사업, 시장 이런 걸 다 독점하다 보니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새로운 시장,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는 그런 의욕들을 잃고 우리 사회 전반의 혁신이 저해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헌법 119조 2항에도 보게 되면 그런 경제력 집중, 시장의 지배력 남용 이런 것들을 국가가 잘 규제하고 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 헌법 정신에 잘 부합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벌기업집단들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넘겨 보세요.

대부분 지주회사 체계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92개의 대기업집단 중의 한 50개 정도, 절반 이상이 다 지주회사 체계로 되어 있는데 그중의 한 46개는 원래는 지주회사

가 아니었는데 지주회사 체계로 다 전환된 거지요. 그렇지요?

우리나라 재벌의 역사를 보게 되게 되면 순환출자 이런 걸로 있다가 이렇게 지주회사 체계로 전환이 된 거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김남근 위원** 그래서 그다음을 보면, 1998년 이전까지 공정거래법에서는 원래 지주회사를 금지하고 있었지요. 지주회사를 왜 금지한 줄 아십니까? 지주회사는 이렇게 수직으로, 밑에 자회사, 손자회사, 손손회사 이렇게 내려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계열사들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경험했던 서구 선진국에서는 지주회사를 금지하는 그런 정책을 취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받아들여서 지주회사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주회사를 풀었어요. 아마 김대중 정부에서 고심이 있었을 겁니다. IMF 경제위기를 겪었는데 그 당시에는 재벌들이 순환출자 구조로 돼 있어요. 수직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A·B·C·D 이렇게 계속 순환출자를 해서 기업집단을 이루게 되니까 어디 하나가 부도나면 연쇄적으로 막 부도가 나면서 그 당시에 진로, 해태 유명한 그런 재벌들이 다 망했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순환출자구조는 해소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연구를 했고 지주회사 체계로 전환하도록 대안을 그렇게 제시한 거지요.

그런데 지주회사로 가게 되면 수직적인 계열화 확대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때는 지주회사에 대해서 손자회사를 못 갖도록 금지를 하고 자회사에 대해서도 의무보유비율을 만들었지요. 그래서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도록 했고 또 부채로 계열사를 늘리면 안되니까 지주회사 부채를 200% 이상 못 갖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대로 됐으면 아마 작은 규모의 재벌기업집단이 됐을 텐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큰 재벌…… 지주회사 체계하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재벌기업집단이 됐는데 주된 이유가 그런 규제를 완화해 준 거잖아요. 손자회사를 허용하고 의무비율도 50%에서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30%, 비상장은 20%만 보유해도 되도록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면 그 뒷장을 보시면, 16년간 한 2.2배가 늘어났습니다. 재벌들의 계열사가 오히려 지주회사 체계에서 훨씬 더 늘어났어요. 그냥 방임을 해 버린 거지요, 우리 정부가.

윤석열 정부 2년만 하더라도 거의 한 10% 이상 됐습니다. 4대 재벌의 경우에 36개가 늘어나서 한 10% 이상 늘어났지요. 10대 그룹의 경우에도 73개나 더 늘어나서.

다음 표를 보시면 SK 같은 게 대표적으로 계열사들이 17년서부터 시작해서 한 10여년…… 10년도 아니에요, 칠팔 년 사이에 한 2배 정도 늘어났고 한화도 그렇고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정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김남근 위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손 놓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폐해가 어떤 것인지는 잘 아시겠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김남근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재벌 계열사들이 다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 중견기업들한테는 사업 기회도 오지 않게 되고 심지어는 계속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떡볶이, 순대 뭐 이런 것까지 하냐, LG 아워홈’ 이런 비난도 많이 받았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김남근 위원 공구·문구 이런 것까지 다 하니까 엄청 비난을 많이 받아서 그런 비난 때문에 조금 위축되기는 했었지만 계속 많이 늘어났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고민해 보면, 우리가 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신산업, 첨단산업을 육성하자 하고 있어요, AI·반도체·바이오. 언뜻 생각해 보게 되면 새로운 중견기업들이 할 가능성은 좀 적고 재벌들이 또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지요. 계열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겠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런 예외적인 것은 또 그래도 허용을 해 주되 공정거래 차원에서 재벌기업집단으로 경제력이 집중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조치들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이에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고민을 했던 신규 손자회사는 제한을 한다든가 의무보유비율도 영국이나 미국처럼 더 늘려서 이렇게 수직적인 계열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한다든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동의합니다.

○김남근 위원 그런 것들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계열사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늘어난 게, 어느 학자분이 재벌들이 레고 놀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붙였다 떼었다를 계속, 합병했다가 또 물적 분할해서 별도 상장했다…… 그때마다 일반주주들은 피눈물을 흘리는 거지요, 주가가 막 폭락을 해 가지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금융감독당국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업을 해 가지고 자본시장 규율을 잘해서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후보자가 얘기했던 ‘재벌기업집단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것의 구체적 제도나 방법 아니겠어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맞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래서 학자였을 때는 ‘민주적 통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념적으로 선언적으로 하니까 약간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는 다른 나라에서도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들을 도입해서 하는 그런 방향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김남근 위원 다음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있어서의 공정거래의 문제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가장 문제점 중의 하나가 기술탈취 문제예요. 스마트폰 같은 것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21세기의 제품은 대기업이 갖고 있는 한두 가지 기술로 되는 게 아니라 수만 가지 기술이 결합돼야만 한 제품이 된단 말이에요. AI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래서 구글이나 애플 같은 회사들은 많은 중견기업, 중소기업들하고 기술 네트워킹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모으는데 우리 대기업들의 특징 중의 하나가 한 95% 정도 기술을 다 모았는데 5%가 모자르면 그냥 뺏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탈취를 한 다음에 중소기업보고 ‘이제 너 소송해라’ 그러면 어차피 법원 가게 되면 5년, 10년 걸리니까……

2분만 더 주시면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벌 대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기술탈취 관행이 아직도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에 대한 의욕을 잃어 가지고 기술개발들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김남근 위원** 그게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들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하다가는 중국한테 금방 추월당할 위기에도 있고 그래요. 그런 점에서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 문제인 정부 때도 그런 것 때문에 법정부 TF를 만들었고 해서 많이 대응을 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탈취 특별조사반 팀도 만들었어요. 지금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나요, 그런 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남근 위원** 확인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지금 없어진 것 같아요. 정책이 좀 흐지부지 되거나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특허청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굉장히 협업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특허청이 대기업이 가진 기술이 중소기업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진단을 해 주면 적극적인 조사를 해서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에 가면 편편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도. 왜냐하면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증거 자료들이 다 대기업들에 있단 말이에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가 노력을 해도 대기업들의 기술탈취가 근절이 안 되는 게 소송으로 가면 우리가 유리하다, 현재 우리 소송 제도에서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맞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래서 소송제도를 개혁하는 것까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중소기업들이 다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게 되면 ‘입증이 어렵다’ 다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70%가 다 얘기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자, 그래서 지금 대선공약에도 나와 있고 중소벤처부에서도 한국형 디스커버리라고 그래서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그다음에 자료보전명령 제도 그다음 법정 외에서 여러 가지 증인신문 같은 걸 해서 법원에 내는 제도 이런 것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다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김남근 위원** 이런 것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하도급법 개정안으로 이런 내용 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 파악하시고 중소벤처부나 특허청 이런 데하고 잘 협업하셔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잘 정착되도록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혁 위원** 박상혁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비슷한 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아까 모두발언에도 있었던 것 같고, 결국 조금 전에 김남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재벌의 집중화 문제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 심각한 문제가 기업집단 간의 내부거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후보자께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내부거래의 증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지금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줄어들지 않고 그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 김남근 위원님이 자료에서 잘 보여 주셨듯이 기업집단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박상혁 위원** 오히려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성을 계속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 문제가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고 이럼으로써 기업이 재벌로서의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한편으로—최근에 상법이 개정됐습니다만—주주의 이해충돌, 그러니까 주주에 대한 침해 그리고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 위배 이런 문제까지도 다 연동되어 있는 문제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소송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공정위의 이런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조사하고 고발하느냐 이런 문제로 결국 귀결될 텐데, 5년간 몇 건 정도를 공정위가 고발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아직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박상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한 12건 정도고 11개 기업집단에 총 한 8600억 정도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숫자도 작지만 결국 소송에 가서도 굉장히 승소 확률이 많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일단 공정위의, 제가 얼마 전에 검토한 바로는 좀 큰 사건에서 패소율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는 뭔가 아까 박범계 위원님이 신가요, 말씀하셨듯이 법원에서 어떤 소송의 역량이 많이 뒤파진다는 게 보였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강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적발과 고발의 강화 그리고 소송에서의 강화 이런 부분 필요

하고 그다음에 공히 지금 김남근 위원님, 허영 위원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하는 당사자 제출 명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증책임 문제를 어떻게 전환하고 강화할 것인가 이런 문제로 가야만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가능성도 있고 또 다른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때도 이런 문제들이 용이하게 법원에서 승소 확률을 높일 텐데 그래서 지금 김남근 위원님도 그런 부분 강화 얘기 하셨으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내부거래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혁 위원** 그리고 지금 국정과제에 과징금 부과 합리화와 관련되어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지금 위반행위 규모를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액과징금을 한 40억 원 한도에서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상향 이런 부분을 문제 개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공정위하고 상의해서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공정위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조직 확대 필요성들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규모가 있으신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지금 진행 중인 규모는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데 그게 아까 허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기로도 공정위가 행시나 공무원 시험을 합격한 분들의 지금 1순위가, 선호 대상 1순위가 공정위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데 그게 결국은 또한 전관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유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전관으로 가는 가장 좋은 관문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1순위다, 이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공직자로서의 사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아까 허영 위원님은 그런 부분들을 사후적으로지만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위원장님이 되신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게 전관으로서 좋기 때문에 공정위가 우선순위다 그리고 또 조직을 확대 개편해야 된다…… 결국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공정위가 받고 있는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잘 아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관련되어서 뒤에, 앞으로 또 제가 국정감사 때 질의하고 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단순히…… 제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했습니다만 오히려 저희 정부, 혼히 말해서 민주당 정부 계열일 때 조직이 많이 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여러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게 저희들은 여러 가지 순기능을 생각해서 조직을 확대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조직 이기주의로 빠졌다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리고 아까 박범계 위원님이 이야기하시고 허영 위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문제, 제가 이게 초선의원 때는 국토위를 4년 했습니다만 많은 부분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있었고 저만 혼자 이것 국토위 때도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와서 이것을 되돌리기는 어렵지만 그 당시에 많이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규제라고 할까요, 조건 이런 것들을 마련했는데요. 그게 2019년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조건이 변화된 예들이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예를 들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팜 노선 같은 것들은 그 당시에는 이게 황금노선이고 좋았는데 지금은 좋은 노선이 아니어서 오히려 LCC나 이런 데에서 부담만 생기고 노선을 폐지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대한항공이 독과점을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편익을 악화시키는 것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가 조건 기준의 변경, 환경의 변화에 따른 양상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서…… 저는 그 당시에도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 오히려 지금은 시장에 있어서 경쟁자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것을 하나로 독과점으로 모아서 한다라는 게, 물론 그 당시 대한항공이 처해 있던 상황, 코로나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촉진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게 향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끝까지 감시하고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결국은 소비자들의,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공정위의 역할이 계속적으로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계속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소비자 피해 없도록 그리고 상황 변화를 충분히 감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강준현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준현 위원** 예.

○**위원장 윤한홍** 하십시오.

○**강준현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강준현 위원** 몇 분 위원님들께서 MBK 얘기를 했는데 좀 다시 한번 짚어 볼게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강준현 위원** 큰 틀에서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3월에 기습적으로 회생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또 회생신청을 한다고 하더니 곧바

로 또 6월 달에 매각을 발표해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15개 점포를 폐점 발표를 해요. 사태를 계속 최악으로 가져가요, MBK가. 김병주 회장, 사재 출연 약속도 했고 정상화 약속도 했고…… 지금은 감감무소식, 책임도 안 지고.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경제 폭력배다, 좀 심하게 얘기해서. 완전히 우리 사람을 놓락시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공감합니다.

○**강준현 위원** 나중에 위원장 되시면 이것 관련해서 단호하게 조치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공정위 차원에서 위법사항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현 위원** 더 볼게요.

다음 PPT 보여 줘 보세요. MBK 먹튀 사례인데 잘 아실 거예요. 웅진코웨이 인수해서 1조 원 벌었습니다. 그리고 ING생명 2조 벌었어요. 두산인프라코어 거의 1조 벌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그러네요.

○**강준현 위원**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사모펀드 MBK가 국내 주요 산업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고려아연 잘 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강준현 위원** 지금 경영권 다툼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고려아연이 보유하고 있는 체련, 금속기술 있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렇습니다.

○**강준현 위원**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 기간산업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갖겠다고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준현 위원** 중요한 문제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강준현 위원** 심각한 거지요. 뭐 이러다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고려아연 경영권 뺏겨 버리면 어떤 상황에 도래할 수 없는 거지요, 우리나라 국가산업, 기간산업인데.

사모펀드가 오로지 돈밖에 없어요, 이분들은. 그래 가지고 MBK가 산업 보호나 아니면 기술 육성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그렇습니다.

○**강준현 위원**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비단 이게 홈플러스뿐만이 아닌 거거든요, 사모펀드가. 이게 본질은 뭐냐? 사모펀드가 국내 산업을 먹튀하는 구조적인 약점이 있다.

첫 번째 PPT 보시면 막대한 차익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먹튀하는 거예요.

예전에 론스타 사태 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강준현 위원** 외환은행을 인수해서 9년 만에 매각해 가지고 1조 4000억 원을 챙겨 나

갔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렇습니다.

○**강준현 위원** MBK도 마찬가지지요. 홈플러스 이전에도 이런 사례가 많았었어요, MBK가.

두 번째, 이분들이 늘상 하는 게 구조조정입니다. 이번에 홈플러스 폐점했잖아요. 그러면 노동자는 어디로 가요? 일자리 잃잖아요. 아까 김남근 위원님 등등 말씀하시는데 10만 명이거든요. 이것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1만 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세 번째, 이분들이 인수하면 가맹점주들한테 또 수수료를 받아요. 소상공인들 압박하는 거지요. 고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MBK를 포함한 사모펀드가.

아마도 위원장님 되시면 청문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존경하는 강민국 간사님과 상의해서, 지금 MBK 사태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청문회 할 수도 있어요. 국정감사 때 또 다룰 수도 있어요. 위원장님 되시면 철저하게 분석해서 앞으로 대안 마련하셔야 됩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준현 위원** 끝으로 사후에 지적하고 처벌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예방책이 중요하거든요, 예방책. 정책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제가 의원실에서 예방책이 뭔지 서면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외국 자본이라 하더라도 국내 공정거래 제도를 준수하도록 제도개선과 법집행을 지속하겠다’ 굉장히 노멀한, 굉장히 원론적인……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너무 원론적인 것 같습니다.

○**강준현 위원**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강준현 위원** 이런 대답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집행하겠습니다’ 이거 아무나 하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철저하게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예방책 마련……

○**강준현 위원** 아실 거예요. MBK 김병주가 우리 재계 순위 1위입니다. 아마 국민들 모를걸요? 삼성 이재용보다 돈 더 많아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알겠습니다.

○**강준현 위원** 그 돈 14조 어떻게 벌었을까요? 정말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을까요, 이 양반이? 돈 놓고 먹튀하고 이렇게 소상공인들 아프게 해 가지고 다 번 돈이에요.

위원장 되시면 좀 더 구체적이고 정교한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청사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강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강준현 위원님 말씀에 붙이면 강민국 간사님하고……

강준현 간사님!

○**강준현 위원** 예.

○**위원장 윤한홍**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저는 국정감사 전에 MBK 청문회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국정감사 기간에 하게 되면 또 우리가 일정을 뺏길 수 있으니까 두 분이 좀 상의해서 국정감사 전에 할 수 있도록 한번 의논해 봐 주세요.

○**강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리고 김재섭 위원님 질의하셔야지요.

존경하는 김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섭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체납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도 그 잘못을 인정하시고 시인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랑 조금 측면을 달리해서 이번에는 탈세 의혹으로 보이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것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탈세라고 하면—탈세를 하신 건 아니겠지요, 아직까지는 의혹 수준이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할 거지만—문재인 정부에서도 7대 인사배제원칙에 해당할 만큼 굉장히 중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시면 기업들의 탈세 문제 역시도 아주 염중하게 다루실 텐데 후보자님 본인 스스로가 탈세 의혹이 있다라는 것은 후보자 자격으로서 당연히 문제 제기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보니까 5년간 54개 기관에서 82차례 수령한 금액이 총 1억 9254만 원이더라고요. 거의 2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셨어요. 연평균으로 하면 이게 한 38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기타소득들을 계속 받아 오신 건데……

(영상자료를 보면)

첫 번째 PPT를 좀 보시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기타소득을 받아 오셨지요? 맞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맞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이라고 봐야 되는데 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시고, 기타소득으로 해서 어떤 세제상의 이득을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저는 종합소득세의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액을 주는 기관에서 그것을 정해서 주는 것을 그대로 사용했고요. 거기에 오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재섭 위원** 보통, 그런데 제가 약간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저도 과거에 글도 좀 쓰고 방송도 좀 하고 하면서……

후보자님도 글을 많이 쓰셨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렇습니다.

○**김재섭 위원** 강연도 많이 하시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처지였는데 당시에 꼭 한 군데는 물어보거든요, ‘기타소득으로 신고할까요, 사업소득으로 신고할까요?’ 단 한 군데라도 그걸 물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시면 2020년에는 서울대학교 외 17군데, 21년에는 24군데, 17군데, 12군데, 사실 굉장히 많은 기관들에서 말하자면 소득에 대해서 후보자님한테 단 한 번이라도 물어보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런 질문을 여기저기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구나 하고 저도 나중에 알아차리고 사업소득으로 신청하고 이런 적도 있었기 때문에 후보자님께서 긴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여러 기관에서 소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사실 납득은 잘 안 됩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저는 그런 질문을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김재섭 위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게 주변에서라도 한 번쯤은 누군가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전혀 사례를 찾아보시지 못하셨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히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도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렇게 되는 경우에 당연히 이렇게 사업소득으로 안 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을 누리셨던 분들이 분명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나중에 국세청에 뭉텅이로 과세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 과징금으로 해 가지고 막 2억, 3억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그분들이 당연히 국세청에 소송을 할 거고요. 재판에서 다뤄 보자고 얘기할 거고 제가 아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졌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님이 인지를 하셨든 안 하셨든 이것은 탈세 의혹으로 볼 수가 있고 재판부에서는 아마 탈세라고 보실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제가 보기야 지금……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한번 전화해 보셨나요?

○**김재섭 위원** 예, 저는 전화해 봤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런데 어떤 답변이 왔나요?

○**김재섭 위원** 뭐 후보자님께서 대부분 개인정보를 동의를 안 해 주셔 가지고 제가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학협력단에서 실수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김재섭 위원** 실수를 안 했겠지요. 왜냐하면 후보자님한테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어봐서 해 달라는 대로 했을 테니까 당연히 그쪽은 실수 안 했을 거고……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질문 받은 적 없고요. 산학협력단에서 정해서 이렇게 지급되었고요. 대부분의 금액이 지금 산학협력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몰랐다고 하시더라도 나중에라도 과세가 되시면 성실하게 납부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그래야지요.

○**김재섭 위원** 그리고 개인정보 얘기 나오니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연구보조금을 받으신 게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더니 영수증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해요.

그런데 저희가 서울대학교에—PPT가 있네요—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연구보조비 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일체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주지 못했던 이유가 후보자님께서 동의를 안 해 주셔서 못 했습니다. 저녁 식사 전에 요청을 해 가지고 후보자님께서 연구보조비 사용하신 그 내역 저희가 좀 받아 볼 수가 있을까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아까 원래 문의하신 것은 연구보조금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연구보조비는 산학협력단에서 연구과제 예산에 있는 연구보조비입니다. 그래서 두 항목이 좀 달라서, 답변할 때 했던 거는 연구보조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김재섭 위원** 그러면 제가 저 자료라도 요청을 드리면 주실 수 있는 겁니까? 개인정보 동의만 해 주시면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저희가.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이 과제들을 저 혼자 수행하는 게 아니고요, 저와 공동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영수증을, 연구보조비 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면 공동연구자들의 사용내역도 제출되기 때문에……

○**김재섭 위원** 그런데 그거는 이름을 좀 가려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같아……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연구보조비와 관련해서 타인들의 개인정보를 지켜야 할 만한 내용들이 크게 있을지도 모르겠고 금액도 제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맞습니다. 이것을 제가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재섭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탈세 의혹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드리게 되면 사실 후보자님 말씀하신 대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꽤 오랜 시간 동안 반복이 되어 있고 특히 제가 확인한 정보는 산학협력단은 최근 5년까지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것은 사실 저희도 확인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제가 보는 이 5년치만 해도 기타소득이 2억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시고 적어도 스스로 세금 납부를 성실히 이행을 하는 상황에서 5년간 2억, 그러니까 1년에 몇천만 원 수준의 기타소득을 얻었다고 한다 그러면 으레 여기에 대해서 과세가 좀 나올 수 있겠다, 내가 내야 될 세금이 높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문제의식 정도는 갖고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 잘 모르셨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의식이 없어서 죄송하고요. 제 생각에는 산학협력단에서 분류를 잘못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리고 제가 아는데 만약에 후보자님께서 그냥 ‘기타소득으로 해 주세요’ 하면 거기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실수가 없는 거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저는 한 번도 산학협력단에 그런 요청을 한 적도 없고요.

○**김재섭 위원** 그러니까 산학협력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밖에 50개의 여러 기관들에서 급여를 받으셨으니까 그 기관 중에 한 군데 정도, 제 경험상 그리고 주변의 경험상

한 번 정도는 그것을 물어봤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죄송합니다.

○**김재섭 위원** 아무튼 저 자료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김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후보자님,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요즘도 주식 투자를 하시나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주식 투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윤한홍** 그러니까요. 아까 내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매수를 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주식이 삼성생명 또 삼성전자, 카카오 맞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풀무원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풀무원도 있고?

제가 조금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죄송하지만 제가 주식 투자를 많이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러니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기업을 정말 혐오하지 않아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저는 대기업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런데 대기업을 거의 죄악시하던데……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칼럼에도 보니까 ‘대기업은 약탈적 행동으로 힘의 불균형을 재생산한다’ 이런 칼럼들 많이 봤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위원장님, 대기업이 아니고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저는 비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렇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위원장 윤한홍** 제가 조금 이게 의아해요. 왜냐하면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 기업이 더 크게 성장하라고 밀어주는 것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런데 그동안 칼럼을 쭉 보면 다들 지금 걱정하는 게 대기업에 대한 반감 이런 것을 칼럼에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주식은 대기업 주식을 사고 있어 가지고 내가 의아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생각으로 사셨는지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또 궁금했던 게, 위원님들이 지적을 다 하셨는데 조금 안 됐나 싶어서 물어보는데,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있었어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돈을 나눠 주면 소비가 늘면 경제가 성장한다 그런 개념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위원장 윤한홍 그런데 2018년에 칼럼 쓴 걸 보니까 소득주도성장이 시장경제를 무너뜨린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대한민국 경제 체질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장기적인 정책기조다, 지금도 그리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래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성장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위원장 윤한홍 빚도 400조를 쓰고 엄청나게 풀었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 시절의 그 경제정책이 잘됐다고 지금도 생각하세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돈도 풀고 분배를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게 엄청난 물가 상승이라든지 기업에 부담을 줘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지금도 소득주도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한홍 아니, 경제학자들이 성장이 이루어진 다음에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게 선순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돈을 나눠 줘서 소비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서 성장을 해야 된다, 거꾸로 가는 정책, 그게 문재인 정부 때 비판을 받았잖아요. 지금도 그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시나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돈을 푸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분배를 개선해서……

○위원장 윤한홍 그러니까 분배를 개선하려면 기업이 일어나서 성장을 통해서 분배가 개선돼야 되는 거지 성장 없이 그냥 돈만 나눠 주면 소비가 늘어나서 분배가 개선된다 이게 소득주도성장이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러니까 세금 재분배를 강화해서 분배를 개선하면 양적 완화를 꼭 합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적 완화……

○위원장 윤한홍 제가 볼 때는 교수님 같은 분들의 주장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나온 것 아닌가.

아마 소득주도성장을 지금도 찬성하는 사람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왜? 문재인 정부 5년 기간에 이게 실험이 실패했다고 다들 인정하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위원장님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소득주도성장은 우리가 OECD에서 오랫동안 주장했던 포용적 성장의 한국적인 형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런데 그 당시에는 경제학자들 대부분이 말이 안 된다고 다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장이 일어나서 소득이 생겨야 소비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것 없이 그냥 세금 거두어 가지고 빚을 내서 돈을 나눠 줘서 돈을 쓰게 해라, 그러면 소비가 일어난다 그게 일회성에 불과한 거지 지속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다들 비판을

받았던 건데 제가 우리 후보자님 보니까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신 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메커니즘은 저도 동의합니다,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위원장 윤한홍**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공직에 들어오셨으니까 다시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런 것도 있고 또 보니까 재정준칙주의 비판도 있어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위원장 윤한홍** 재정준칙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예?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무리한 재정준칙은 필요하지 않다,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고요.

○**위원장 윤한홍** 지금도 그렇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위원장 윤한홍** 막 빚을 내서 써도 되네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지금 한국은 재정 여건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래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위원장 윤한홍**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물론 빚을……

○**위원장 윤한홍** 그렇게 하려면 세금을 내고 경제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기업을 봄업을 해 줘야 되는데……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맞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한편으로는 기업을 지금 옥죄고 기업에 어마어마한 압박을 주잖아요,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개정이나 법인세 인상이나. 지금 서로 모순되는 걸로 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엄청나게 강한 주장을 그동안했던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오니까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투자가 안 되는 거지요.

거기다가 지금 미국 가서 전부 투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투자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투자 여력도 없어요, 국내에는. 그러면 우리 젊은 친구들 일자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복합적으로 잘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데 후보자의 그동안 생각을 보면서 다들 걱정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냥 후보자를 단순히 개인적으로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들은 아닐 거예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균형을 잘 잡아 주셔야 돼요, 균형을 잘 잡아 주셔야 되고……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아까 조직 확대를 위해서 인력 증원한다는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이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 인력을 중원한다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을 잘하게 된다 그건 아니에요. 인력이 적어도 일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사람만 늘리면 일을 잘하게 된다? 저는 공무원 출신이지만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공무원 엄청 늘렸어요.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너무 많이 늘려 가지고 그게 또 정부의 재정에 부담이 됐는데 일을 잘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공정위도 직원이 늘면 조직의 파워는 커질 수 있지만 일을 잘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그런 부분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이고.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래서 그동안에 후보자께서 쓰신 많은 칼럼들을 보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잘 잡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질의 겸 당부 겸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보충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강민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박상혁 위원** 마치시지요, 뭐.

○**위원장 윤한홍** 아니,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강민국 위원님 1분 주세요.

○**이양수 위원** 뭘 마쳐요? 지금 3차 질의해야지요. 여당 되더니 완전 자세 바뀌었네.

○**위원장 윤한홍** 아니, 잠깐만, 1분만.

○**강민국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도 있으시고 지금 홈플러스 사태나 또 더군다나 롯데카드 사태까지, MBK 청문회 이런 부분 그리고 앞서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SK텔레콤 2300만 유출 사태, 이것 사실 지금 유출이 확인된 항목만 해도 휴대전화번호 또 IMSI(유심카드 사용자 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그리고 CDR(통화상세기록), 그리고 IMEI(단말기 고유식별번호)까지 지금 굉장히……

사실 외국 같으면 이것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SK그룹의 태도는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벌과금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거대 법률단을 만들어서 대항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반성을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존경하는 강준현 간사님하고 의논을 해서 곧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하는데 그때도 공정거래위원장님이 입장을 가지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여러 가지로.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그러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래서 전체회의를 저희들이 해서 사실 청문회 의결해야 되는데 지금 정족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강준현 간사님하고 좀 의논해서 언제 할지……

위원장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예.

유영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필요합니까?

1분 드리세요.

○柳榮夏 위원 제가 아까 후보자님한테 부동산계약서 세종시 것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아마 입주권을 사신 것 같아요. 입주권을 사셨는데, 제가 그런데 보니까 2009년도 9월 15일 날 경기도 의왕의 아파트를 4억 5200에 전액 현금 주고 사셨어요, 대출이 없고.

그다음에 2년 뒤인 2011년 11월 25일 날 이 매매계약, 아마 입주권 딱지라고 그러지요. 그걸 매매계약 체결한 다음에 2014년 3월 20일 날 등기가 넘어왔는데 이게 5억 1230만 원입니다. 불과 한 이삼 년 사이에 현금이 한 9억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이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 자료 다시 한번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보충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하실 분 계시면 의사표시를 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양수 위원 왜 안 해요?

○박상혁 위원 그만하시지요.

○위원장 윤한홍 민주당은 안 하시고. 그러면 여기는 추가질의를 김상훈 위원님하고……

○이양수 위원 저하고……

○위원장 윤한홍 두 분만 하시고, 그러면 추가질의를 하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추가질의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준현 위원 예.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부터 추가질의 3분 하십시오.

○김상훈 위원 후보님, 제가 질의보다는 당부를 좀 드려야 되겠어요.

후보님 보면 분배정의 좋고 그다음에 대기업을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척결하는 그런 대상으로 또 많이 발언도 하시고 인식도 그런 것 같은데, 파이를 나누는 건 좋아요. 그런데 현재의 파이를 나누는 것보다는 파이를 더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징벌적 처벌을 운운하면서 기업들 먹살을 잡고 혼들면서 목 조르는 공정거래위원회 되면 안 돼요.

기업은 불확실한 미래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을 투자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주체입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기업의 본질과 가치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업들 먹살 쥐고 혼들고 오히려 그 위에서 갑질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이양수 위원 오늘 후보님 아까 송구도 하고 또 사과도 하고 또 사죄도 하셨어요. 그동안은 교수님으로서 자연인으로 사셨지만 이제는 임명을 받으면 공공기관 수장이 되는 거니까 그것에 걸맞은 도덕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사셔야 될 것 같고……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이양수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2차 질의 때 마지막에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그동안의 후보자님의 여러 말과 글 그것에 의해서 많은 기업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다고 합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잘못한 사람들은 부들부들 떨고 불공정한 사람들은 부들부들 떨고—앞으로도—공정하게 열심히 일해서 공정한 기업을 계속 영위하는 사람들까지 어렵게 만들지는 않아야 되는 것이 바로 공정거래위원장 자리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런데 후보께서 위낙에 소신과 이념이, 어떤 그런 것들이 강하다 보니까 공정하게 열심히 잘하는 기업조차도 영향을 받을까 굉장히 염려들을 많이 해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지금 온라인플랫폼, 온플법에 관해서도 아까 제가 그냥 법적으로 사실 어떤 입점 업체들이 요구할 때 플랫폼사업자들이 응할 수 있게 법적인 그런 조치만 할 것이냐 아니면 응하지 않으면 처벌까지, 제재 수단까지 할 것이냐 했을 때 후자를 선택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사실 자칫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공정한 플랫폼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요구를 다 응하다 보면 문을 닫아 버리는 플랫폼사업자들도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법을 시행할 그런 쪽으로 할 때.

그렇다면 공정거래위원장님이 공정거래위의 직원들과 같이 일을 할 때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서, 신은 아니지만 정말 아주 공정하게 약자를 보호하고 또 누가 약자인지를 분명하게 가려야 됩니다. 노조의 탈을 쓴, 폭력 쓰시고 이런 분들은 사실 약자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분들을 제재를 해야 되고 또 자본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힘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선한 의지와 그다음에 지혜를 가지고서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업계의 우려가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고 정말 현명한 기관장, 현명한 조직이 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이것 하나만 마지막으로, 아까 질문 답변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구글에게 정밀지도 반출은 양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신 건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때 기자와 대화했던 정확한 취지는 만약에 구글 정밀지도정보 양보와 플랫폼법 둘 중 하나를 양보해야 한다면 플랫폼법이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구글 정밀지도를 양보할 수 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맞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왜냐하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플랫폼 포털사이트가 구글이라든지 이런 게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그렇게 못 하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우리나라는 국내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더 잘되고 있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구글 정밀지도가 구글에 반출이 되면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경쟁력이 좀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맞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런 부분까지 잘 반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 이야기를 자꾸 많이 해서 오늘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국내에서 대기업은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국내에서 비판도 하고 반대도 많이 하는데 해외, 지금 글로벌 경제 시대잖아요. 국내 대기업이 글로벌 경제 시장에 나가 가지고도 과연 몇 개가 대기업으로서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셔야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게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으로 후보자님, 마무리 발언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존경하는 윤한홍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관심과 격려, 엄중한 질책과 고견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는 제게 있어 그간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었던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기대와 우려 그리고 진심 어린 조언을 통해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직무가 지닌 무게를 다시금 절감하였습니다.

저에게 공정거래위원장의 소임을 맡을 기회를 주신다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늘 기억하면서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 확립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명을 실현하는데 있어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임하며 국회와도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청문회 준비와 진행을 위해 많은 애를 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늘 질의하신 우리 위원님들 말씀들 각별히 잘 유념하셔서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주병기** 예.

○**위원장 윤한홍** 이상으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서는 간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날짜를 알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은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도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주병기 후보자를 대상으로 업무수행 능력, 자질 및 도덕성 그리고 공정거래 관련 정책 현안에 대한 전문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애써 주신 정무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문회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우리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산회)

---

○**출석 위원(24인)**

장민국 강준현 김남근 김상훈 김승원 김용만 김재섭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상혁 박찬대 신장식 유동수 유영하 윤한홍 이강일 이양수 이인영 이정문  
이현승 추경호 한창민 허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최기도

○**출석 공직후보자**

주병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유성숙  
기획조정관 선중규  
경쟁정책국장 신동열  
감사담당관 노태근  
대변인 정희은